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2701-01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총괄)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요 약

연구 배경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2019)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보건·복지, 교육, 지역개발, 일자리 등 분야별 정책을 통합·조정하여 농촌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종합계획이다. 「활력 있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 구현」을 비전으로 도·농 간 격차 완화를 중점 추진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4년 차인 2018년에 제3차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4차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 기본계획에 입각한 삶의 질 정책들이 농어업인 삶의 질 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점검한다. 제3차 기본계획 추진상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와 정책 분야를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하여 삶의 질 정책 어젠다를 도출한다. 농촌의 현실과 농어업인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정책 과제를 도출한다.

연구 방법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삶의 질 정책 7대 부문별 평가 분과를 구성했다. 7대 정책 분과(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종합 평가단을 운영했다. 부문별로 특성을 고려해 다시 3~4개 정책군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정책군 단위에서는 제3차 기본계획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을 ‘정책 형성, 정책 집행, 정책 성과’의 지표로 평가했다. 주민 수요와 시의성을 고려하여 기존 과제 확대, 중단, 축소 등을 판단하고, 신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부문별 성과 목표 달성도 및 정책군 단위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분과별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평가 과정에서 활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3차 기본계획 추진실적 분석자료다.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보고서 및 실적자료, 삶의 질 170개 세부 과제별 투융자 계획 및 집행 실적,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 농어촌 정주민족도 조사 결과 등이 해당된다. 삶의 질 관련 기존 조사·연구 및 정부 부처 자료를 분석했다.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 결과, 지역 발전지수, 복지실태조사 등 객관적 지표가 해당된다. 또한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정책 수요, 개선 방안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도 평가에 반영했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7대 부문별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 부문은 제3차 기본계획에서 취약계층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주를 이루어 지원 대상과 목표 대상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어촌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보건·의료 사업을 발굴하고, 읍·면·동 중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틀 속에서 농어촌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자체 사업이 발굴돼야 한다.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필수 의료의 현장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농어촌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어촌 특화 여성친화정책도 개발되어야 한다.

교육 부문은 제3차 기본계획 동안 농어촌 학교 ICT 보급, 거점중학교, 원격진로 멘토링 등 공교육 서비스 확충을 위한 사업들이 이루어졌지만 도·농 간, 지역 간의 만족도 차이는 여전히 크게 나타난다. 선별적인 농어촌 학교 지원은 선정되지 못한 학교의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학생들의 기초 학습능력과 더불어 노인들의 문해교육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전원학교 플러스 등의 사업, 통학버스 지원으로 보편적 농어촌 교육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농어촌 교육 공동체를 구현하고 지자체 차원의 지역 사회 교육 협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

립해야 한다.

정주생활기반 부문은 제3차 기본계획 동안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여건 개선 등의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농어촌 생활권 활성화 관련 사업들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인구 감소 및 과소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농촌 공간 전략 계획의 부재로 시·군 내 사업 추진이 체계적이지 못했다. 농어촌 지역 공동체를 자발적인 주체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중심지와 배후마을의 공간 전략적 관점에서 통합적인 사업 추진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초 생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제3차 기본계획의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사업은 중앙정부 공모 형태로 추진되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가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부처별 유사 사업간 통합 운영이 필요하며, 인프라 중심의 사업 추진 방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6차산업 고도화를 위해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는 추진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농어촌 지역의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간 협업과 농촌형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복지·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 연계한 청년층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농촌관광과 관련한 법·제도 정비도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문화·여가 부문은 제3차 기본계획 동안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과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사업으로 소외지역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여전히 도·농 간, 계층 간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농어촌에 한정하거나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사업 발굴은 미진했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 프로그램, 인적 기반 등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능동적 문화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인력양성 사업도 확대되어야 한다. 전통·향토 문화 자원 관련 사업을 4차 기본계획에 확대 포함시켜야 한다. 농어촌 주민의 여행을 증진하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도 개발되어야 한다.

환경·경관 부문은 제3차 기본계획 동안 정량적인 성과는 있었으나 일부 정책의 보완과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환경 조성에서는 축산분뇨 이외에 일반적인 관행 농업에 대한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주민 자율적인 경관보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확대 추진돼야 한다. ‘농촌경관 보호지구제도’, ‘공익형 직불제’ 등의 도입이 논의돼야 한다. 생태관광의 측면에서 청년 및 예비 귀촌인의 참여를 장려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생활환경 복원 및 재생을 위한 신규 정책 사업도 발굴돼야 한다. 폭염, 미세먼지 등 최근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제3차 기본계획 안전 부문은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와 관련하여 세부 과제가 일부 자연재해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문제가 있었다. 안전한 영농·영어활동 기반 조성에서는 농어업인의 신체나 생명과 관련 없는 물적 재해에 국한되어 있었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안전 부문의 세부 과제를 다양화하고 사업을 재조정해야 한다. 자연재해가 산불, 산사태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한파, 폭염, 가뭄 등의 신종 재해에도 대비해야 한다. 농작업 안전과 관련해서는 상위 계획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농어업인 직업성 질병을 규명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전체적인 추진체계와 관련한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개선 과제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질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정책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본 위원회를 정책 의제 논의 중심으로 운영해야 하며, 분과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정책 의제 발굴 기구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개편 및 실효성이 제고돼야 한다. 농어촌 서비스기준 미달성 지역 등 삶의 질 여건이 특히 열악한 낙후 지역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 사업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활성화가 필요하다. 매년 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 하고 관계부처가 삶의 질 위원회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환류에 반영되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 분권 강화에 따라 시·도 및 시·군 차원의 삶의 질 정책의 실행 수단이 확

보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농촌협약과 연계하거나 삶의 질 특별법 개정 등으로 지자체의 정책 추진 기반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차 례

제1장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 방법 4

제2장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7대 정책 부문별 평가 결과

- 1. 보건·복지 부문 9
- 2. 교육 부문 39
- 3. 정주생활기반 부문 51
- 4.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71
- 5. 문화·여가 부문 95
- 6. 환경·경관 부문 114
- 7. 안전 부문 135
- 8. 7대 정책 부문별 평가 결과 요약 150

제3장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 결과 및 과제

- 1.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성과 175
- 2. 삶의 질 정책 추진기반 구축과 한계 187
- 3. 농어촌 주민 삶의 질 정책 추진 여건 변화 191
- 4.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개선 과제 195

부 록 199

참고문헌 217

표 차례

제1장

- <표 1-1>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부문별 정책군과 세부 과제 수 3
- <표 1-2> 정책군 평가 주요 활용 자료 7

제2장

- <표 2-1> 보건·복지 부문 정책과제 10
- <표 2-2> 제3차 기본계획상 보건·복지 평가지표 11
- <표 2-3> 보건·복지 부문 농어촌주민 정주민족도 조사 결과 비교 11
- <표 2-4>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변화 12
- <표 2-5>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성과 목표 52
- <표 2-6>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연차별 성과지표 달성도 53
- <표 2-7> 정주 생활 부문 만족도 조사 결과 57
- <표 2-8> 농어촌 정주 공간 활성화 정책군의 사업 58
- <표 2-9> 6차산업화 관련 정책군의 정책 목표와 세부 사업 76
- <표 2-10> 농어촌 일자리정책군 추진 사업 목록 80
- <표 2-11> 농어촌관광 정책군 추진 사업 목록 84
- <표 2-12>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문화·여가 부문의 성과지표
달성 목표와 실적 97
- <표 2-13> 문화·여가 정책 과제 중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98
- <표 2-14> 문화·여가 정책 과제 중 성과가 가장 우수한 정책 98
- <표 2-15> 농어촌주민의 문화·여가 부문 주관적 만족도 99
- <표 2-16> 농어촌 지역의 문화·여가 여건 만족도 99
- <표 2-17> ‘생활 속 문화참여 확대’(5-2) 정책군의 사업별 목적, 내용, 목표 (총괄) .. 105

<표 2-18>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 현황	107
<표 2-19>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5-2-2) 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 현황 ·	107
<표 2-20>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5-2-3) 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 현황	107
<표 2-21>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환경·경관 부문의 성과 목표	116
<표 2-22>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환경·경관 부문의 연차별 평가지표 달성도 ·	117
<표 2-23> 삶의 질 7대 부문별 정책 중요도 및 우수성 설문	117
<표 2-24> 환경·경관 부문의 정책군별 정책 중요도 및 우수성 설문 ·	118
<표 2-25>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인 관리 정책군의 세부 사업 및 목표, 성과 및 실적	120
<표 2-26>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정책군의 세부 사업 및 목적 ·	121
<표 2-27>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정책군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122
<표 2-28>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 환경 조성 정책군의 세부 과제 및 목적 ·	123
<표 2-29> 친환경에너지 보급 정책군 내 세부 사업 및 담당 부처	125
<표 2-30> 친환경에너지 정책군의 성과지표	126
<표 2-31> 친환경에너지 정책군 주민 만족도	126
<표 2-32> 제3차 기본계획의 안전 부문 평가지표	135
<표 2-33> 농어촌 서비스기준 안전 부문 핵심 항목 이행실태의 변화 ·	136
<표 2-34> 보건·복지 부문 세부 사업 평가 결과	152
<표 2-35> 교육 부문 세부 사업 평가 결과	154
<표 2-36> 정주생활기반 부문 세부 사업 평가 결과	157
<표 2-37>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세부 사업 평가 결과	160
<표 2-38> 문화·여가 부문 세부 사업 평가 결과	165
<표 2-39> 환경·경관 부문 세부 사업 평가 결과	169
<표 2-40> 안전 부문 세부 사업 평가 결과	173

제3장

<표 3-1> 삶의 질 정책 7대 부문 중요도 및 성과 평가	176
<표 3-2> 삶의 질 정책 7대 부문 주요 정책군에 대한 평가	177

<표 3-3>	도시·농촌 주민의 포괄적인 삶의 질 만족도 평균점수 변화 ..	179
<표 3-4>	부문별 정주민족도 결과 증감	179
<표 3-5>	삶의 질 세부 정책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2018년)	180
<표 3-6>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182
<표 3-7>	부문별 주요 성과 목표 달성정도	184
<표 3-8>	연도별 삶의 질 정책 투융자 실적	186
<표 3-9>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추진기반 강화 이행 실적	190
<표 3-10>	향후 추진할 삶의 질 향상 역점 과제 예시	198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7대 정책 부문별 목표	2
----------	----------------------------------	---

제2장

<그림 2-1>	교육 부문 정책 목표 및 주요 과제	50
<그림 2-2>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목표 및 주요과제	52
<그림 2-3>	과소 마을 분포 변화(2010년, 2015년)	55
<그림 2-4>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문화·여가 부문의 목표와 주요 과제	96
<그림 2-5>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환경·경관 부문의 목표 및 주요 과제	115

제3장

<그림 3-1>	지역별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률(평균)의 변화	183
----------	---------------------------------	-----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2015~2019)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 5년 단위 법정계획임.
 - 보건·복지, 교육, 지역개발, 일자리 등 분야별 정책을 통합 조정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종합계획
 - 「활력 있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 구현」을 비전으로 도·농간 격차 완화 중점 추진
 - 특히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안전 부문 신설로 농어가 소득 증대와 농어촌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및 자연재해, 범죄·사고예방 대책 대폭 강화
 - 보건·복지, 교육, 정주기반 등 7대 정책 부문에 걸쳐 180여 개 과제에 46조 5천억 원 투융자(18개 부처·청 협력)

〈그림 1-1〉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7대 정책 부문별 목표



-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는 제3차 기본계획 4년 차에,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4차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 제3차 기본계획 기간 매년 시행계획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제3차 기본계획 전체 과제에 대한 개별 사업 단위 평가를 수행하였으나, 제3차 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평가는 실시되지 못함.
 -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제3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7대 정책 부문별 추진 실적, 정책 추진과정 상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들에 대한 총괄적 평가 필요
 - 삶의 질 기본계획에 입각한 일련의 삶의 질 정책들이 농어업인 삶의 질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필요

〈표 1-1〉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부문별 정책군과 세부 과제 수

정책 부문	정책군	세부 과제 수			
		2015	2016	2017	2018
보건·복지	농어업인에 특화된 사회안전망 구축	6	6	4	4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및 의료취약지 해소	8	10	10	10
	대상그룹별 복지 서비스 강화	11	11	11	11
	농어촌 복지전달체계 구축	4	4	4	4
교육여건	농어촌 특성 반영 공교육 서비스 확충	5	3	3	2
	농어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학교 활성화 주체 육성	4	4	4	4
	농어촌 학생 복지 확대	5	4	4	4
	농어촌 지역과 학교의 연계 강화	3	3	3	3
정주생활기반	정주공간 활성화 및 농어촌 생활권 구현	8	9	8	8
	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 확산	7	8	8	8
	농어촌의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8	7	7	5
	농어촌 고령자 등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	4	4	3	3
경제활동·일자리	향토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기반 마련	12	10	10	9
	농어업인 창업 촉진 및 사업화 지원 강화	5	5	5	5
	농어촌 관광 체계화 및 품질제고	13	14	14	13
	농어촌 일자리 지원	6	5	5	4
문화·여가	문화·여가 인프라 및 인적 기반 구축	10	10	10	10
	생활 속 문화참여 확대	3	3	3	3
	소외지역 문화·여가 지원 강화	5	5	5	5
	전통·향토문화의 전승·활용	2	2	2	2
환경·경관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7	8	8	8
	농어촌 주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7	7	7	7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환경 조성	13	14	13	12
안전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8	8	8	8
	재해에 안전한 영농활동 기반 조성	10	10	10	10
	생활안전 사각 지대 해소	4	4	4	4
	안전한 보행·교통 환경 조성	4	4	3	3
계	27개 정책군	182	182	176	169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시행계획 추진실적, 각 년도.

- 제3차 기본계획 추진상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되어야 할 개선 방향 및 과제 제시
 - 제3차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삶의 질 개선 성과 평가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 및 정책 분야 도출
- 농촌의 특수성, 시의성을 고려한 삶의 질 향상 정책 제안
 -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한 삶의 질 정책 어젠다 도출
 - 농촌의 현실과 농어업인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삶의 질 정책 과제 제시

2. 연구 방법

2.1. 종합평가 방식

- 삶의 질 정책 7대 부문별 평가 분과 구성
 - 7대 정책 분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단 운영
 - 분과별 평가 보고서 작성
- 삶의 질 정책 7대 부문별로 3~4개의 정책군으로 구분하여, 각 분과별 평가 수행
 - 정책군 단위별 제3차 기본계획에서 추진되었던 사업들을 정책 형성, 집행, 성과 창출 단계로 구분하여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
 - 정책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정책군별 새로운 정책 어젠다 제시
 - 주민 수요와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과제의 중단·축소 등을 판단하거나, 신규 정책 과제를 제시
- 정책군 단위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분과별 평가 보고서 작성
 - 정책군 단위 평가의 결과 종합과 함께, 각 정책 부문별 성과 목표 달성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 평가 보고서 작성

- 정책 지표에 맞추어 정책군별 평가를 진행하되, 세부 지표는 정책군별 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 정책 집행, 성과와 관련해서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현장 사례들을 제시

2.2. 정책군별 평가 내용 및 지표

① 정책 형성

- 정책 목표 합리성 및 목표-수단 연계성
 -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는가?
 - 정책군에서 제시한 목표와 부합하는 정책 수단을 갖추었는가? 또는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이 제시되었는가?

② 정책 집행

- 전반적인 정책 집행 실적
 - 계획 대비 차질 없이 정책이 집행되었는가?
 - 특히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책 집행이 이루어졌는가?
- 정책 집행 과정
 - 효과적 정책 집행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었는가?
 - * 중앙정부의 정책 홍보 및 확산 작업
 - * 중앙정부의 지자체 애로사항 해소 노력, 정책 지원 등 피드백
 - 정책 취지에 맞추어 지자체 또는 현장에서 정책이 차질 없이 집행되는가?

- 정책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지자체 및 현장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가?
 - * 지자체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중간지원조직 육성, 관련 정책 수단 연계 추진, 주민 참여 및 의견 수렴 등

③ 정책 성과

- 정책 목표 달성 여부
 - 정책군별로 제시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정책 추진으로 인한 성과 및 파급효과
 - 어떠한 정책 성과와 파급효과가 나타났는가?
 - * 주민 만족도 향상
 - *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인식 변화
 - * 주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 개선 정도(소득, 생활편리성 등)
 - * 사업 수혜자 증가
 - * 기대한 제도 개선 여부
 - * 현장의 사업 주체 형성
 - * 지속적 정책 추진을 위한 (중앙 및 지방) 추진체계 형성
 - * 연계 정책 수단의 발굴 및 확산

2.2. 정책군 평가 방법 및 활용 자료

- 제3차 기본계획 추진실적 분석
 -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보고서 및 실적 자료
 - * 세부 과제별 평가 보고서, 지역평가 보고서, 현장 모니터링 보고서 등

- 삶의 질 170개 세부 과제별 투융자 계획 및 집행 실적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및 농어촌 정주민족도 조사 결과
 - 삶의 질 위원회 운영 실적(분과위원회 개최 등) 및 관련 자료
- 삶의 질 관련 기존 조사·연구 및 정부부처 자료 분석
-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 결과, 지역발전지수(RDI), 복지실태조사 등 객관적 지표
- 농어촌 주민 대상 정책 수요, 개선방안 등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 KREI 리포터, 통신원 대상 설문조사

〈표 1-2〉 정책군 평가 주요 활용 자료

구분	평가 자료
정책 형성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목표, 성과지표, 추진체계
정책 집행	제3차 기본계획 세부 과제별 투융자 실적
	삶의 질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보고서
	삶의 질 시행계획 지역평가 결과 보고서
	삶의 질 시행계획 주요 사업별 현장 조사 보고서
	삶의 질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실적
정책 성과	정주민족도 조사 결과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농어촌 복지실태 조사 결과
	지역발전지수
	삶의 질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보고서
	기타 통계 자료

제2장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7대 정책 부문별 평가 결과

1. 보건·복지 부문

1.1. 보건·복지 부문 전체 평가 결과

1.1.1. 정책 목표 달성도

□ 정책 목표

-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보건·복지 부문의 목표는 농어촌 보건·복지 서비스 질 제고와 복지 체감도 증진임.
 -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과제는 ①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②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및 의료취약지 해소, ③ 계층별 복지 서비스 강화, ④ 농어촌 복지전달체계 구축임.

〈표 2-1〉 보건·복지 부문 정책과제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및 의료 취약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강화 · 농어업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원 개선 · 농업인 중층적 노후안정 지원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역량 강화 ·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 사각 해소 · 공공보건의료 시설·장비 현대화 · 소외 보건서비스 강화
계층별 복지 서비스 강화	농어촌 복지전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가구 자립 지원 · 아동·청소년 복지지원 확대 · 여성친화 사회 조성 및 여성 역량 강화 · 다문화 사회통합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복지 지원단 기능 강화 · 보건·복지 연계 지원 · 거버넌스, 민간 조직 공조 강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2014).

□ 정책 목표 달성도

- 농지연금 가입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농어촌 사회안전망이 강화된 반면, 의료·보육 인프라 및 서비스 확충은 부족하며, 영유아 보육 시설 역시 부족하고, 보건·복지 만족도는 정체되는 현상을 보였음.
 - 농지연금 가입자 수는 ('14) 3,957명에서 ('17) 8,631명으로 증가함.
 - 내과, 한방과 등 중요과목 진료가 가능한 시·군 비율은 ('14) 76.8%에서 ('17) 71.7%로 감소함.
 -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 비율은 ('14) 74.1%에서 ('17) 71.1%로 감소함.
 - 영유아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읍·면 비율은 ('14) 71.0%에서 ('17) 69.6%로 소폭 감소함.
 - 농어촌 보건·복지 만족도(10점 만점)는 ('15) 5.91점에서 ('17) 5.80점으로 감소함.

〈표 2-2〉 제3차 기본계획상 보건·복지 평가지표

부문	성과지표	성과 목표				
		2014 (실적)	2015 (실적)	2016 (실적)	2017 (실적)	2019 (목표)
보건·복지	①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자(천명)	320	350	365	380	400
	② 농지연금 가입자 수(명)	3,957	5,206	6,783	8,631	12,000 (9,000)
	③ 응급의료시설 부재 군 지역(개)	12	12	5	4	5
	④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개소)	580	606	625	-	630
	⑤ 농어촌 보건·복지 만족도(10점척도)	5.69	5.91	5.94	5.8	-

자료: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 총괄회의 자료.

1.1.2. 삶의 질 개선 현황

- 2017년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모든 세부 항목에서 도시 주민에 비하여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낮았음.
 - 농어촌 지역의 보건·복지 항목 만족도 점수가 2016년에 비해 낮아짐. 병의원이나 약국 이용은 전년과 비슷하며, 양육보호 지원은 약간 상승하였음.

〈표 2-3〉 보건·복지 부문 농어촌주민 정주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지역	
	2016	2017	2016	2017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7.8	7.6	6.4	6.4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 서비스의 범위(종류)와 수준이 양호하다	7.4	7.3	5.9	5.8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가 잘 지원된다.	6.6	6.7	5.5	5.6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지원된다.	6.4	6.5	8.0	5.7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7.7	7.1	6.0	5.7
노인 돌봄, 보육 등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17년 신규 문항)	-	6.6	-	5.6
전 체	7.1	7.0	5.9	5.8

자료: 유은영 외(2017).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도 2017년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조사와 비슷한 경향을 보임(정도채 외 2017).
 - 진료서비스 항목의 이행실태는 2017년 결과 2014년에 비해 5% 포인트 낮아졌고, 2016년에 비해서도 2.2% 포인트 낮아졌음.
 -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노인서비스와 영유아 서비스의 이행실태는 소폭 높아졌으나 2014년 결과와 비교하면 오히려 점수가 낮아졌음.

〈표 2-4〉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변화

부문	핵심 항목	국가최소기준	2014	2016	2017	목표('19)
보건·복지	진료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과목 진료가능하다.	76.8	73.9	71.7	80
	응급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차량이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71.8	98.6	98.6	97
	노인서비스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74.1	70.1	71.1	80
	영유아 서비스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읍·면내에서 영유아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71.0	69.2	69.6	80

자료: 정도채 외(2017).

- 정주 만족도 조사와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농어촌 보건·복지 부문에서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018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에서 농어촌주민 661명 대상으로 실시한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에서 거주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만족도를 12개 문항(①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일반적 보건·의료서비스, ② 응급의료서비스, ③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서비스, ④ 노인복지서비스, ⑤ 여성복지서비스, ⑥ 영·유아 및 아동복지서비스, ⑦ 청소년복지서비스, ⑧ 장애인복지서비스, ⑨ 다문화가족복지서비스, ⑩ 농어촌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⑪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⑫ 지

역의 전반적인 보건·복지서비스 수준)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각 문항 7점 만점)에 따르면, 평균 점수가 최저가 3.95점(농어촌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이고, 최고가 4.93점(응급의료서비스)으로 나타나 만족도 수준이 중간에서 중상 수준이었음(12개 문항의 전체의 평균 점수는 4.36점).

1.2. 정책군별 평가 결과

1.2.1.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구축

□ 정책군 개요

-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군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사업이 계획되어 있음. 주요 정책과제는 취약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강화, 농어업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지원 개선, 농업인 중층적 노후안정 지원체계 강화임.
-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농어업인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 개선: ①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 단계적 인상, ② 소득수준을 고려한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및 결손 처분 확대
 - 농어업인 대상 중층적 노후 지원체계 강화: ① 농지연금 가입자의 부담 경감 및 가입조건 완화 등 제도개선, ②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경영이양직불제의 이양 대상 연령을 확대
 - 취약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강화: ①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② 농어촌 지역자활센터 지원

□ 평가 결과

가. 정책 형성에 대한 평가

<정책 목표 합리성>

- 정책군별 목표와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와의 부합성
 - 3차 기본계획의 비전 달성을 위해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이 추구하는 목표는 적정하며, 추진력 있게 설정된 것으로 평가됨.
 - 취약계층과 농어촌 노인을 위한 지원사업과 더불어 농촌 산업기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 등을 위한 두루누리 사업 등이 적절하게 포함됨.

- 성과 목표 설정의 적절성
 -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목표는 2014년 계획 수립 시점을 기준으로 적절하게 설정됨. 사회기반과 여건 및 재정 측면 등을 고려하여 성과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보임.
 - 농어업과 농촌을 대표할 수 있는 통계자료 및 실태조사가 충분하지 못함.
 - * 통계구축의 필요성 : 소득을 조사하는 농가경제조사를 제외하고는 농촌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없어 통계구축이 필요(농촌진흥청 농어촌복지실태조사는 방대한 양의 조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좋지만, 복지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 계획 및 실태조사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기본계획은 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실태조사는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원체계임. 이를 조정하고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계 구축이 요구됨.

<목표와 수단 간 연계>

- 사업(예산) 규모의 적절성
 -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정책군의 관련 예산 규모는 적절하게 편성되었음.
- 사업 추진 과정 중 신규 사업 추진 및 반영 여부
 - 제3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 속에서 취약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전환되어 2015년 하반기부터 시행됨(생계 및 의료, 주거 및 교육 급여로 분화)에 따라 이를 적극 반영함.
 - * 신규 사업 적극 발굴 필요성 :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사업은 여러 부처가 함께 운영하고 있어, 외부적 요구와 부처 필요성이 아니면 신규 사업 발굴이 미진.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자체 평가를 통해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과 부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나.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

<정책 집행 실적>

- 예산의 정상적 집행
 - 2015~2018년 시행계획 자료에 기초할 경우 예산은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었음.
- 사업 개선을 위한 노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로의 개선(2015년), 두루누리 사업 확대(2015년, 2018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제도 개선, 경영이양 직불사업 개선(2017년) 등이 추진되었음.
 - 제3차 기본계획에서 담고 있던 사업의 집행 목표는 충실히 달성되고 있음. 하지만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미진한 것으로 판단됨.

- 기본계획 기간 중 예산의 증액 여부
 - 제3차 기본계획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로 확대되었으며, 두루누리 사업 역시 그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어 관련 예산이 증액됨 (2017년 약 5천억 원 → 2018년 약 8천 9백억 원).
 - 농지연금 역시 관련 대상자의 증가와 신규상품 등록 등으로 인해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2015년 400억 → 2016년 520억 → 2017년 670억 → 2018년 920억 원).
 - * 집행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복지부, 고용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업 속에서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제도가 운영되어 사업 개선을 위한 노력은 미진한 것으로 보임. 농식품부 중심의 자체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사업 개선 필요성 제기시 부처간 협의 및 협조를 위한 과정이 요구됨 → 삶의 질 위원회 권한 강화를 통한 협의체제 구축이 필요함.

<정책 집행 과정>

- 중앙정부 정책 홍보 및 확산을 위한 노력
 -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제도에 대한 농어업 종사자 및 농어촌 주민의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정부가 많은 홍보를 진행하고, 국민의 관심도가 높았던 기초연금제도를 제외하고는 비인지층이 약 70%대에 이르고 있음.
 - 제3차 기본계획 사업 중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홍보 및 확산을 위한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부처 간 협업을 위한 노력
 - 사업 수행 과정에서도 매년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를 통해 부처 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 구속력의 한계로 관련 부처 간 협업은 대체로 소극적으로 수행되었음.

- 지자체 애로사항 해소 및 환류체계 구축
 - 제3차 기본계획, 시행계획 속에서 각 사업별로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노력하였음.
 - 하지만 업무 특성과 중앙 및 지방정부 간 관계 등으로 인해 모니터링 운영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과정은 크게 생략된 것으로 보임.
- 지자체 차원의 별도 지원체계 구축 노력
 -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관련 중앙 부처 및 지자체 평가 자료, 기타 점검·평가 자료 등을 통해 확인 시, 지자체 차원에서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지원을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다.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목표 달성 여부>

- 설정 목표의 달성여부
 - 제3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의 목표를 초과 달성함으로써 추진 과제가 충실하게 달성됨.

<파급효과 여부>

- 사회안전망 정책의 사회적 파급효과 평가
 -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강화 계획은 농어업 종사자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사회보험료(연금 및 건강) 지원은 농어업 종사자에 대한 지출 부담을 줄여주고, 노후소득 보장과 건강 보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으로 평가됨.
 - 이외에 농지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농촌 거주 노인 및 저소득층의 소득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음.

<정책 제언>

- 정부가 발표하는 사회안전망 대책이 주로 노동자, 도시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식품부 차원에서 농촌 지역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 전체 사회보장제도 틀 속에서 농촌 지역의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자체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
 - 예를 들어, 농촌 거주 차상위층 및 비수급 빈곤층(자녀와 떨어져 살고 있는 노인 및 조손가구 등)을 대상으로 수급가구와 비수급빈곤층 간 소득 격차만큼 현물서비스를 제공(긴급 구호 형태로 쌀, 의료비·교통비·난방비 등 지원)
 - ※ 노인가구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에 추가적으로 돌봄서비스 제공

1.2.2.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및 의료 취약지 개선

□ 정책군 개요

-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및 의료 취약지 해소’ 정책군은 현대화된 공공의료 체계 구축, 응급의료체계 개선,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으로 의료서비스 공백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의료 확충 및 역량강화’,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 사각 해소’, ‘공공보건의료 시설·장비 현대화’, ‘소외 보건서비스 강화’가 주요 정책과제임.
- 주요 사업 내용: ① 지역거점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지원, ②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 ③ 농어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④ 농어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해 직업성 질환 조사·연구, 예방 강화, ⑤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 시범사업, ⑥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보건·복지부), ⑦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소방청), ⑧ 분만 취약지 지원

□ 평가 결과

가. 정책 형성에 대한 평가

<정책 목표 합리성>

- 의료서비스 분포의 개선과 재조직화는 농촌 지역에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자원 확보가 어려운 농촌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과제임.
- 제3차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로는 보건의료서비스 확충의 측면에서 “응급의료기관 부재 군 지역 수”와 주민 체감 만족도 증진 측면에서 “전반적 보건의료 여건에 대한 만족도”로 설정되어 있음.
 - 보건·복지 부문의 성과지표는 상기에서 기술한 목표의 함의를 충분히 담아내는 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음. ‘응급의료기관 부재 군 지역 수’는 산출 가능성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더라도 지나치게 일부 사업에 치우친 경향이 있음.
-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을 육성하는 한편,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 및 분만의료에 대한 신속한 이송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목표 설정은 적절함.
- 분만 취약지 지원
 -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의료 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하여 분만 취약지를 해소¹하려는 목표는 적절함.

1 2015년 시행계획

<목표-수단 연계성>

- 그동안 농어촌 지역의 주요 건강문제로 ‘농부증’²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적지 않은데 반해 농작업과 주요 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미흡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였음. 이에 대한 대응으로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은 적절한 정책적 접근임.
- 그러나 이 외에 대부분의 세부 과제, 시행계획, 세부 사업은 정책 목표의 포괄적 지향에 상응하지 못하고 일부 영역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취약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해 운영비 및 전문인력(의사, 간호사)을 지원한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됨.
 -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의 성과지표로 ‘응급의료기관 부재 군(郡) 지역’을 설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응급상황 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의 성과지표로 ‘전국 펌블런스 운영대수’를 설정한 것은 응급 사각지대 해소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흡하다고 판단됨.
- 분만의료 취약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분만의료 취약지에 분만산부인과, 외래산부인과 및 순회진료 산부인과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됨. 그러나 성과 목표를 과거 실적의 추세를 반영하여 설정하는 것은 소극적인 목표 설정이라고 판단됨.

2 과도한 노동에 따른 피로 축적이 원인이 돼 농민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신체 증상을 말한다. 어깨결림, 요통, 호흡곤란 등 신체적인 증상은 물론 불면, 신경증 등 정신과적인 증상도 나타난다(네이버 지식백과 검색 결과).

나.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

<정책 집행 실적>

- 2015~2018년에 걸쳐 ‘공공의료강화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에 466,784백만 원, ‘공공보건기관시설·장비 현대화’에 236,270백만 원, ‘농어촌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확산’에 719,296백만 원,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에 7,439백만 원, ‘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에 3,630백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에 119,756백만 원을 각각 투입하였음.
 - 이상의 사업계획들은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업들인데,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을 제외하면 사업 예산이 계속 줄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 응급의료기관 지원 예산 집행은 2015년에는 계획 대비 미달하였으나, 다른 해에는 계획대로 집행되어 예산 집행 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분만 취약지 지원
 -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매년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 소요 예산은 적절히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정책 집행 과정>

- 보건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제3차 계획에 포함된 대다수 사업들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임. 그러나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은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음.

- 농업안전보건센터는 2013년 전국 5개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이 시작된 사업으로 2015년 8개 기관까지 증가하였으나, 2016년 6개, 2017년 5개로 축소하여 운영되고 있음.
- 농어촌주민들에게 특화된 건강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과 실질적 지원을 위해 시작된 농어업안전보건센터가 기능적으로 연착륙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의 경우, 예산 지원 규모를 의료기관의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변경하였으며 차등 지원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응급상황 시 출동하는 펌블런스 차량을 지속적으로 확대 배치함으로써 응급환자 구조 체계를 구축한 것은 바람직함.
- 분만 취약지 지원의 경우, 예산집행은 2015년에 다소 부진했으나 이후에는 확보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였음.

다.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목표 달성 여부>

- 제3차 기본계획의 세부 사업별 성과지표는 대부분 달성된 것으로 파악됨.
 -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성과지표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 평가 점수’,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료기관평가 인증 획득기관 수’, ‘지역거점공공병원 이용 환자 수’의 3가지임.
 -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의 성과지표는 ‘농업안전보건센터 운영 개소 수’이며, 연차별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연도별로 목표 자체가 점차 낮아짐.
 -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사업의 성과지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개소 수 확대’이며, 성과 목표가 달성되었음.

- 공공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사업의 성과지표는 ‘이용자 만족도’와 ‘이용자 증가율’이며, 두 지표는 모두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음.
-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 제3차 기본계획 출발 시 2019년까지 응급의료 부재 군(郡) 지역을 5개소 까지 축소하겠다는 계획은 2016년 조기 달성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음. 다만, 응급의료 인프라는 어느 정도 확충되었으나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서는 대도시와 격차가 존재함.
 - 취약지역의 119구급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신속한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펌블런스 차량, 구급전문 인력 및 장비 배치 사업도 당초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성과지표가 당초 ‘30분 이내 응급처치 제공’으로 설정되었으나, 2016년부터 ‘펌블런스 운영 대수’로 변경되어 이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분만 취약지 지원
 - 2015년의 성과지표는 ‘관내 분만률’로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부터는 성과지표를 ‘분만취약 가임인구 비율’로 변경하였으며, 과거의 실적치 추세를 반영하여 2017년부터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대부분 성과지표의 경우 연차별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성과 목표 달성이 최종목표 달성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유추하기 어려움.
 - 성과지표 자체에 대한 타당성 문제와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 시 달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목표 자체를 낮게 설정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파급효과 여부>

- 농식품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정주민족도 조사 결과를 통해 제3차 기본계획에서 추진한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확충의 성과와 효과를 유추해볼 수 있음.

- 세 가지 항목 중 ‘필요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응급의료서비스 접근성’이 가장 만족도가 낮았음.
- 2015~2017년 농촌의 정주민족도 조사결과를 도시와 비교하면, 필요시 의료서비스 접근성,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범위와 수준, 응급의료서비스 접근성 모두 도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에서는 농어촌 생활의 부문별 만족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만족도에 비해 보건의료 만족도는 낮았음.

<정책 제언>

- 현장 초동 대응체계 정비
 - 응급의료나 분만의료 등 필수의료의 경우에는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생사 여부와 건강 회복의 가·불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초동 대처가 중요함.
 - 고령화·부녀화된 농어촌이라도 그 지역에서 동원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대처하는 방법을 구비토록 할 필요가 있음.
- 필수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
 - 필수의료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농어촌 지역에 출동하는 의료인력의 전문성을 계속 높이는 정책(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정책들(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등)을 추진할 때 농어촌 지역에 대해 좀 더 배려할 필요가 있음.
- 제4차 계획의 목표와 정책군 설정, 정책군별 주요 과제와 시행계획, 그리고 세부 사업들 간에는 최소한의 논리적 연계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또한 목표 달성을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 설정시 최종 목표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성과지표는 세부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종목표 달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척도일 때 의미가 있음.

1.2.3. 계층(대상그룹)별 복지서비스 강화

□ 정책군 개요

- 계층(대상그룹)별 복지서비스 강화 정책군은 취약가구 자립 지원, 아동·청소년 복지지원 확대, 여성친화 사회 조성 및 여성 역량 강화, 다문화 사회통합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하고 있음.
- 주요 사업 내용
 - 농어촌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예정인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개소씩 확충
 - 농촌보육여건 개선: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지역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을 지원하여 보육 여건 개선
 - 여성농어업인 센터 운영 지원: 여성농어업인의 고충상담 및 자녀에 대한 영유아 보육 지원 등으로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 및 농촌 정착 유도
 -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 평가 결과

가. 정책 형성에 대한 평가

<정책 목표 합리성>

- 대상그룹(계층)별 복지서비스 강화 정책군의 정책 목표는 ‘영세고령농, 아동·청소년, 여성, 다문화가족 등 대상별 복지 지원 내실화’로 정책군에서 제

시된 주요 사업의 정책 목표는 매우 부합한 것으로 평가됨.

<목표-수단 연계성>

- 제3차 기본계획의 보건·복지 분야 정책 목표와 관련 세부 사업으로 제시된 수단 간에 명확한 연계성을 찾기는 어렵지만 충분성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율을 전체 아동의 약 40%까지 확충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제3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매년 10개소라는 목표는 대단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 여성친화도시 정책 형성교육 참여자 수나 참여자의 교육 만족도는 농촌 지역 여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질적 수준의 확대를 담보하는 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나.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

<정책 집행 실적 및 과정>

- 대상그룹별 정책 집행은 세부정책과제별 성과지표에 기초하여 2016년과 2017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사업에서 90%이상의 성과달성도를 보임.
 - 이외에도 농촌다문화 사회통합 관련 주요 사업인 이중언어환경 조성사업 실시 다문화센터도 목표량을 초과하여 달성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농업교육 수료자 또한 목표 이상의 달성도를 보임.

다.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목표 달성 여부>

- 농촌 지역은 총 1,413개 중 보육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972개소로 보육시설 설치율이 6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지원도 2017년 기준 총 4,921개소에 지원되었지만 농어촌 지역 전체 어린이집 중 지원 대상 어린이집은 61.7%에 불과함.
-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는 2017년 기준 86개를 지정하였고, 정책 형성교육은 총 416명에게 실시함. 아직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지방자치단체 228개 중 86개소로 37.7%에 불과한 실정임.
- 여성농업인센터는 보육, 농촌아동 방과후 학습지도,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등의 교육문화 활동 그리고 비정기사업(노인건강강좌 등 복지프로그램, 농업·농촌 체험활동, 도·농교류사업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촌 지역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의 경우 2017년 기준 총 216개소에 16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이중언어환경 조성사업은 110개소에 총 17.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함.
 - 성과 목표의 달성도를 보면, 방문교육지도사 배치 그리고 이중언어환경 조성사업 모두 100%이상의 목표 달성도를 보임.

<파급효과 여부>

- 대상그룹별 복지서비스 강화의 세부 사업군은 대부분 계획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책의 파급효과측면에서는 일부 사업의 경우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국공립보육시설을 매년 10개소 확충하고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였고, 실제로 목표대비 달성율도 100%를 상회하고 있지만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보육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이라고 하는 소기의 정책효과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 여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의 경우도 성과지표 자체가 사업의 정책효과를 측정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역의 다수가 농촌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농촌 지역의 여성친화도시로의 이행성과는 아직 부족함.
- 전국에 40개소 여성농업인센터는 전국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여성농업인센터가 전국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기 힘들.
- 다문화가족에게 방문교육을 제공하고 이중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 맞춤형 지원은 농어촌의 가장 큰 문제인 서비스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하고 서비스의 다양화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상당히 기여하였음.

<정책 제언>

- 농어촌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필요
 - 농촌 지역은 보육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고 보육시설이 대부분 인구가 집중된 읍내에 집중되어 있어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면부를 중심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추가 확대 필요
- 농촌특화 대상별 정책과 함께 가족중심, 공동체 중심 정책 개발 도모
 - 농촌의 대상별 정책은 가족과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개별적인 대상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어 서비스가 연속적이지 못하고, 대상을 전부 포함시키지도 못함.
 - 대상별 정책(생애주기별)과 함께, 가족 중심의 정책 개발이 필요함. 예로, 가족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장년과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상별 정책은 가족 구성원의 일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각 정책의 연계가 부족하고, 그 효과성이 제한됨.

- 가족 중심 정책에서 보면 농촌에서 영유아 정책은 육아 부담이 많은 청장년 여성 위한 정책이 될 수 있음. 또한 노인을 위한 정책 역시 부양을 책임지는 장년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상별 정책과 더불어 가족 중심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2.4. 농어촌 복지전달체계 구축

□ 정책군 개요

- 농어촌 복지전달체계 구축 정책군은 희망복지 지원단 기능 강화, 보건·복지 연계 지원, 거버넌스, 민간 조직 공조 강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하고 있음.
 - 주요 사업 내용: ① 농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② 행복모임센터 등 농수협 복지서비스 강화, ③ 사회서비스형 농촌공동체회사 육성, ④ 농촌건강장수마을(농촌어르신 복지 실천)

□ 평가 결과

가. 정책 형성에 대한 평가

<정책 목표 합리성>

- 농어촌 복지전달체계 구축 정책군의 정책 목표는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 접근성 개선, 찾아가는 서비스 기능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질 개선’이고, 제시된 주요사업의 정책 목표는 이와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됨.

<목표-수단 연계성>

- 정책 목표와 수단의 연계성도 상당히 확보되었으나 일부 사업들(행복모임센터 등 농수협 복지서비스 강화, 사회서비스형 농촌공동체회사 육성)은 추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농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의 경우, 성과 목표가 사례관리 가구 서비스연계 건수와 사회복지(방문간호) 공무원 확충 이행률로 되어 있어서 농촌주민들의 복지서비스 만족 정도를 알 수가 없음.
- 행복모음센터 등 농수협 복지서비스 강화의 경우, 성과지표가 ‘전문지역문화복지센터 지원 개소 수’로만 되어 있어서 수혜자들의 만족도 등을 알 수가 없음.

나.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

<정책 집행 실적>

- 농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의 2017년도 추진실적은 전담조직의 경우 읍·면지역 1,413개소 중 962개소에서 시행 중임(68.1%).
 - 농어촌 특화 사업으로 지역 인프라가 열악한 도서 및 농·산촌지역의 인력 배치기준 완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제공 등 시범사업을 추진 완료
- 행복모음센터 등 농·수협 복지서비스 강화
 - 전문지역문화복지센터 지원('17): 4개소 신규 육성
 - '17년, 행복모음센터 → 전문지역문화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 농업인 행복버스 지원('17): 86회 32,182명 지원(의료지원 및 장수사진 촬영 지원 등)
- 사회서비스형 농촌공동체회사 육성
 -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17): 57개소
 - 농촌공동체회사 역량강화 활동('17): 경영컨설팅(18개소, 125회), 역량강화 워크숍(1회 108명 참석)

- 지원 대상 업체 현장 실태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17): 12개소 2회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17): 96개소, 4,786백만 원(국비 50%, 지방비 50%)

<정책 집행 과정>

- 농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의 경우, 복지업무에 대한 낮은 인식과 소수의 복지인력, 복지인력의 비 복지 업무 수행, 관료제 문화로 인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 농어촌 지역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지역의 복지 자원 총량 확대 및 지역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농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과 인구학적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장수사진 촬영서비스, 한방 치료 등 고령화에 따른 필요나 수요를 감안한 서비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복지시각지대에 행복모음센터(전문지역문화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농어촌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다.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목표 달성 여부>

- 농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과 농촌건강장수마을은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하였으나 행복모음센터 등 농·수협 복지서비스 강화와 사회서비스형 농촌공동체회사 육성 목표 달성률이 상당히 낮음.
 - 농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17): 사례관리 가구 서비스연계 건수는 138.7%, 사회복지(방문간호) 공무원 확충 이행률 117%

- 행복모음센터 등 농·수협 복지서비스 강화('17): 전문지역문화복지센터 지원 개소 수는 목표 10개소, 실적 4개소(달성률 40%)
- 사회서비스형 농촌공동체회사 육성('17): 사회서비스형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개소 수는 목표 48개소, 실적 31개소(달성률 64.6%)
- 농촌건강장수마을('17): 농촌사회활동 프로그램 참여 횟수는 목표 22.5회, 실적 23.3회(달성률 103.6%)

<파급효과 여부>

- 성과지표를 보면 사례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와 민간복지 활동의 활성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례관리가구 서비스 연계건수는 2017년의 경우는 138.7%로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음.
 - 사례관리 대상자의 만족도 역시 2017년 90.4점으로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음.
- 사회복지공무원 증원 및 1인당 복지 수급자 수의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읍·면·동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농촌건강 장수마을 사업은 200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농촌마을(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20% 이상이며 전체 노인의 50%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함. 사업의 긍정적 파급효과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참여노인의 생활만족도가 ('14) 79.3점 → ('15) 80.7 → ('16) 86.0 → ('17) 90.8점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책 제언>

- 제도적으로는 복지전달체계가 구축되어 가고 있으나 급증한 복지수요에 대처하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의 부족 또는 누락으로 복지 체감도나 만족도

가 낮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대두됨.

- 서비스의 통합성,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 행정조직의 일원화나 통합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위해서는 관료주의와 행정간막이 해소가 필요함.

1.3. 보건·복지 부문 과제 및 정책 제언

1.3.1. 문제점 및 개선과제

□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군

- 제3차 기본계획이 취약층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지원 대상과 목표 대상층을 확대하여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저소득층 지원방안은 농어촌 사회안전망 확충에 있어 많은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기 어려움.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실태와 욕구를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 조사 및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부처 간 협업 강화를 통해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성과 목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의 홍보 및 확산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 및 농어촌주민을 위한 자체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및 의료 취약지 해소 정책군

- 접근성 강화가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의 측면이라면 수요 측면에 대한 접근을 위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가 목표로서 설정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공급과 더불어 부족한 보건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 농어촌에 특화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직접적인 사업이 별로 없음.
 - 필수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마을)의 특성을 좀 더 세밀하게 반영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계층(대상그룹)별 복지서비스 강화 정책군

-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을 크게 확충해야 함.
 - 농어촌 지역의 특수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간 연장 보육시설, 24시간 보육시설, 휴일 보육시설의 추가 확대가 필요함.
-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대부분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농어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여성친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여성농업인센터의 경우 ‘센터 인력의 부족’,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가장 심각함.

□ 농어촌 복지전달체계 구축 정책군

- 농어촌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읍·면·동 중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복지서비스의 2/3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복지 예산과 대상자의 급증으로 인한 업무과다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선 행정기관(읍·면·동)의 복지 담당 공무원 수가 2.9명 수준으로 종합적인 복지정보 제공 및 상담에는 어려움이 많음.
 - 통합사례관리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 일반 행정직과 복지직이 혼용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임.
-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보건소와 공공 복지기관의 서비스가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함.

1.3.2. 정책 방향 제언

□ 농어촌형 사회안전망 확충

- 정부가 발표하는 사회안전망 대책이 주로 노동자, 도시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어촌형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틀 속에서 농어촌 지역의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자체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거주 65세 이상 노인(비농업인)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 개발

-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농업인 기본소득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주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주택 수리비, 통신비 등을 경감하거나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예를 들면,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수급 빈곤층, 조손가족, 독거노인 등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보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복지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 이외에 귀농·귀촌 가구, 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복지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 필수의료의 현장 초동대응체계 강화

- 응급의료나 분만의료와 같은 필수의료의 경우에는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하므로 농어촌 지역 어디에서나 항상 작동할 수 있는 현장 초동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초동 대응에서는 현지 주민의 역할(참여)이 가장 중요함.
 - 고령화, 부녀화 된 농어촌이라도 그 지역에서 동원이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필수의료 서비스의 질 수준 제고

- 필수의료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농어촌 지역에 출동하는 의료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정책(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시행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정책들(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등)을 추진할 때 농어촌 지역에 대한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함.
 - 농어촌 지역에서 필수医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과 인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향상

- 농어촌 지역은 보육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고, 보육시설이 대부분 인구가 집중된 읍내에 집중되어 있어서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면부를 중심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목표도 새로운 국가정책에 맞춰 전체 이용아동의 40%로 확대하여 단계적 이행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과 달리 공간적으로 매우 광범위해서 차량이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도시 지역보다도 더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차량 운영비 지원이 필요함.
 - 차량 운영비의 지원 단가를 최대 240만원으로 고정하지 말고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특화 여성친화정책 개발

-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농어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여성친화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친화 지역사회 조성 관련 세부 성과지표를 수요자인 농어촌여성의 관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 지원

- 여성농업인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센터의 인력과 예산 확대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여성농업인의 수요가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매뉴얼화 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고충상담 실적이 없는 센터는 전문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기능 개선

- 복지직 공무원을 충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읍·면·동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기능을 개선함.

- 통합사례관리 및 찾아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 복지 전문직의 역할 강화를 통해 기계적 사정보다 당사자 욕구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신청주의에 기반 한 복지행정에서 벗어난 현장중심,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장방문 및 상담업무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는 지역의 복지력 향상 및 마을복지리더 및 전문 인력 양성의 기반이 될 수 있음.

2. 교육 부문

2.1. 교육 부문 전체 평가 결과

2.1.1. 정책 목표 달성도

- 제3차 삶의질 기본계획 교육부분의 목표는 ‘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어촌 교육’ 실현임.
 -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과제는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공교육 서비스 확충, 맞춤형 프로그램 및 주체 육성, 농어촌 학생의 교육 복지 확대, 농어촌 지역과 학교 연계 강화 등임.
- ICT 기기 보급,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강화 등 교육 인프라 확충 및 활용은 잘 이루어졌음.
 - 반면 농어촌 거점중학교 확대 등 공교육 서비스 확충은 미흡함. 평생교육을 위한 기반 또한 갈수록 악화됨.

2.1.2. 교육 부문 삶의질 현황

- 농촌주민들의 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도시민보다 낮았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7)의 도시·농어촌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공교육, 사교육, 학교 시설, 통학 등의 모든 항목에서 도시보다 낮게 나타남.
 - 농촌 지역 내에서 읍·면 지역간 교육만족도 차이가 있었음.
- 도시보다 농어촌에 교육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이 많음.
 - 장애인, 다문화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조손 가족 학생들에게 대한 배려가 농촌 교육에서 더 많이 이뤄져야 함.

- 농어촌 지역과 학교 연계 시도는 있었지만 이와 관련한 성과는 미흡함.
 - 농촌 주민들은 농어촌 교육 여건과 관련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당국과 지자체간의 협력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도시에 비해 농촌 노인들의 비문해 상황이 심각. 지역별 인구대비로 보면 문해교육 잠재수요자(중졸 이하) 노인 비율이 도시(5.3%)에 농촌이 3배(15.9%) 가량 많았음.

2.2. 교육 부문 정책군별 평가 결과

2.2.1. 교육복지

□ 정책군 개요

- 농산어촌 전원학교, 거점별 우수중학교, ICT, 통학여건, 다문화가족, 농어촌 진로교육 등 농산어촌 학생들의 기초학습력과 교육여건 마련을 위한 교육복지 관련 정책군임.
 -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교육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중심학교에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여 농어촌 학생 교육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사업임.
 -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지속 발전 가능한 교육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농어촌 거점별 중학교 지원함.
 -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 여건 개선: 스마트기기 및 무선인터넷망 등 ICT 인프라 확충, 스마트 멘토링, 콘텐츠 개발·확보 및 활용 여건·능력 제고를 지원함.
 - 농어촌학교 통학여건 개선: 지역 단위의 통학 지원 등 통학여건 개선 사례를 발굴·확산함.
 - 다문화가족자녀 교육 지원: 농어촌 지역 학교 여건을 고려한 예비학교와

중점학교를 운영하여 다문화학생의 언어·문화이해 교육 및 학교적응을 지원함.

- 농어촌 진로교육 강화: 직업체험 기회가 적은 농어촌 학생을 위해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

□ 평가 결과

○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 선정된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이 자연친화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현저히 줄어들고 과목별로도 학생의 성적이 향상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
- 학습환경 조성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은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전원학교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고 있음.
- 전원학교의 성공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1/5은 학교의 성과이고, 선정되지 않은 4/5의 학교는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여건 속에서 학습해야 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하였음.

○ 거점별 우수중학교

- 지역 주민 만족도와 공교육 신뢰도가 향상되었으며 기초학습지원과 방과 후 학교 운영으로 사교육비 감소, 학생 수 유지 혹은 증가(학군 외 학생 유입), 지역사회 교육문화센터로서 지역교육공동체 형성에 기여함.
- 장기간의 평가 지표를 만족도로 단순화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시범운영으로 그치지 말고 성공적인 사례는 계속 지원하며, 학교의 유지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 여건 개선

- 농산어촌 전체 초·중학교 ICT 인프라(스마트 기기 및 무선인터넷망, 스마트 멘토링 등) 구축이 완료됨.
- 도·농 간의 교육격차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함(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서벽지 소규모학교부터 우선 지원한 것은 매우 의미있음).
- 성과지표를 ICT 환경 구축 학교 수에 한정하고 있는데, 구축된 ICT 환경이 교과수업, 방과후학교 등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음.

○ 농어촌학교 통학여건 개선

- 학교 통폐합으로 농촌 지역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통학수단의 제공과 관련된 정책으로 매우 유의미하나, 중앙정부가 배정한 예산이 없고 시·도 교육청이 자체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짐.
- 2015~2017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농어촌 시·군에서 통학수단 제공 이행 수준은 50%대 정도로 저조함.

○ 다문화가족자녀 교육 지원

- 한국어 구사가 곤란한 학생에게 한국어·한국문화를 집중 교육하고, 모든 학생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과 다문화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 중점학교가 확대됨.
- 농어촌 다문화가족 자녀에 특화된 사업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과 그에 기반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예비학교의 많은 프로그램이 특정 언어권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지적이 있어 실태 파악 및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의 평가 지표상 농촌 지역 주민의 ‘다문화 감수성(혹은 수용성)’과 관련된 지표나 농촌 지역 거주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과 관련된 별도의 지표가 없어 농어촌 지역 다문화 가족 자녀

의 삶의 질 실태가 전혀 파악되지 못하고 있음.

○ 농어촌 진로교육 강화

- 연도별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을 지원하는 학교를 확대하여 지역격차 해소 및 수혜학생 증가에 기여함.
- 직업 세계를 균형있게 전달하고 다양한 분야의 멘토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24개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3개 분류의 멘토가 전체 멘토의 50%를 차지하는 편중 현상이 발생함.
- 멘토링을 통해 농산어촌 학생들이 쉽게 만나기 어려운 직업인들을 만나고 있으나 만남이 1회성 수업으로 그치는 경우가 다수임.
- 멘토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멘토 발굴 필요하며 도시 중심의 직업·진로에서 벗어나 농촌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로교육이 필요함.

2.2.2. 평생교육

□ 정책군 개요

○ 농어촌 평생교육 기반 확충

- 소외지역 주민이 근거리에서 양질의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민과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여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확대하고자 함.
- 읍·면단위 이하 마을 주민 중 평생교육 지도자를 육성하고 지역 내 평생교육 전담인력으로 배치하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의 전문성을 보강하고자 함.

□ 평가 결과

○ 주요사업성과

-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센터를 설치함.
- 주민의 평생교육 요구를 가장 근거리에서 파악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내용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함.
- 유희시설의 기능을 전환하거나 주민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활용
- 학습수요 파악, 학습자 지원들을 위한 학습매니저를 양성 및 배치함.
- 시·도·시·군·구 연계를 통한 거점센터 운영을 활성화함.
- (시·군·구 거점센터) 평생학습 수요조사, 행복학습센터 시설 발굴, 행복 학습매니저 양성, 배치·모니터링, 행복학습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함.
-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함.
- 농어촌 등 평생교육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함(예: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 노인 건강을 위한 평생교육, 체육 프로그램 등).

○ 정책평가

-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평생교육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토대를 마련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함.
- 평생교육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관련 조례 개정이 이뤄짐.
-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학습가능한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함.
- 소외된 지역의 유희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학습시설화로 학습 공간 확대 및 접근성을 높였지만, 농어촌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다소 부족함.
- 마을단위 학습관리 인력인 학습매니저를 도입하여 지역평생학습 준전문가로 양성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도록 함.

- 행복학습센터는 가장 풀뿌리에 있는 지역 평생교육의 구동체로서 지역의 균형발전, 교육 소외계층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토대로써 기능함.
- 단기 지원사업으로서 현재 국가예산이 중단된 상태로 소외된 농어촌 지역민을 위해 국가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할 학습매니저의 지속적 육성과 지원이 필요함.
- 농어촌 행복학습센터의 성공적인 결과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함.
- 행복학습센터 지원사업은 도시와 농어촌을 구분하지 않고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되고 있어 불리한 여건에 있는 농어촌을 위한 배려가 필요함.

2.2.3. 교육공동체

□ 정책군 개요

- 교육공동체 발굴·지원
 - 면단위 이하에서 2개 이상의 교육주체들이 협업하는 교육공동체 운영을 지원함.
 - 농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농촌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여건 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하고자 함.
 - 방과 후, 주말, 방학 등을 활용한 학습지원, 진로교육,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동교육 등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
 - 기존의 주민 문화·복지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함.

□ 평가 결과

- 농어촌 주민 주체의 교육공동체 구축
 - 주민들의 생활 체감형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음.
 - 주민 제안 공모사업으로 자생적 교육공동체를 발굴·지원함.

- 농촌 교육·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
 - 문화·복지 사업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 사업을 통합함.
 - 두 사업의 통합으로 인한 목표 대비 실적이 과다한 측면이 있음.
 - 교육·문화·복지 공동체 지원 개소 수를 기초로 목표 대비 실적에 따른 달성도 제시가 필요함.

- 농촌 주민의 교육과 아동·청소년들의 학습 지원 연계 구조에 대한 고민 필요
 - 교육을 중심으로 주민과 아동·청소년의 수요가 연결되는 것은 이 사업 초기 목표에 해당함.
 - 두 사업의 재분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생활 문화나 복지 사업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재원으로 추진 중).
 -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주민의 평생학습을 연결하는 구조 마련이 필요함.

2.2.3. 지역교육 거버넌스·지원체계

□ 정책군 개요

- 농어촌 교육지원 체계화
 - 농어촌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농어촌 여건을 감안한 교육발전 방안 연구 및 개선사업 추진 지원을 체계화하고자 함.

- 농어촌 학교 활성화 주체 육성
 - 농어촌 학교에 대한 교장 공모 확대: 농어촌 학교에 적합한 인재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어촌에 공모 학교를 우선 지정하도록 유도하는 등 모니터링·관리를 강화함.
 - 농어촌 학교 교원 배치 내실화: 학생 밀도 및 읍·면지역 학교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교원을 배치함.
 - 농어촌 신규 교원 육성: 원활한 결원 보충 및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우

신규채용 시 일정기간(5년) 이상 도서·벽지, 면 단위 농어촌 지역 근무 조건으로 별도 채용 확대함.

○ 교육청 평가 개선

-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시 농어촌 학교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 지자체와의 협력 정도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발굴 및 개선하고자 함.

□ 평가 결과

○ 농어촌 교육지원체계화

- 농어촌교육지원센터에서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농산어촌 ICT 지원,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추진, 농어촌교육지원 사업 컨설팅 및 성과관리 추진, 농어촌교육지원 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보제공 등을 수행함.
- 일선교원 및 시·도 교육청 담당자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 및 컨설팅으로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함.
- 농산어촌 ICT 활용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 및 컨설팅 수행으로 수요자의 만족도를 개선함.

○ 농어촌 학교 활성화 주체 육성

- 농어촌 학교 교장 공모 확대: 정년퇴직 등 교장 결원 대비 1/3~2/3 범위 내 농어촌 지역 학교를 공모학교로 지정하여 농어촌 지역에 열의 있는 우수한 교장이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학교를 활성화함.
- 농어촌 학교 교원 배치 내실화: 기존 배정기준인 ‘지역군별 보정지수’에서 ‘전국평균 학교별(동일 학생구간) 학생수’로 변경(’16.2.29. 법령* 개정)하여 농어촌학교가 많은 도 지역의 교원 정원 배정이 배려됨.
- 농어촌 신규 교원 육성: 학교·지역단위 교원임용 제도를 추진함으로써 교원의 안정적 확보 및 농어촌 학교의 교육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 교육청 평가 개선

- 추진내용 및 실적: '16년 도교육청 평가 시 「농어촌학교 등 교육지원 강화」 평가지표를 반영하여 교육청별 농어촌 교육지원 노력도 평가함.
- 주요 성과: 도 교육청별 농어촌 교육지원 현황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마련 및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2.3. 교육 부문 과제 및 정책 제언

2.3.1. 문제점 및 개선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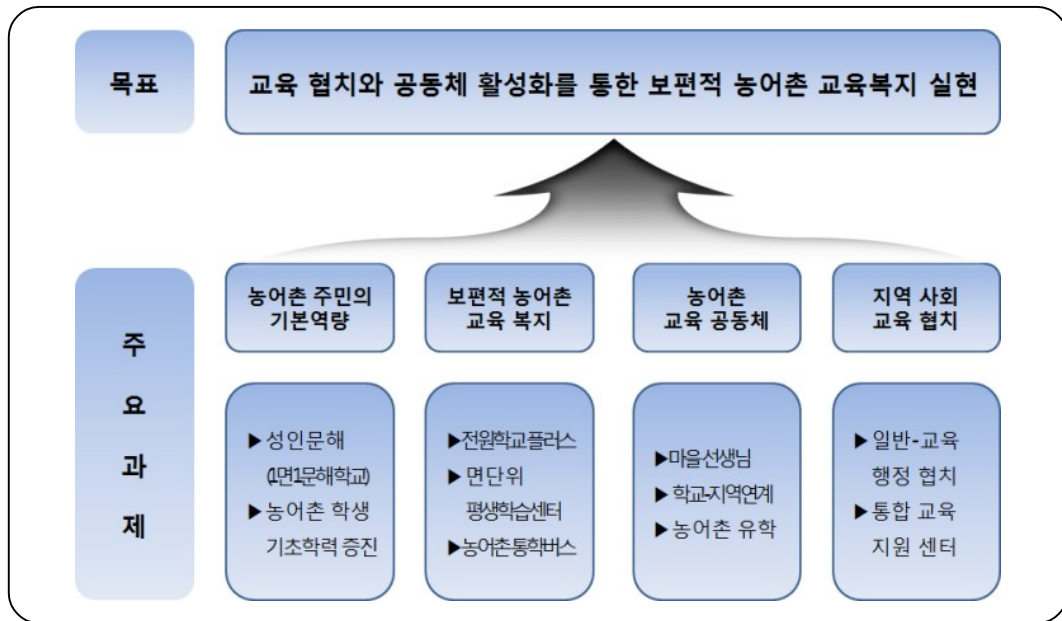
- 제3차 삶의 질 계획 교육 부문은 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농어촌 교육 실현을 위해 농어촌 공교육 서비스 확충, 맞춤형 프로그램 및 주체 육성, 교육 복지 확대, 지역과 학교 연계 강화 등을 추구함.
 - 농어촌 학교 ICT 기기 보급, 농어촌 거점 중학교, 원격 진로멘토링, 농어촌 유학 지원 등이 새롭게 시도되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할 많은 교육 관련 문제들이 산재함.
- 주민들의 도·농간의 교육만족도 차이는 여전히 높고, 농어촌 지역내에서도 읍·면 간 교육 격차가 존재함.
 - 제 3차 삶의 질 계획에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농어촌 교육’을 추구하였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성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음.
 - 청년세대들의 농어촌 교육에 대한 불만이 높아, 농어촌을 떠나는 중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장애인, 다문화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조손 가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농어촌 교육 복지 강화가 필요하고,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과 더불어 높은 노인의 문해교육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교육 부문을 교육복지, 평생학습, 교육공동체, 지역 교육 거버넌스·지원체계 등 4개 정책군으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선별적 농촌 학교 지원은 선정되지 못하는 학교의 교육 환경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농산어촌 모든 학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농어촌 교육복지(기초안전망, 기초학습, 문화·예술·체육, 사회성, 심리·정서 등)가 확보되어야함.
 - 농어촌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확대 추진이 필요함.
 - 농어촌 교육여건 중간지원조직의 안정적 운영 방안 필요함. 농어촌 교육중간지원조직은 학교 교육 뿐아니라 일반 주민의 평생교육을 모두 지원해야함.
 - 지역단위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협력을 위해 지방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농어촌 교육 활성화 논의를 촉진해야함.

2.3.2. 정책 방향 제언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는 교육 부문의 기본방향을 ‘교육 협치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보편적 농어촌 교육 복지의 실현’으로 설정함.
 - 농어촌 성인의 문해능력(기초 문해, 기능 문해)과 더불어 학생들의 기초 학습능력 배양 등 농어촌 주민의 기본역량을 확대해야 함.
 - 선별적인 교육복지에서 벗어나 보편적 교육복지를 추구해야 함.
 -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농어촌 교육 공동체를 구현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차원의 지역사회 교육협치 실현을 추구해야 함.

〈그림 2-1〉 교육 부문 정책 목표 및 주요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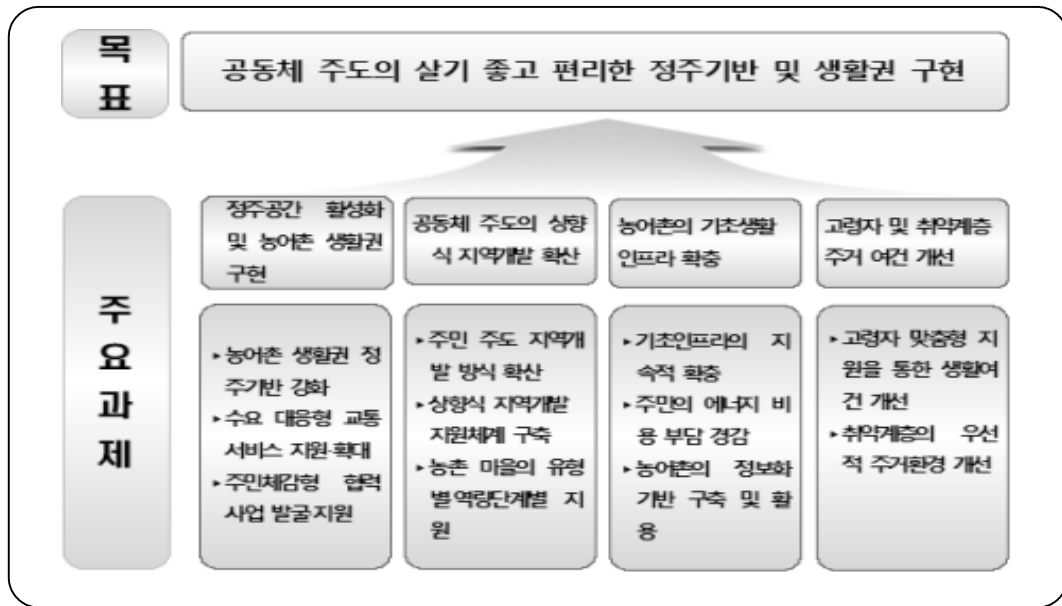
3. 정주생활기반 부문

3.1. 정주생활기반 부문 전체 평가 결과

3.1.1.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정주생활기반 부문 개요

- 제3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현황 및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 확대와 제도를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농 격차는 여전함.
 - 농어촌 지역에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설치, 현장포럼·총괄계획가를 도입하여 상향식 지역개발 추진체계 기반을 구축하였으나 현장의 역량 수준이 미흡함.
-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목표는 ‘공동체 주도의 살기 좋고 편리한 정주기반 및 생활권 구현’임.
 - 제3차 기본계획 중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주요 과제는 ①정주공간 활성화 및 농어촌 생활권 구현, ②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 확산, ③농어촌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④농어촌 고령자 등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의 정책군으로 제시하였고, 각 주요 과제별 세부 목표는 <그림 2-2>와 같이 설정됨.
- 단, 본 평가에서는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농어촌 정주공간의 활성화’,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등 3개의 정책군으로 재설정하여 평가함.

〈그림 2-2〉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목표 및 주요과제



3.1.2. 정책 목표 달성도

○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는 다음과 같음<표 2-5>.

〈표 2-5〉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성과 목표

주요 과제(정책군)	세부 성과	성과 목표	
		2014년	2019년
정주공간 활성화	농어촌생활권 중심지 육성(누계, 개소)	297	650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	71	82
	도농복합시·군 하수도 보급률(%)	78	85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81	90
주거여건 개선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88.3	90
	농촌 주택개량 융자지원(누계, 만 동)	1	6
	슬레이트주택 철거(누계, 천 동)	50	187
	빈집(폐가) 정비(누계, 천 동)	121	161

- 삶의 질 기본계획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주요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2019년 목표치를 달성이 어려운 과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표 2-6>.
- 목표 달성도를 성과지표 측면에서 보면 2017년 기준으로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만 초과 달성 상태임.
 - 농어촌생활권 중심지 육성은 2017년까지 2019년 목표치의 75%를 달성해 향후 2019년까지 목표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은 80.1%로 목표치 82%의 97.7%를 달성했고, 하수도 보급률은 목표치 대비 96.5%를 달성해 2019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농어촌 주택개량 용자 지원은 목표치 대비 60%를 달성했으나, 현 추세로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슬레이트주택 철거는 목표치 달성률이 71.7%, 빈집 정비는 89.6%이나 사업 추진 속도를 볼 때 2019년까지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2-6>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연차별 성과지표 달성도

정책군	성과지표	성과 목표				
		2014(실적)	2015(실적)	2016(실적)	2017(실적)	2019년
정주공간 활성화	농촌 중심지 선도지구(누계, 개소)	-	15	33	51	68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	71.0	73.1	76.3	80.1	82.0
	도농복합시·군 하수도 보급률(%)	78.0	80.8	81.0	82.0	85.0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81.0	85.8	92.8	96.4	90.0
주거여건 개선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88.3	-	-	-	90.0
	농촌 주택개량 용자지원(누계, 만 동)	1	1.9	2.8	3.6	6
	슬레이트주택 철거(누계, 천 동)	50	78	105	133	187
	빈집(폐가) 정비(누계, 천 동)	121	-	-	144.3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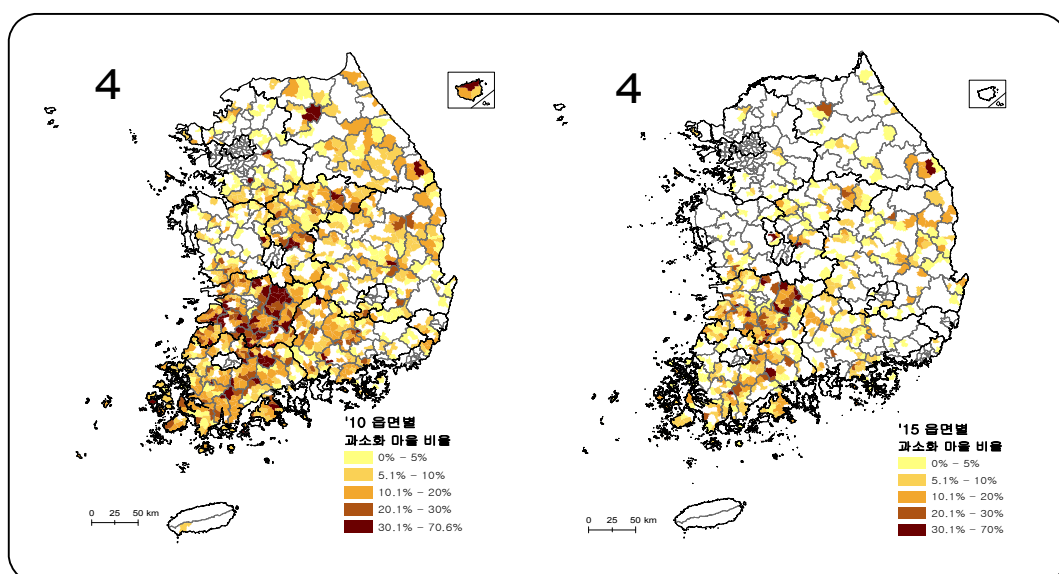
* 최저 주거기준 이상 가구는 통계청의 조사 방식 변경으로 실적을 파악할 수 없어 새로운 대안이 요구 되는 실정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주만족도 조사를 보면 정주생활기반 분야의 평균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때, 정책 목적 방향으로 주민들의 생각도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3.1.3. 삶의 질 개선 현황

- 농어촌의 거주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귀농·귀촌 등에 힘입어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추세임.
 - 이촌향도로 인해 농어촌의 인구는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귀농·귀촌 증가로 인해 농산어촌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2017년 기준 농어촌 인구는 963만 명으로 총인구의 18.7%를 차지함.
 - 읍부 인구는 1995년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면부 인구는 2010년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됨.
- 2010년까지는 가구 수 20호 미만의 과소마을이 증가했으나 최근 농어촌 인구 증가에 따라 과소마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결과에서는 20호 미만의 과소 마을이 전체의 3.5%인 1,270개로 나타나, 2010년 대비 1,800여 개 감소함<그림 2-3>.
-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유소년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이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00년에는 농어촌 인구의 18.6%가 유소년인구였지만 2017년에는 그 비중이 11.6%로 감소함.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전체 농어촌 인구의 21.1%를 차지함(초고령사회에 진입)
- 귀농·귀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베이비부머 세대를 비롯해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의 농어촌에서의 활동과 이주도 증가하고 있음.
 - 귀농·귀촌 인구 증가: 42만 3천 명('13년) → 51만 7천 명('17년), 이중 50% 이상이 30대 이하의 청년층임.

〈그림 2-3〉 과소 마을 분포 변화(2010년, 2015년)



주: 과소지역은 음·면으로 표시 된 것이며, 음·면에 속한 행정리 수 대비 20호 미만 행정리수를 구하여 산출한 것임.
자료: 심재현 외(2017).

○ 농어촌의 생활인프라 여건은 조금씩 호전되고 있으나 아직도 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며, 향후 인구가 감소하면 정주환경은 더욱 낙후될 것으로 예상된다.

- 도로 포장률, 상하수도 보급률 같은 기초 인프라는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에 따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80% 미만으로 도시에 비해서는 열악한 상황임.
- 농어촌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인해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도시에 비해 많지만 도시에 비해 면적이 넓은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면 의료 접근성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 보육 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초등학교, 사설학원, 교통 접근성 측면에서도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아직도 열악하며 그 수도 부족한 상황임.

* 0~4세 인구 천 명당 보육시설(개): 도시 21.3, 농어촌 17.4

* 1km²당 노인 여가복지시설(개): 도시 2.51, 농어촌 0.63

* 1km²당 초등학교(개): 도시 0.39, 농어촌 0.05

- 농어촌 행정리의 50.7%에서는 시내버스가 하루 10회 미만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이 중 12.7%(읍 603개 행정리, 면 3,787개 행정리)는 1일 1~3회만 운행됨.
- 정량적인 측면에서 농촌의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삶의 질 관련 지표는 개선되고 있음.
- * 5년 이내 신규주택 비율: ('15년) 12.5% → ('17년) 15.0%
 - * 상수도 보급률: ('15년) 73.1% → ('17년) 80.1%
 - * 하수도 보급률(읍·면): ('15년) 66.6% → ('17년) 68.2%
 - * 광대역 통신망: ('14년) 81.0% → ('17년) 96.4%
- 정주생활기반 부문 만족도 조사 결과, 주택, 기초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 대중교통, 인터넷 등 여러 부문에서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어촌 주민의 정주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모든 항목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만족도가 높아져,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전반적인 삶의 질은 조금씩 향상되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농어촌 주민은 도시 지역과의 격차도 기초생활인프라, 생활 서비스 이용, 대중교통, 인터넷 부문에서 줄어들고 있음.
 - 주택 부문의 만족도는 2015년 대비 격차가 늘어났으나 2016년과 유사한 수준임.

〈표 2-7〉 정주 생활 부문 만족도 조사 결과

설문 문항	2015			2016			2017		
	도시	농촌	차이	도시	농촌	차이	도시	농촌	차이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6.9	6.5	0.4	6.8	6.4	0.4	6.9	6.4	0.5
도시가스·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7.1	5.8	1.3	7.3	6.1	1.2	7.2	6.3	0.9
생필품 구입, 목욕탕, 이·미용실 등 생활 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7.4	6.1	1.3	7.5	6.0	1.5	7.4	6.2	1.2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7.3	5.7	1.6	7.6	5.8	1.6	7.3	5.8	1.5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	-	7.8	6.7	1.1	7.7	6.9	0.8
주민들이 마을 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	-	-	-	-	-	5.7	5.6	0.1

주: 각 연도별로 3000명 이상을 조사한 결과임(도시(동)지역 약 1,000명, 농촌(읍면) 지역 약 2,000명).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각 년도.

3.2. 정책군별 평가 결과

3.2.1. 농어촌 정주 공간 활성화

□ 정책군 개요

- 농어촌 정주 공간 활성화 정책군의 사업들을 종합하면 주민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을 통해 중심지와 마을간 연계 발전시켜 살기 좋은 생활권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정책 평가를 위해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 계획의 주요 과제인 “정주공간 활성화 및 농어촌 생활권 구현”, “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 확산”을 하나로 묶어 농어촌 정주 공간 활성화 정책군으로 설정함.
 - 농어촌 정주 공간 활성화 정책군을 다시 생활권 강화 활성화 관련 과제, 주민주도 지역개발지원 과제, 귀농어촌 활성화 과제로 재분류하고, 각각의 세부 사업들을 <표 2-8>과 같이 분류함.

- 기존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에서 첫 번째 과제인 “정주공간 활성화 및 농어촌 생활권 구현” 내 세부 주요 사업 중 수요 대응형 교통 서비스 지원·확대는 내용상 농어촌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정책군으로 변경함.

〈표 2-8〉 농어촌 정주 공간 활성화 정책군의 사업

세부 과제	정책사업		기존 사업명
생활권 활성화	중심지 활성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일반농산어촌사업
		도시재생뉴딜	신규
		기초 생활 거점	일반농산어촌사업
		산촌거점개발사업	신규
		어촌뉴딜300(어촌마을 만들기)(해수부)	신규
		농어촌마을유형별 역량 단계별개발	상동
	마을정비	종합개발	일반농산어촌사업
		자율개발	일반농산어촌사업
		신규마을	일반농산어촌사업
		산림휴양치유마을(산림청)	일반농산어촌사업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일반농산어촌사업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행안부)	접경지역특성화사업
		창조지역사업(지역위) 16년 완료	신규
		농촌다움 복원	일반농산어촌사업
	광역생활권구축	생활권연계협력확대	상동
주민주도 지역개발지원	중간지원 조직 육성	시·군 역량강화(16년까지 추진된 시·군 창의 사업 포함)	일반농산어촌사업
		현장포럼 및 현장포럼 모니터링	상동
		농촌 활성화 지원 센터 지원 (농림부)	
	전문가 육성	농어촌 퍼실리테이터, 농어촌지역개발컨설턴트 교육	상동
	주민 참여 육성	산촌주민역량강화사업 (산림청-임업진흥원)	상동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농림부) (행복마을콘테스트)		상동	
귀농산어촌 활성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농림부)	상동	
	농산촌 활성화 지원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상동	
	귀어·귀촌 활성화 지원(해수부)	상동	

- 주 1) 어촌공동체 경영활성화(해수부-한국농어촌공사)(어촌특화역량강화지원)은 제외
 2) 상동: 기존 삶의 질 평가 사업 대상
 3) 신규: 기존에는 삶의 질 평가 사업 대상이 아니었으나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사업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군에 포함된 단위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재분류

□ 평가 결과

(1) 생활권 활성화

- 중심지 및 마을사업 등 생활권 활성화 부문의 사업들은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여 배후마을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나 세부 사업의 내용은 인구 감소 및 과소화 대응에 미흡한 실정임.
 - 인구감소 및 과소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사업이 부족해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원활한 생활서비스 제공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 과소화마을 증가, 농촌 중심지 기능 저하로 정주여건이 악화되는 문제에 대응한 세부 사업 및 성과 평가 지표 설정이 필요함.

-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마을사업은 매년 80% 이상의 집행률로 사업이 추진되나 추진 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함.
 - 시·군 내 사업 추진이 체계적이지 못해 생활권 강화라는 목적 달성의 성과가 저하되기 때문에 향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농촌 공간 계획이 필요함.
 - 주민 참여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 기간의 단축 및 프로그램 보완이 필요함.
 - 다양하고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로 인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므로 이를 조율하기 위한 참여 주체간의 역할 규정이 필요함.

- 생활권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농어촌 정주생활기반 부문 만족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각 사업의 성과 목표에 질적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향후 성과 목표에 질적 항목 제시를 통한 정책 성과 제고가 필요함.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 개발이 필요하며, 생활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강화, 서비스 공급 지속성 확보를 위한 공공자산의 활용 및 민간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함.

(2) 주민주도 지역개발

- 주민이 주도적으로 농어촌에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
 - 주민주도 지역개발 정책에는 현장포럼 지원,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지원, 농촌현장포럼 모니터링 사업이 포함됨.
 - '17년까지 103억 9500만 원이 투입되었고 집행률은 95% 이상으로 예산 집행의 관점에서 보면 계획 대비 차질 없이 집행됨.
 - 단위사업별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은 원활히 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고, 공동체를 자발적인 지역개발 주체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사업을 통해 시·군 중간지원조직이 늘어났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민 영향력이 증가한 것을 볼 때, 주민주도 지역개발의 기반은 마련되었다고 평가됨.
 - 이는 단위사업 간의 협력, 단위사업 주체의 한계, 예산의 부적합성 등으로 인한 것으로 주민주도의 지역개발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간 역할과 연계 구조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3) 귀농산어촌 활성화

- 귀농산어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임.
 - 각 귀농산어촌 종합센터가 운영되면서 맞춤형 교육, 상담 등 세부 사업이 진행됨.
 - 귀농어·귀촌, 귀산촌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대부분 지자체가 민간 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귀농산어촌 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교육이 다양화되고 교육자 수나 만족도가 증가하였음.
 - 그러나 실상 교육 내의 질적 측면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센터의 경우 단순 상담기구가 아니라 조력기구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평가지표 개선이 필요함.
- 귀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는 각기 다른 부처·청에서 귀농·귀촌, 귀어·귀촌, 귀산촌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임.
 - '16년, '17년 귀농·귀촌 활성화 및 귀산촌 활성화의 집행률은 100%를 초과하였고 귀어·귀촌은 80% 이상임.

3.2.2.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 정책군 개요

-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은 ①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사업, ②농어촌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사업, ③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등으로 구성된 정책군임.
 -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사업은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교통서비스 모델을 발굴·확산하여 배후마을의 접근성 개선 및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임.
 - 농어촌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은 크게 하수도 보급 사업과 지자체의 기초인프라의 계획적 정비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 하수도 보급 사업은 하수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농 간 하수도서비스 격차의 지속적 해소하는 것이 목적
 - * 기초인프라의 계획적 정비는 가뭄 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보강하여 농촌 생활여건 및 경제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도서지역의 식수원을 개발하여 물 복지 사각지대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임.

□ 평가 결과

(1)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사업

-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동안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및 사업 확충이 이루어져 배후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의료·문화·복지시설에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함.
 - 버스 미운행 지역 등 교통 취약지역에 마을버스,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운영 지원 확산: ('14년) 13개소 → ('18년) 82개소
 - 사업 전후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 상승효과 발생. 대중교통 만족도가 사업 전 43.4점, 1년 후 90.9점('16), 2년 후 92.2점('17)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였고, 요금 만족도는 84점 수준으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농촌형 교통 모델을 도입한 이후, 읍·면소재지까지의 소요 시간이 월평균 19.6분(도입 전 38.5분), 정류장 접근 보행시간은 평균 11.1분(도입 전 32.8분), 버스 대기시간 평균은 13.2분(도입 전 18.9분)으로 효과가 높음.

-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은 2016년 집행률 81.7%에서 2017년 94.4%로 증가하였으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등을 포함하여 서비스 참여 주체가 확대됨.
 - 더불어 사업 홍보를 통해 관심과 성과를 확산하고 있으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도시 지역 내 농어촌 지역이 사업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음.
 - 농촌형교통모델 사업은 2018년부터 100원 택시 등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전국 82개 군 지역으로 확대하고, 78개 시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형 택시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됨.

(2) 농어촌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 기초인프라 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체계적·계획적 정비 지원이 이루어짐.
 - 임시방편적인 인프라 지원에서 중장기 계획에 따른 지원체제로 전환됨.

- 예산 및 사업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 하수도정비 종합계획’을 수립, 하수도 보급률 향상뿐만 아니라 비법정 시설로 관리중인 시설을 ‘공공하수도’로 전환시켜 관리하는 것으로 확대됨.
 - 기초생활환경, 생활기반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의 정비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목표치 100.0% 상회 달성함.
- 2016년 집행율 100%에서 2017년 102.8%로 실적 대비 목표치를 달성
 -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확대: '16년 67.4% → '17년 68.2%
 - 하수처리 혜택 인구 19만 명 증가('16년 271만 명 → '17년 290만 명)

(3)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 농어촌 상수도 확충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졌고,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체계가 구축·운영됨.
 -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2014년 71.4%에서 2017년 80.1%로 증가
 - 도·농 간 상수도 보급률 격차 감소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물 복지 형평성 제고(2014년 상수도 보급률 도·농 격차 27.3%에서 2017년 19.4%로 줄어듦)
 -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예산 집행률은 2017년 95.2%이나 상수도 보급률은 2017년 목표 80.0% 대비 80.1% 달성

3.2.3.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 정책군 개요

-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정책군은 ①고령자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활여건 개선, ②취약계층의 우선적 주거환경 개선에 관련된 사업을 포함
 - 세부 사업으로는 농어촌 주택 정비 지원,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도시가스 공급배관사업,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농어촌 슬레이트 철거 지원 등이 포함됨.

□ 평가 결과

- 농어촌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여건 개선은 농어촌 정주생활기반 부문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삶의 질 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목표에 부합함.
 - 다만, 현재의 투입(input) 중심의 성과지표로부터 실제 수혜가구의 체감도 등 결과(outcome) 중심의 성과지표로의 전환이 필요함.
 - ‘고령자맞춤형 공동시설 조성’은 시범사업 종료와 함께 2017년 시행계획에서 제외되었으나 그동안의 성과로 볼 때 대안적 사업 모델 개발이 필요한 실정임.

-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에 포함된 사업들은 사업비 집행률이 100%에 근접하거나 초과
 - 농어촌 주택정비 지원의 집행률은 97%, 도시가스 공급배관사업의 집행율은 100%,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집행율은 2015~2017년 평균 100%을 초과하는 등 사업 집행 실적은 양호함.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등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슬레이트 철거 지원은 지원 금액의 현실화가 요구되는 실정임.

- 농촌주택 개량 용자 지원 사업, 슬레이트 철거사업, 빈집정비 사업 등은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2017년 기준으로 2019년 목표 대비 농촌주택 개량 용자 지원은 43.3%를 달성했으며, 슬레이트주택 철거는 71.7%, 빈집 정비는 89.6%를 달성함.
 - 농어촌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목표치가 2019년 90%이었으나 공식 통계 측정 방법의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측정지표가 요구됨.
 -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의 경우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수혜가구는 총 3,066가구이며, 총 지원 사업비는 105억 6300만 원으로 지난 10년 간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3.3. 정주생활기반 부문 과제 및 정책 제언

3.3.1. 개선과제 및 정책 제언

□ 농어촌 정주 공간 활성화 정책군

- 중심지와 배후마을을 효율적·압축적·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상위정책수단으로 통합적 공간 계획이 필요함.
 - 농어촌 지역에서 시행되는 타 부처 사업들을 연계하는 통합관리 체계 마련으로 정책 사업들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 필요함.
 - 정주공간 활성화 및 농어촌생활권 구현 부문에서 부처별로 추진되는 5개 지역개발사업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지자체 단위에서 농어촌과 관련된 개발 사업들을 발굴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소·중·대 생활권 등 주민들의 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범위를 설정하고 소프트웨어형 사업군 발굴과 연계방안 제시가 필요함.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생활서비스를 전달하고 중심지 내 생활서비스 제공 기능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측정 지표 개발이 필요함.
- 지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권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여러 부처가 선정 지원하는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통합적인 관점에서 생활권을 설정하고 생활권 중심지의 기능 강화 방향을 포함하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생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야 함.
 -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금 마련, 민간위탁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예산 편성 재량권 강화가 요구됨.
 - 행정기관 중심의 관련 실과, 공공기관, 민간간의 협력조직체(예: 행정협

- 의체) 구성을 위한 지원 방안 수립이 필요함.
- 중앙정부 사업시행지침, 가이드라인을 간소화하여 지역 내 사업유형, 추진방식의 유연화를 도모해야 함.
 - 중앙부처별 제시된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연계를 촉진해야 함.
- 중심지와 배후마을을 연계한 생활 서비스 제공형 주민활동을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성장시키고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체계 및 제도개선이 필요함.
-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예술, 복지, 돌봄 등의 분야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동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활동지원 기반 마련 필요
 - 생활서비스 공급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자산의 민간 자산화 지원 제도 개선 필요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의 개정을 통한 생활서비스 공급형 주민 사업체에게 공유재산 임대 자격을 주어 지역사회 공익형 비즈니스를 촉진
 - 생활서비스형 주민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등 법적 근거 마련과 지역 조직 간의 협력 활동에 대한 직접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
- 생활서비스 공급 활동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종료 이후의 지원체계 마련도 필요함.
- 중심지 활성화 및 마을 지원 사업에 의해 구축된 생활서비스 제공 단체(기업)는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필요한 실정임.
 -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전문 인력과 신규인력의 지속적 인 연계, 타 사업자들의 활동 경험의 공유가 필요하나 사업 이후에 단절되어 있어 이를 지원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제안서 작성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개선하여 실제 공동체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주민 참여,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주민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마을주민과 리더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내 조직 간의 협업, 갈등조정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 필요

- 귀농산어촌 활성화 부문의 정책 과제 및 개선 방향
 - 청년 중심의 타겟팅 지원 다각화(청년 신규 취농/사회적 경제활동 프로그램 도입, 귀농초기 소득향상 프로그램 도입,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지원 확대, 농업 창업자금 지원 확대 등)
 - 이주 후 정착지원 강화(지역사회 일자리 연계 지원, 귀농·귀촌인의 집 조성 확대, 소규모 저비용 임대주택 조성, 귀농인 주택구입 융자 지원 개선 등)
 - 공동체 중심 지원(지역주민과의 융화 지원 강화, 지역사회 발전 모델 창출 지원)
 - 저변확대(귀농·귀촌 교육체계 개편,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등)
 - 추진체계 정비(농촌 지역 귀농귀촌지원센터 육성, 귀농·귀촌 지원 종합 플랫폼 지원 등)

□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정책군

-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사업
 - 농촌형 교통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벽오지 마을 주민의 통행 행태 및 운영효율화 방안을 강구(모니터링 실시)
 - 지속적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조달 방안과 기존 운수사업자 간의 관계 형성 방안 등을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농촌형 교통모델의 한계인 면허방식, 기타 전세버스 등 타 사업자도 참

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수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에 다양한 유형의 차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여객사업법 등 법제도 정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대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버스형, 택시형 사업 외에 급증하고 있는 개인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단거리 이동 및 생활교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농촌형 교통시스템 발굴 필요(버스정류장의 개인교통수단 보관 및 전기충전 등)
- 농어촌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
- 기초생활 인프라는 도로개설, 도서관 신축 등 매우 다양한 기초시설 개선 및 설치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 간의 중복성도 나타날 수 있음.
 - 우선적으로 생활편의와 안전에 중점을 둔 사업 위주 지원, 경제활동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시설 지원 등으로 구분 및 만족도를 측정해 보는 것이 필요함.
 - 기초생활 인프라의 범위 및 최저기준의 적정성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 지역의 정비 및 보급 수준을 평가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 재정 여건이 취약한 낙후지역일수록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의 중요성이 높은 편임.
 - 시·군 계획에 의해 제안되는 방식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용수 중요도 및 사업 우선순위 등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생활용수의 장기적 활용(인구 변화, 토지이용 변화)과 타 인프라의 복합개발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도입방안 검토 필요

□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정책군

-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지표인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는 공식통계의 변경으로 더이상 측정이 불가하며, 지표 자체가 농어촌의 실태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어 향후 농어촌 주거수준을 계량할 수 있는 주거기준 마련과 장기적인 데이터 수집·분석·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폭한·폭염 등 기후 재난에 농어촌 지역 고령자의 주거 취약성이 증대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 주택의 쾌적성 확보가 필요함.
 - 이를 위해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생활홈 등을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리모델링하여 이용자의 쾌적성 확보 및 이산화탄소배출 저감하는 방안을 제안함.
 - 농어촌 주택의 품질확보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절감형, 장기적으로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을 위하여 농어촌주택 개량융자금 지원을 받는 주택에 대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재생에너지를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이용하고 매전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여 지역 내 에너지 자립과 소득과 연계하는 에너지 전환마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 취약계층의 주택은 입식부엌, 입식화장실 개선과 창호 교체, 도배·장판, 페인트 등 단순 수리로 해결되지 않는 노후 주택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최근 사업 대상이 마을회관·경로당 등 마을 공동이용 시설까지 확대된 만큼, 주민 수요나 활용도가 높은 공동시설에는 지원을 보다 확대하여 에너지 효율과 농어촌 환경·경관 등에도 기여하는 정비 모델을 만드는 등 선도적인 주거여건 정비 방향이 모색되어야 함.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중심으로 LPG 배관망 공급사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안전관리 의무는 강화되지 않아, 이를 개선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사업은 기존 집단공급과 달리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배관을 지중 매설해 LPG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매설배관의 시공감리, 배관보호 및 사후관리, 안전관리 대행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집단공급 사업보다 더 엄격한 안전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한 실정임.

- 슬레이트지붕 철거의 경우, 현재까지의 추세대로라면 정부가 설정한 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전체 슬레이트 건축물의 13.5%에 불과한 수치이므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과 재정 지원이 요구됨.
 - 실제 슬레이트 철거는 농어촌 주택 정비, 집 고쳐주기 등 다른 사업을 통해서도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음. 관련 사업의 실적과 예상 실적 등을 종합하고 목표치를 설정하여 슬레이트 전면 철거의 시기를 앞당기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4.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4.1.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전체 평가 결과

4.1.1. 정책 목표 달성도

- (정책 목표 합리성) 전반적으로 농어촌의 일자리와 농업인력 문제 심화에 대응하여 농어촌 일자리 정책과제와 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였으나, 사업의 파편화, 목표 설정에서 일부 미흡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 개별 사업의 정책 목표가 매우 유사하고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을 정책군 단위에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제고가 요구됨.
- (정책 집행 실적) 대부분 사업이 계획대비 예산 집행률이 100% 이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개선사항으로 지자체의 예산집행 저조가 지적되고 있음.
 - 정책 집행 실적의 평가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집행 과정) 중앙정부가 농어촌 일자리 확대와 농업현장의 부족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음.
 - 공모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실제 정책 집행과정에 농촌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확대되어야 함.
 - 부처 간, 중앙·지역 간, 지역민간단체 등과의 체계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목표 달성)대부분의 사업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는 사업 실적을 조기에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성과지표가 대부분 투입측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목표와 성과지표가 불일치하여 사업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 새일센터의 경우는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목표가 제시되지 않음.

- (파급효과)제3차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관련한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하여 실행이 이루어지는 등 사업의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관련정책 목표 달성에 따른 파급효과 평가를 위해 농촌 삶의 질에 대한 주민 인식 및 만족도 변화, 농어촌 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변화를 보면, 추세적으로 증가했지만 총점 대비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이 필요함.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정책에 대한 농촌주민의 만족도는 100점 척도로 2015년 41.9, 2016년 42.5, 2017년 46.8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만족도 점수가 50점 미만으로 과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4.1.2. 삶의질 개선 현황

- 6차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12개의 성과지표는 ① 지역에 적합한 6차산업화 육성 관련 성과지표 5개, ②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관련 성과지표 4개, ③ 농수산물 가공 및 新유통 활성화 관련 성과지표 3개로 성과지표 달성률은 2017년 전국 수산가공지원시설 연매출 증가율 평균치를 제외하고는 모두 100% 이상으로 높게 달성되었음.

- 창업 촉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지표들의 달성률은 농촌 전통지식 발굴 및 활용 지원에 대한 지표들(전통지식자원 발굴 건수 및 콘텐츠 개발 건수)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 이상으로 높게 달성되었음.
- 농어촌 서비스기준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핵심 항목이었던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의 국가최소기준인 시·군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100점 척도 기준 2016년 67.4에서 2017년 75.4로 개선되었음.
- 제3차 기본계획상 7대 부문별 평가지표들 중에 6차산업화 관련 대표 지표로 제시되었던 것 중 6차산업화 지구수(누계)는 2015년 9개, 2016년 13개, 2017년 16개로 증가하였고, 6차산업 사업자 인증 수는 2015년 802개, 2016년 1,130개, 2017년 1,397개로 증가함.
-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관련한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하여 실행 단계에 들어선 것은 유효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와 협력하여 농업인력중개센터를 전국 50개 소 설치하는 등 2018년 신규 사업을 확대하여 시행
 - 법무부: 계절근로 외국인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6년부터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2017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하여 시행. 2016년 6개 지자체, 219명, 2017년 20개 지자체, 1,175명, 2018년 31개 지자체 2,277명 등으로 지원 인력 확대
- 농어촌 관광 정책군은 성과지표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국내 관광 중 농촌 관광 비중)’를 설정함. 2014년 829백만 명 대비 2019년 980만 명을 목표로 제시하였는데, 2016년에 이미 1,001만 명을 유치하여 당초에 설정한 목표를 달성

- 관광두레 조성 사업은 주민 교육 및 컨설팅, 전문가 멘토링이 매년 정례적으로 진행되었고, 본 사업의 홍보 관련 2016년에 TV 방송 7회, 신문보도 8회, 온라인 보도 404회가 실시되었음. 또한 2016년에 한국정책기획평가원과 한국행정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체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 및 컨설팅, 멘토링, 언론 홍보 지원이 우수하게 진행됨.

4.2.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정책군별 평가 결과

4.2.1. 6차산업화 활성화

□ 정책군 개요

- 6차산업화 관련 정책군(총 17개 사업)의 정책 목표는 크게 향토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기반 마련(12개 사업)과 농어업인의 창업 촉진 및 사업화 지원강화(5개 사업)로 구분이 됨.
- 지역에 적합한 6차산업화 육성 기반 마련
 - (6차산업 추진체계 정비 및 역량 제고)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5년 단위), 지역별 마스터플랜 마련,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9개소)구축, 지자체 포괄보조사업(농촌복합자원화사업 등)의 사업 추진체계 및 평가 체계 개선
 - (6차산업화 관련 현장 규제 지속 발굴 및 개선) 농업인 제조·가공 표준 조례 및 규칙(안) 마련, 신규 규제 특례를 발굴하고 법제화도 추진
 - (6차산업화 기초통계 정비)통계기반 구축, 시장과 변화 추세 조사 연구 지원

-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 규제 특례 및 조세·재정지원 등을 통해 연관 산업이 융복합된 지역특화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내실화 및 성과관리 체계화를 통한 효과성 제고

- 농수산물 가공 및 신(新)유통 활성화
 - 제조·가공 시설 현대화와 제품 개발 등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시설 현대화 및 원료 매입 등 운영자금 융자 및 식품 포장 디자인 등 지원
 - 농산물 가공산업의 융복합 기반 조성을 위해 가공업체 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농어촌 융복합 신규 식품산업 육성 위한 창업지원센터 설립 등 지원
 -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 지원으로 ICT·BT 기술 융합을 위한 연구 지원, 식품산업의 전통적·한류적 브랜드 개발 및 가치체인 확대 지원
 - 지역 내 농식품의 생산·유통·소비를 연계하는 로컬푸드 확산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로컬푸드 조례 제정 확산 추진

- 사업 주체별 맞춤형 지원
 - 6차산업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맞춤형 컨설팅 지원, 창업교육과 창업장 조성 지원
 -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사업체 창업·운영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고, 농촌현장포럼을 통한 마을개발과 6차산업화의 연계 강화
 -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농촌관광, 휴양사업까지 영역 확대

○ 지역에 적합한 6차산업화 육성

- 경쟁력 있는 주체 육성을 위해 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를 실시하고, 분야별 전문가 풀(pool)을 활용하여 6차산업화에 필요한 전문 분야별 현장 코칭 지원 강화
- 경영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창업-성장-성숙 등 단계별 자금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전후방 연관사업을 조사하여 발굴·육성
- 6차산업 제품의 소비자 접촉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별 안테나숍을 통한 우수제품의 시장조사, 대형마트 등 소비지 매장을 활용한 판매 지원

〈표 2-9〉 6차산업화 관련 정책군의 정책 목표와 세부 사업

목표	세부 사업	비고
향토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기반 마련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	
	6차산업 모델 정착	
	어촌 6차산업화 지원	
	농업인의 제조·가공활동 규제완화	2017년부터 미시행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규제특례 발굴	2016년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운영
	6차산업화 지구 조성	2018년부터 농촌융복합(6차)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수산물전자직거래 활성화	2016년부터 미시행
	로컬푸드 확산	
	수산정보이용 활성화	
농어업인의 창업 촉진 및 사업화 지원강화	6차산업화 창업지원	2018년부터 농촌융복합(6차)
	소규모 농업인의 창업 및 소득화 지원	
	산림분야 6차산업 육성	
	6차산업 경영체의 맞춤형 지원 강화	2018년부터 농촌융복합(6차)
	농촌 전통지식 발굴 및 활용지원	

□ 평가 결과

가. 정책 형성에 대한 평가

<정책 목표 합리성>

- 정책적 목표는 적절하지만, 개별 사업의 목표가 큰 차별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 사업별로 정책 목표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개별 사업의 정책 목표가 매우 유사하고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을 정책군 단위에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제고가 요구됨.

<목표·수단 연계성>

- 제2차 삶의 질 계획에서 6차산업화의 인프라 확충이 충분히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차 삶의 질 계획에서도 여전히 인프라 확충이 중심이 됨.
 - 사업수단이 인프라 확충에 집중되어 있어서 향후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보다 다양한 수단의 모색과 도입이 요구됨.

나.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

<정책 집행 실적>

- 대부분 사업에서 당초 계획대비 예산을 적절히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 및 미흡사항으로 지자체의 예산집행 저조가 지적됨.
 - 정책 집행 실적 평가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

<정책 집행 과정>

- 대부분 사업이 중앙정부가 매뉴얼을 마련하고 공모하는 형태로 추진되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기 곤란함.
 -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 농업인과 농촌주민이 참여하는 통로가 매우 제한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임.

다.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목표 달성 여부>

- 대부분의 사업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성과지표가 대부분 투입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큰 의미가 없음.
 - 특히 당초 사업목표와 성과지표가 불일치하여 사업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 예를 들면, 지역에 접합한 6차산업화 육성 관련 5개 성과지표는 특화농공단지수, 시범농가매출액 증가율,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추진, 어촌 특화지원센터 지정, 신규지역특구지정수인데, 성과지표들의 달성률은 2016년 100~200%, 2017년에는 100~140%로 모두 높게 달성되었음.

<파급효과 여부>

- 6차산업화 관련 정책군은 주로 농가 및 개별 영농법인을 단위로 추진되어 지역차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실제 6차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시·군 및 시·도 차원의 사례발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관련 정책 목표 달성에 따른 파급효과 평가를 위해 농촌 삶의 질에 대한 주민 인식 및 만족도 변화, 농어촌 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변화를 분석했는데, 이들은 추세적으로 증가했지만 총점 대비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이 필요함.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정책에 대한 농촌주민의 만족도는 100점 척도로 2015년 41.9, 2016년 42.5, 2017년 46.8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만족도 점수가 50점 미만으로 과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4.2.2. 농어촌 일자리 활성화

□ 정책군 개요

- 제3차 농어촌 삶의 질 계획에서 농어촌 일자리 정책군의 사업은 직접적으로 농산업 인력의 매칭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음.
 - 과제내용은 ① 일손부족 해소, ② 농어촌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여건 개선, ③ 공동체사업 활성화의 3가지로 구분됨.

- (일손부족 해소) 농산업에 필요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 농어촌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함.
 - 도-농협력 일자리연계(지자체), 인력은행 등 매칭 지원(농협) 등
 - 내국인으로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이 농어업 부문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정을 확대하고 배정 시기, 근무처 추가제도 등 제도 개선과 처우 개선을 추진함.
 - 근무처 추가제도는 2019년 200 농가에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농어촌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여건 개선) 농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각적인 일자리 창출과 일하는 여건을 개선함.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고용촉진 사업을 지원·추진함.
 - 농촌 지역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농촌 지역 “새일센터”를 2014년 9개소 추진하였고, 이후 확대함.
 - 농어촌 소재 중소기업 등에 신규근로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실시함.

- (공동체사업 활성화) 농어촌의 공동체성을 발휘하여 지역민의 연대·협력을 통해 자립적 일자리 창출을 추진함.
 - 어메니티·환경개선, 체험·관광, 사회복지서비스 등 농어촌 인구구성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마을단위 공동경영체를 주요한 육성 대상으로 인식하였으며 2012년 2,600개소를 2017년 4,000개소로 확대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음.
 - 공동 농작업 조직 구성을 통해 규모화된 영농을 수행. 들녘별경영체를 2014년 158개소에서 2017년 300개소로 확대함.

- 해당하는 세부 추진사업은 5개이며, 2015년 795.5억 원에서 2018년(예산) 1,111.4억 원으로 증가하였음.

〈표 2-10〉 농어촌 일자리 정책군 추진 사업 목록

구분	사업명	담당부처	주요사업 내용	투자액(억 원)			
				2015	2016	2017	2018
일손 부족 해소	도·농협력 일자리연계	농림축산식품부	권역별 농산업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농업인력 중개 기반 구축 및 중개사업 실시	19.0	57.3	29.2	29.0
	외국인 근로자 근무처 추가제도 활성화	고용노동부	농한기에 외국인력이 필요한 다른 사업장에 고용되도록 하여 외국 인력 활용에 도움	9.4	9.4	9.5	9.5
	(외국인) 쿼터확대 및 외국인근로자 처우개선	고용노동부	외국인 비전문 취업 쿼터 배정, 기능수준평가,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관리 교육 [비예산]	49.6	86.8	80.6	64.4
일자리 창출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지정·운영	여성가족부	농어촌지역 경력단절 여성 취창업지원을 위한 농어촌형 새일센터 운영	627.5	645.3	683.2	744.9
공동체 사업 활성화	들녘경영체	농림축산식품부	50ha 이상 들녘의 규모화, 조직화 및 공동경영을 통해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 농지 인력 자원활용 사업다각화	90.0	195.5	245.4	263.6
합계		3개부처		795.5	994.3	1,047.9	1,111.4

주: 투자액은 국비, 지방비, 기타를 포함한 총액이며, 2015~2017년은 결산액, 2018년은 예산액임.

자료: 각 년도 “농어촌 삶의질 향상 시행계획”의 예산액을 집계

□ 평가 결과

가. 정책 형성에 대한 평가

<정책 목표의 합리성>

- (정책 목표 인식) 전반적인 농업인력 문제의 심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 설정 등 유효한 목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들녘별경영체 사업 포함의 문제) 들녘별경영체의 경우 공동경영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논농업 규모화 추진 등 산업적 목적의 사업임에도 삶의 질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본 계획 목적과 거리가 있는 설정으로 판단됨.
 - (농어촌형 새일센터는 관련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 농어촌형 새일센터는 목표개수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였음.

<목표-수단 연계성>

- 농어촌 일자리 지원은 “알선·소개”와 새로운 “일자리창출”의 2가지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음.
 - (도·농 협력 일자리 연계)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으나 농작업 특성상 인력부족 직면문제 해소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농산업인력지원센터) 2016년 선정 이후 “신규 수요가 없어” 사업이 종료되었고 2018년으로 국비 지원이 종료됨. 현장 노동부족 애로를 해소하는 주요한 정책과제이나 이후 추진과 관련한 대책·계획이 부재한 점은 매우 큰 문제요소로 판단됨.
 - (외국인 인력지원) 외국인 인력지원의 체계화 필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으나, 본 계획 기간 중 혁신적 활동 노력은 다소 미흡

나.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

<정책 집행 실적>

- (예산집행) 사업 예산은 국비 및 지자체가 투자를 시행하였고, 예산 집행은 당초의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된 것으로 평가됨.

<정책 집행 과정>

- 중앙정부는 농업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고, 청년·여성 등 농어촌 미래 세대와 취약 구성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부처 간 협력, 협의 체계 필요) 인력 문제는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며, 위원회 등 관련 활동이 존재하나 보다 체계적인 협력 필요
 - 외국인 노동력은 “외국인력정책 위원회”[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를 운용하여 범 정부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특히, 주무부처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갖추어갈 필요가 있음.

다.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목표 달성 여부>

- 도·농 연계 일자리 지원(농산업인력지원센터)의 사업목표치인 10만건/연 인력알선 목표는 2017년 15만 9천 건의 실적으로 조기에 달성하였음.
- 농축산업 부문의 외국인 인력 쿼터 확대와 근무처 추가 제도 활용 확대 측면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였음.
 - 특히 외국인 취업자 근무처추가제도의 경우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파악됨. 제도 활용에 따른 각종 행정처리의 번거로움 등 실행 여건이 미비함.

- 농어촌형 새일센터의 중요성에 비해 센터의 수가 확대되지 않은 것은 문제 요소이며 성과지표에도 2014년 이후 농어촌형 새일센터 지정 목표가 제시되지 않음.
 - 모든 농어촌형 새일센터에 창업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았으며,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공동경영체와 같은 창업이 부족하며, 지원도 미비

<파급효과 여부>

- 농업인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계획에서 포함하고 있는 인력지원 사업의 성과와 달리 일선 농업현장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됨.
 - 2018년 제3차 계획 종합평가를 위한 설문에서 7점 만점 척도에서 “농촌 내 일손이 부족하다” 5.9점으로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
-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하여 실행단계에 들어선 것은 유효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계절근로자제도의 도입 및 확산에 주목하며, 농업 주요 산지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인력지원을 확대하는 등 관련 문제 해소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전개됨.

4.2.3. 농촌관광 체계화 및 품질제고

□ 정책군 개요

- 본 정책군은 농촌, 어촌, 산촌 지역을 공간대상으로 농식품부, 문체부, 농진청 등 5개 부처·청의 14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들 14개 사업은 세부 내용을 고려하면 아래 <표 2-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농어촌 관광추진체계 정비, 농어촌 관광 품질제고 및 역량 강화, 농어촌 관광 다변화 3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2-11〉 농어촌관광 정책군 추진 사업 목록

목표	사업명	소관부처
농어촌 관광추진체계 정비	관광두레 조성	문체부
	농촌 체험휴양 기반 확충	농식품부
	농어촌 체험휴양 기반 확충	해수부
	산림휴양 치유 공간 조성	산림청
농어촌 관광 품질제고 및 역량 강화	농어촌 관광 품질 제고	농진청
	농촌관광 품질 제고	농식품부
	어촌관광 활성화	해수부
농어촌 관광 다변화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농식품부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	산림청
	말산업 육성지원	농식품부
	음식관광활성화	농식품부
	슬로시티 녹색관광 자원화	문체부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농식품부
	농촌유학 활성화	농식품부

○ 농어촌 관광 품질제고 사업

- 주요 사업 내용은 농어촌관광 관련 상품개발 및 현장적용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연도별로 정책 수요에 따라 연구 주제들이 변화되어 왔음.
- * 2017년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야외 여가활동의 농촌관광 연계 방안 연구, 농촌관광 현황분석 및 자유학기제 연계 농생명 진로프로그램 개발, 농촌마을 직거래사업장 디자인 개선 및 우수 포장디자인 발굴·확산 수행
- * 2018년은 농촌자원의 치유관광 활용기술 개발 및 현장적용 연구,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농생명 산업 진로지도 프로그램 연구, 농촌관광 현황 및 변화추세 연구, 농촌마을 농특산물 직거래사업장 디자인 개선 연구 진행

○ 관광두레 조성 사업

- 본 사업은 지역 주민이 직접 관광사업체를 구성하여 숙박, 식음, 체험 등 관광비즈니스를 운영하도록 창업 및 경영개선을 지원하는데 있음.

- 주요 사업 내용은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발굴 및 육성, 관광두레 PD 역량 강화, 주민 역량교육·컨설팅·전문가 멘토링 등임. 연도별 세부 추진사업들에 변화가 있는데, 신규 추진사업과 폐지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불분명해 보임.
 - * 2017년은 관광두레 신규 PD 및 지역 선정, 관광두레 멘토단 운영,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선정, 관광두레사업체 청년 캠프 운영, 산학연 연계 청년 서포터즈 운영, 관광두레 전국대회, 관광두레 사업 평가 등 진행
 - * 2018년은 관광두레 선발 지역을 10개소 추가, 자생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준비-창업-발전 단계로 나눈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강소주민사업체 집중 홍보·관로개척 지원, 청년 PD 신규 선발로 청년 중심의 주민사업체 육성 토대 마련, 주민사업체 아카데미 및 지역관광 두레지원센터 구축 등 추진
- 농촌 체험휴양 기반 확충 사업
- 본 사업은 도시와 차별화된 농촌 특유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휴식, 체험공간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음.
 - 주요 사업 내용은 농촌테마공원 조성, 농촌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전문가 컨설팅 등임. 연도별로 세부 추진사업들에 변화가 있는데, 신규 추진사업과 폐지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불분명해 보임.
 - * 2017년은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실적이 저조한 농촌테마공원에 대한 모니터링·컨설팅 실시, 지자체 워크숍을 통해 담당자 업무역량 및 사업관리 강화, 지자체 관련사업 연계 및 민간연계 활성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추진
 - * 2018년은 농촌테마공원 추진현황 조사, 신규지구 사업성 검토, 현장 모니터링 및 전문가 컨설팅,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등 추진

□ 평가 결과

가. 정책 형성에 대한 평가

<정책 목표의 합리성>

- 본 정책군의 목표는 ‘농어촌 관광의 참여주체와 인프라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역량 부족 및 단조로운 프로그램 등으로 농어촌 관광의 확대에 제약이 있는 현상에 대응하여 농어촌 관광의 체계화 및 품질 제고를 통해 농어촌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임.
 - 정책의 목표는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상위 목표인 ‘농어업·농어촌 자원의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음.

<목표-수단 간 연계성>

- 농어촌 관광의 체계화 및 품질제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어촌 관광 추진체계 정비’, ‘농어촌 관광 품질 제고 및 역량 강화’, ‘농어촌 관광 다변화’를 제시하고 있어 목표-수단 간의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됨.
 - 목표 달성을 위해 전술한 3개 주요사업 외에도 11개 세부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나.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

<정책 집행 실적>

- 농어촌관광 품질 제고 사업은 2016년의 경우 예산 집행을 100%, 2017년 100%로 예산 집행 측면에서 우수
 - 관광두레 조성 사업은 지역주민(주민사업체), 지자체, 관광두레(PD) 등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판단됨.
 - 농어촌체험휴양기반 확충 사업은 시·군·구 지자체에서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 사업관리 및 운영 등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판단됨.

<정책 집행 과정>

○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

- 농어촌관광 품질 제고 사업은 농어촌관광 관련 상품개발 및 현장적용 연구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워크숍 및 세미나 등 정책홍보가 일부 실시된 것 외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홍보, 집행과정 개선, 정책 환류 등이 다소 미흡

* 관광두레 조성 사업은 TV·신문 홍보 등 전체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 및 컨설팅, 멘토링, 언론 홍보 지원이 우수하게 진행

○ 지자체 차원의 노력

- 농어촌관광 품질 제고 사업은 농어촌관광 관련 상품개발 및 현장적용 연구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 제정 및 지원체계, 중간지원조직 운영, 관련 정책 연계 추진 등 자구적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
- 관광두레 조성 사업은 사업추진체계상 기초 지자체의 지원협력이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관심·역할 미흡 등이 지적됨.
- 본 정책사업군 및 정책사업군 내 사업별로 연차별 추진 로드맵이 부재하여 집행과정을 방향성을 갖고 연도별로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다.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목표 달성 여부>

- 농어촌 관광 체계화 및 품질 제고 정책군은 성과지표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국내 관광 중 농촌 관광 비중)’를 설정. 2014년 829백만 명 대비 2019년 980만 명을 목표로 제시하였는데, 2016년에 이미 1,001만 명을 유치하여 당초에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판단됨.

<정책 파급효과>

- 본 정책군의 추진을 통해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관광 상품 개발에 상호 학습과 노하우 축적’, ‘관광두레 등을 통한 관광비즈니스 관련 협업체계 구축’, ‘농어촌 관광등급 평가를 통한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 및 사업주체 자발적 참여 유도’ 등의 효과를 창출

4.3.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과제 및 정책 제언

4.3.1. 개선과제 및 정책 제언

□ 6차산업 활성화 정책군

(1) 6차산업 고도화 방향 수립

- 3차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에서 6차산업화 관련 정책군 사업들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더욱 공고화하는 ‘6차산업 고도화’로 방향 제시 필요
 - 6차산업화 관련 정책들의 실효성과 내실화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들의 연계성(연결과 협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6차산업화의 구성요소들인 1차·2차·3차 산업간의 융복합의 실제적인 효과를 내도록 돕는데 필요한 정책 간 연결과 협력이 필요함.

(2) 6차산업화 관련 정책 사업들 간의 연계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평가

- 6차산업화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관련 정책들 간의 연계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계성 정도를 평가 및 지원방식의 차별화 필요
 - 삶의 질 향상 계획의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성과지표로 정책 간 연계성 정도에 대한 평가방안(관련 정량·정성지수 개발 등) 필요
 - 연계성 정도(상·중·하 등)에 따른 정책지원시 인센티브 제공 등 연계를 강화할 유인책 강구 필요

- 특히 10년 이상 지속된 사업의 경우 일몰 혹은 지방정부 이관 필요
 - 6차산업화 관련 정책군의 세부 사업은 유사중복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일몰화하거나 패키지화할 필요가 있음.

(3) 지방분권화에 기반한 6차산업화 관련 사업 추진

- 6차산업화 관련 정책은 지역별 농어촌 자원에 기반을 둔 융복합산업화 정책으로 지역단위 특화산업화 전략 등 지역에 기반을 둔 정책인 만큼 지역단위 추진체계가 중요하지만 그간 정책 집행 방식은 그렇지 못했음.
 - 지역단위 6차산업화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사업들의 집행과 결과에 대한 평가, 환류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운영되어야 함.
 - 중간지원조직인 6차산업지원센터와 지자체, 중앙정부, 그리고 지역단위 경영체 및 유관기관들 간의 협력체계와 운영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체계가 필요함.
- 6차산업화 정책군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 매뉴얼식 방식을 탈피하고, 포괄보조사업 형태로 변화해 지방정부의 자율성 제고가 요구됨.
 - 매뉴얼식 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있음. 특히 지특회계 사업의 경우도 중앙정부 주도식으로 집행되는 문제가 있음.
 - 현재는 중앙부처로 사업이 나누어져 있어 농업, 임업, 어업의 유사사업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4) 다양한 소득원 개발 및 일자리 창출 강화

- 6차산업화 정책군의 사업내용을 기존 하드웨어 지향에서 탈피하여 제4차 삶의 질 향상 계획에서는 내용적 다변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됨.
- 6차산업화 정책군의 내용을 기존 가공 중심에서 탈피하여 다기능적 농업의 관점에서 사업 내용의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농어업과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농촌교육과 농촌관광 등의 프로그램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농업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사회적 농장을 중심으로 한 6차산업화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5) 민간의 참여확대를 통한 사업의 지속성 증대 필요

- 6차산업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모든 분야에 시행할 수 없는 기본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6차산업화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초기 지원과 이후에 지역 기업의 활발한 활동에 의한 민간의 주도적인 형태로 전환되어야만 지속적인 발전을 달성할 수 있음.
 - 6차산업화 정책도 농어촌 지역에서 다양한 민간단체나 기업의 참여를 장려하는 형태로 실시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향후 직접적인 자금지원의 형태에서 탈피하여 점차적으로 기술개발, 인력양성, 정보제공 등 간접적인 형태의 지원으로 변화되어야 함.

□ 농어촌일자리 활성화 정책군

(1) 농작업 애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지속 추진

-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책정) 내국인, 외국인을 포함 심화되는 농작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인력 풀의 확보, 농작업 여건 개선 등이 병행 추진되어야 함.
- (농업분야 외국인 인력 운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책 재정비) 기존 3차 계획에 포함되었던 외국인 쿼터 확대를 실질화하고, 계절노동자제도 등 신규로 도입된 제도·사업들을 제4차 계획에 반영하여 확대함.
-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현재 6개소에 불과한 농어촌형 새일

센터를 2024년까지 14개소 추가 설립을 목표로 설정해야 함. 더불어 농어촌형 새일센터 확대에 따른 전문인력 육성 및 발굴 계획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농촌관광 여성전문인력 양성·교육) 농촌관광과 같은 3차 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이 부족함. 이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여성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관련 목표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을 위한 부처, 지역 협력 추진 체계 강화

- (부처 간·지역 간 협력 강화) 인력 및 일자리 문제는 사람의 이동, 직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임.
 - 부처 간, 중앙-지방, 지방 간 협력 등 다양한 추진 모델이 마련되어야 함.
 - * 예시: (외국인노동자) 국무총리 인력조정위원회,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협업에서 농업 인력 관련 농식품부의 중장기 계획 정비 및 관련 지원 체계를 강화
 - * 예시: (새로일하기센터) 여성농업인 역량증진을 위해 농정원, 지방농촌진흥기관 간 협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력. 농식품부 지자체 단위 “농촌형” 새일센터 지원 지침 및 관련 지원사업 개발
- (지자체 실행 단위에서 부서간 일자리 행정사업의 연계 활성화) 중앙 단위의 협력·협업 체계 구성 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문제해결 지향의 종합·통합적인 사업을 적극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형 새일센터가 직영운영체계라는 강점을 활용하여 경제과, 농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등 타부서의 일자리 행정사업과 연계를 활성화하고 이장, 부녀회장, 청년회, 노인회 등 행정라인을 통해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인적자원 혁신과 사회적경제 기반의 지원 체계 확립

- (기반, 활동 등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 특히 소프트웨어적 지원 체계 확립) 사업별로 지원 목적에 차이가 있으나 근본적으로 인적 자원의 개발(교육, 현장 적응, 자립 등) 관점에서 조화된 지원 방식을 마련해야 함.
- (농촌여성 직업 교육 훈련 과정 편성 개선)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 교육 훈련 과정은 지역의 일자리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편성되고 있음.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사업’에서 제시하는 직업 교육 훈련 과정 목록에서 지역에 가장 적합한 과정을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함.
- (농촌인력지원의 사회적 경제 연계 확대) 농업경영체 수요측과 농작업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모델의 유효성도 확인되고 있음.
 - 전라북도·무주군의 “공동체활성화지원단” 등 청년층의 참여를 촉진하고, 복지·문화·교육 등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로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 확대

□ 농촌관광 체계화 및 품질제고 정책군

(1) 농어촌관광 등급제 체계화

- 현재 농어촌관광 등급제는 정부 주도로 농어촌관광 마을 등급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등급제 기준이 소비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농촌관광마을 숙박인프라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호텔, 콘도, 펜션 등 타 숙박시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등급제기준을 상향하여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장기적인 농어촌관광 숙박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농어촌관광마을

중심에서 개별 민박 경영체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므로, 민박 경영체를 중심으로 농어촌관광 등급제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2) 농가민박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 강화

- 농어촌관광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농가민박은 시장의 질서에 맡겨둘 경우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농가민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민박 농어가는 영농을 하면서 부족한 소득을 숙박업 통해 보충하고 있기 때문에 숙박 규모를 제한시켜 전문숙박업과 구분하여 육성하고 있음
 - 그러나 농가민박과 경쟁 상대에 있는 전문 숙박업자(펜션)의 경우, 신고는 농가민박으로 하고 운영·간판은 펜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함.
 - 따라서 농가경제 다각화를 지원하는 농가민박의 원래 취지를 고려하여 농가민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타 전문숙박업과의 차별이 필요함.

(3) 체험농장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농촌체험농장은 농촌진흥청의 농촌교육농장사업을 시작으로 10,000여 개의 개별체험농장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함.
 - 체험학습, 가족여행 증대로 농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 창출 및 경영다각화에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음.
 - 그러나 체험농장에 대한 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체험농장의 질적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아래와 같은 법적 지원이 필요함.
 - ① 농어촌정비법의 휴양관광사업의 범위에 농어촌체험을 포함
 - ② 도농교류촉진법에서의 개별 체험농가포함
 - ③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가부업의 범위에 포함
 - ④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농촌체험과 교육농장 운영을 농업서비스로 분류

(4) 농어촌 관광 사업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에 부합하도록 본 정책군의 추진방향을 개선
 - 본 정책군은 5개 부처·청의 14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여러 세부 과제를 연계·패키지화하여 다년간 체계적·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유도할 필요
 - 지방분권의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지역주도의 사업기획, 집행 및 관리를 확대하되,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컨설팅, 주민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할 필요
 - 농어촌 관광 수요 변화 고려 및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별 시·군의 경계를 넘어선 광역단위의 지자체 간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개별 시·군의 역량을 상호 보완하고 성과 창출을 극대화
 - 동 사업군 내에 농식품부, 농진청, 해수부 간에 사업명이 유사한 사업을 사업내용에 맞게 명칭을 수정하거나 사업 내용을 조정·통합하는 방안을 검토·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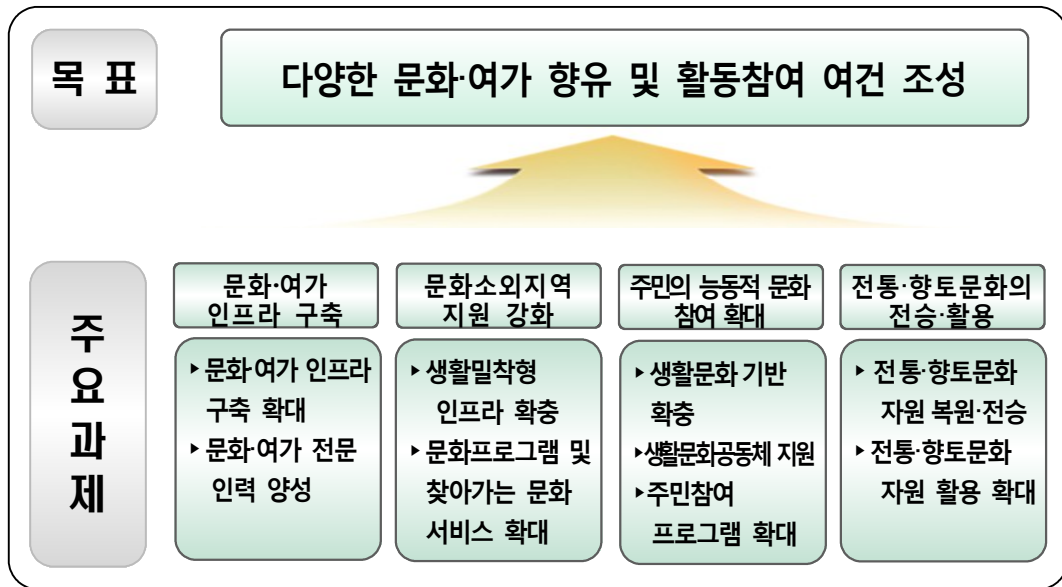
5. 문화·여가 부문

5.1. 문화·여가 부문 전체 평가 결과

5.1.1.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문화·여가 부문 개요

- 다양한 문화·여가 향유 및 활동참여 여건 조성을 목표로 4개 정책군에 대한 주요과제 추진
 -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확대, 문화·여가 전문 인력 양성
 - 문화소외지역 지원 강화: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충, 문화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 확대
 - 주민의 능동적 문화 참여 확대: 생활문화 기반 확충,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 전통·향토문화의 전승·활용: 전통·향토문화자원 복원·전승, 전통·향토 문화자원 활용 확대

〈그림 2-4〉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문화·여가 부문의 목표와 주요 과제



-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기간 5년간 문화·여가 부문의 투융자액은 총 17,803억 원으로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총 투융자액의 약 3.8%에 해당
 - 문화·여가 부문의 연평균 투융자액은 3,560.6억 원으로 이는 제2차 삶의 질 향상 계획 마지막 년도인 2014년의 투융자액 1,529억 원에 비해 약 2.3배 증가

5.1.2. 정책 목표 달성도

- 문화·여가 부문은 총 5개의 평가지표를 통해 매년 정책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고 있음.
 - 생활문화센터 조성, 농어촌 문화마을 지정, 문화소외지역 생활문화 공동체 지정,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프로그램 수, 문화예술 관람율
- 대체로 매년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나 ‘문화소외지역 생활문화 공동체 지정’은 2019년까지 120개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됨.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문화소외지역 생활문화 공동체 지정 누적 수는 27개로 2019년까지의 누적 목표 120개의 22.5%에 불과함.
- ‘농어촌 문화마을 지정’과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프로그램 수’는 매년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는 반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추진 실적이 목표를 조금 하회하고 있음.

〈표 2-12〉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문화여가 부문의 성과지표 달성 목표와 실적

평가지표	제2차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문화여가 부문				
	2014년 (목표/실적)	2015년 (목표/실적)	2016년 (목표/실적)	2017년 (목표/실적)	2018년 (목표)	2019년 (목표)
생활문화센터 조성(개소)	16 / 26	48 / 47	70 / 67	92 / 81	95	138
농어촌 문화마을 지정(개소)	- / 2	13 / 13	23 / 29	32 / 32	25	50
문화소외지역 생활문화 공동체 지정 (개소: 누계)	13 (실적)	13 (실적)	13 (실적)	11 (실적)	미확인	120 (누적목표)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프로그램수(개)	- / 1,574	1,800/ 2,081	2,400/ 2,657	2,750/ 2,832	2,800	3,000
문화예술 관람률(%)	71.3 (실적)	- (2년주기)	78.3 (실적)	- (2년주기)	미확인	73

- 국가 최소기준이라 할 수 있는 농어촌서비스기준 문화·여가 부문 상의 정책 목표는 2017년 기준 91.3% 달성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제2차 삶의 질 향상 계획 기간의 마지막 년도인 2014년에 비해 목표 달성도가 다소 감소하였음.
 -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제주의 경우 해당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으며 전북의 목표 달성도가 2017년 69.2%로 가장 낮음.
 - * 문화·여가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 농촌 주민 6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의 2018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여가 부문 4개 정책군 중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1순위로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정책군이, 2순위로 ‘주민의 농동적 문화참여 확대’ 정책군이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보임.

〈표 2-13〉 문화·여가 정책 과제 중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구분	인프라 구축	문화소외지역 지원 강화	주민의 능동적 문화참여 확대	전통 향토문화의 전승 활용	전체
1순위	223(34.8%)	191(29.8%)	146(22.8%)	80(12.5%)	640(100%)
2순위	109(17.4%)	144(23.0%)	196(31.3%)	178(28.4%)	627(100%)

- 반면 성과가 가장 우수한 정책군에 대해서는 1순위로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정책군이, 그리고 2순위로 ‘전통·향토문화의 전승·활용’ 정책군이 가장 높은 응답비중을 보였음.

〈표 2-14〉 문화·여가 정책 과제 중 성과가 가장 우수한 정책

구분	인프라 구축	문화소외지역 지원 강화	주민의 능동적 문화참여 확대	전통 향토문화의 전승 활용	전체
1순위	247(41.2%)	123(20.5%)	127(21.2%)	103(17.2%)	600(100%)
2순위	68(11.8%)	149(26.0%)	160(27.9%)	197(34.3%)	574(100%)

- 동일 설문조사(2018년) 결과에 따르면 향후 필요한 정책으로 전통문화 계승, 인프라 시설 구축,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확대 및 소외지역 지원, 문화프로그램 확대 및 주민참여 확대의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음.

5.1.3. 삶의 질 개선 현황

-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 중 문화·여가 부문에 대한 농촌 주민들의 주관적 만족도가 5.2점(10점 척도)으로 가장 낮음.
- 2017년 농촌 주민 1,9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안전 부문이 6.5점으로 가장 높고 그 뒤로 정주생활기반(6.2), 보건·복지(5.8), 교육(5.8), 환경·경관(5.8), 경제활동·일자리(5.2) 순으로 만족도가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여가 부문에 대한 농촌 주민들의 주관적 만족도가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음.

〈표 2-15〉 농촌주민의 문화·여가 부문 주관적 만족도

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만족도 (10점 만점)	3.1	4.7	4.6	5.1

- 도시에 비해 농촌 주민들의 문화·여가 부문 삶의 질 만족도는 비교적 크게 낮음.
 -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도시 6.7 / 농촌 5.2
 -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도시 6.6 / 농촌 5.0
 - 지역축제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다: 도시 6.3 / 농촌 5.3
- 앞서 제시했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의 2018년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농촌주민들의 전반적인 문화·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나 세부 사항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각 평가 지표에 대한 만족도를 100점으로 환산할 경우 모두 40점대 또는 50점대에 그침.

〈표 2-16〉 농촌 지역의 문화·여가 여건 만족도

문항	7점 척도	100점 환산
문화·여가 생활에 만족함	4.1	58.6
문화·여가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	4.1	58.6
문화·여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설과 장소가 있음	3.4	48.6
생활문화공동체(동아리, 동호회)에 적극 참여함	3.9	55.7
생활문화공동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잘 이루어짐	3.4	48.6
필요시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기 쉬움	3.3	47.1
세시풍속이나 일상의례가 잘 전승됨	3.4	48.6
전통 및 향토문화를 즐길 기회가 많음	3.1	44.3
농촌에서 문화·여가 여건이 좋아짐	3.6	51.4

5.2. 문화·여가 부문 정책군별 평가 결과

5.2.1.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및 인적 기반 확대 정책군

□ 정책군 개요

○ 정책군 도입 배경 및 필요성

- 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문화·여가 시설 인프라가 열악함. 이에 따라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함.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과제는 제1차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부터 지속적으로 포함되어 왔음.
- 농어촌은 문화·여가 인프라 부족과 교통 불편 등으로 문화 접근성이 취약한 바, 농어촌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측면에서 문화·여가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련 인적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정책군 주요 사업 내용

- 제3차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에는 ‘문화·여가 인프라 및 인적 기반 구축’을 위해 ①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② 농어촌 작은도서관 조성, ③ 농어촌 작은영화관 조성, ④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 ⑤ 지역 문화 지수, ⑥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⑦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⑧ 문화 이모작, ⑨ 지역문화 컨설팅 기반 구축, ⑩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사업을 추진함.
- 시설 건립과 관련한 사업으로 문화·여가 인프라 가운데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영화관, 체육공간을 조성함.
- 지역 문화·여가와 관련한 인적기반 사업으로서 지역 문화 지수,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문화 이모작, 지역문화 컨설팅 기반 구축,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사업을 추진함.

□ 평가 결과

가. 정책 형성에 대한 평가

- 농어촌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과 관련 인력 기반 확대에 대한 정책사업을 포함함. 하지만 일부 사업은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 예컨대, 지역문화지수의 경우 농어촌 지역의 상대적 문화·여가 열위 수준을 파악하고 농어촌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2년 마다 전국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중앙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어려움.
- 농어촌 특성에 맞는 작은도서관, 작은영화관 조성 사업이 확대됨.
- 지역특성을 이해하고 지역문화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기획·개발·평가할 수 있는 지역문화인력(활동가) 확충과 교육이 제3차 삶의질 계획부터 정책군에 포함됨.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특성에 맞춰 특화한 형태는 아님.

나.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

-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사업은 연도별 건립 지원 개소 수를 목표치로 하여 정책을 집행함. 당초 목표치에 맞추어, 혹은 이를 상회하여 정책집행이 이루어짐.
 - 다만 매년 사업량이 일정하지 않으며, 지원 경향(확대 혹은 축소)을 파악하기 어려움.

다.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 첫째, 문화·여가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농촌의 문화·여가 접근성을 향상하였다는 점을 성과로 꼽을 수 있음.
 - 2014년 극장이 없는 기초지자체가 102개에 달함. 2018년 작은영화관 28개소 운영 중, 31개소 추진 중 / 극장이 없는 기초 지자체에 ‘작은 영화관’ 건립('17년 8개소, 총 51개소)
- 둘째, 문화·여가 부문의 관련 인적 기반이 증가함.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 및 지원, 문화이모작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 기반의 문화인력 발굴 및 양성이 이루어짐.
 - 문화이모작 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양성한 문화활동가 인력은 376명임('15년 143명, '16년 140명, '17년 93명).
 -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사를 매년 천 명이상 배치를 지원함('15년 1,080명, '16년 1,200명, '17년 1,200명).

5.2.2. 문화소외지역 지원 강화 정책군

□ 정책군 개요

- 정책군 도입 배경 및 필요성
 - 농어촌 지역은 문화·여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주민들의 시설 접근성이 취약함. 지역적으로 문화·여가를 향유할 기회가 부족한 상황임.
 - 즉, 도시와 농어촌의 문화·여가 격차를 줄이고자 제2차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부터 본격적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시작함.
- 정책군 주요 사업 내용
 - 문화소외지역 지원을 위해 ① 문화누리카드로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제공, ②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③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④ 찾아가

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 ⑤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추진함.

-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지원 목적이 있음.
-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범국가적 캠페인 사업으로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함.
-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지역문예회관을 통해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함.
- 찾아가는 도서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정보취약계층 어린이 밀집 기관에 찾아가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린이에게 책을 제공함.

□ 평가 결과

가. 정책 형성에 대한 평가

-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경제적 제약과 접근성 제약을 해소함으로써 문화향유 기회를 제고하고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함. 하지만 정책군 내 사업들은 농어촌에 특화하여 설계한 내용은 아님.
 -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소외계층 중에서도 경제적 제약으로 문화를 누리지 못하는 경제적 문화소외계층에 초점을 둔 사업으로 농어촌 주민도 수혜 대상임. 경제적 격차가 사회적 격차로 확대되지 않도록, 간극을 메워주는 사회보장 차원의 지원임.
 -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해당일과 그 주간에 전국에서 열리는 영화·공연·전시·문화제·프로스포츠 등 관람 할인 및 기획프로그램 개최 등을 통해 전 국민의 일상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함.
 -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문예회관을 거점으로 지역민과 문화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

나.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

- 계획된 사업 예산의 집행과 실행은 큰 무리 없이 이루어짐. 계획수립, 운영기관 선정,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전반의 일정이 당초 일정 계획대로 진행됨.

다.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사업을 제외하고 문화소외지역 지원 강화 정책군 내 각 사업이 설정한 성과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함.
 -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문화 향유의 사각지대를 보완한 것을 성과로 꼽을 수 있음. 기존의 시설 인프라 조성(하드웨어) 중심의 정책에서 찾아가는 도서관·박물관, 예술단체의 순회공연·전시 확대 등 공급자가 수요자를 찾아가는 서비스 공급 방식을 확대함.

5.2.3. 생활 속 문화 참여 확대 정책군

□ 정책군 개요

- 정책군의 주요 사업 내용
 -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기존 문화시설 등을 리모델링하여 동아리방, 다목적홀, 체육공간 등 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2019년까지 138개소)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농어촌 등 문화소외지역에 주민악단, 공공미술, 공동체 연극·영화 등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한 지역공동체 형성 지원
 -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주민협의체를 통한 문화 활동이 활발하거나 잠재적 문화 역량이 높은 마을을 선정하여 1개 마을당 연간 0.8억 원 내외 3년간 지원

〈표 2-17〉 ‘생활 속 문화참여 확대’(5-2) 정책군의 사업별 목적, 내용, 목표 (총괄)

사업명	사업목적(시행계획)	기본계획 주요내용	성과 목표
생활문화센터 조성 (5-2-1)	○주민 동호회 등의 연습·회합·발표 및 커뮤니티 공간인 생활문화센터의 조성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여가 및 생활문화예술 참여 접근성 제고	○기존 문화시설 등을 리모델링하여 동아리방, 다목적홀, 체육공간 등 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 조성 ○거점형 1,000㎡ 내외(시·군·구 설치), 생활권형 200㎡ 내외(읍·면·동)로 조성	2019년까지 138개소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5-2-2)	○지역 안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공동의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의 변화를 유도하는 공동체 형성의 계기 마련	○농어촌 등 문화소외지역에 주민약단, 공공미술, 공동체 연극 영화 등 문화 예술활동을 매개로 한 지역공동체 형성 지원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지역별 문화예술 기관·시설·단체 및 주민조직 당 20~50백만 원, 최대 3년 지원	문화소외지역 생활문화공동체 2019년까지 120개소
문화도시 문화마을 조성 (5-2-3)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 지역 자체를 브랜드화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지역문화 격차 해소	○주민협의체를 통한 문화 활동이 활발하거나 잠재적 문화역량이 높은 마을 선정, 1개 마을당 연간 0.8억 원 내외 3년간 지원	문화마을: 2014년 2개→ 2015년 13개→ 2019년 50개

□ 평가 결과

가. 정책 형성에 대한 평가

- 본 정책군의 목표는 제3차 기본계획에서 설정된 핵심키워드인 ‘주민참여형’, ‘공동체형’, ‘농촌특화형(농촌다움)’ 등에 부합되며, 생활권(마을) 내에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이 시설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육성하겠다는 정책수단 역시 적절함.

나.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및 문화마을 조성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률이 100%를 달성하였으며, 생활문화센터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률 100%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2017년 지원대상 사업부터 2016년 하반기에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함으로써 지자체 예산 미확보에 따른 예산 미집행률 감소
 - 생활 속 문화 참여 확대 정책군은 국비 지원과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음. 전체 사업예산은 큰 변동이 없으나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2015년 45,000백만 원에서 2018년 18,751백만 원(계획예산)으로 감소하였으며,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다른 문화나눔 사업에 비해 예산규모가 크지 않았음.

- 정책 집행 과정에 있어 중앙정부는 사업별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시설의 조성과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 노력함.

다.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 생활문화센터(5-2-1) 조성사업을 제외하고 100% 이상 성과 목표를 달성
 -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계획 대비 성과 목표가 100% 달성되지 못하였으나, 지자체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2017년(88%)을 제외하고 2015~2016년 모두 95%를 넘어 양호한 것으로 보임.
- 정책 파급효과 측면에서 보면 정책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대체로 높게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조성 사업의 경우 2017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평가에서 수혜자 종합만족도 1위(88.6점)를 차지
 -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복권기금 나눔사업 비용편익효과가 1.08로 사업의 예산대비 효과성이 인정되었으며(복권기금 사업 중 비용편익효과 1위), 사업효과성 분석(참여자-비참여자 간)에서 사업 참여자의 삶의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거주지역 만족도, 삶의 품격, 사회자본, 주민 교류 정도, 공동체 간 관계 인식 등이 향상됨.

〈표 2-18〉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구분	실 적			목표치	자료 수집방법 및 출처
			'15년	'16년	'17년	'18년	
생활문화센터 조성(개소)	1 (정량)	목표	48	70	92	95	사업 교부내역
		실적	47	67	81		
		달성도	97.9	95.7	88		
측정산식(측정방법)	전국 도 단위 생활문화센터 개소 수의 합(누적)						

〈표 2-19〉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5-2-2) 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구분	실 적			목표치	자료 수집방법 및 출처
			'15년	'16년	'17년	'18년	
①수혜자수	1 (정량)	목표	42,185	39,955	64,870	60,387	예술단체 성과보고서 수혜자 수 집계
		실적	40,212	64,870	67,452		
		달성도	95.3	162.1%	103.98%		
측정산식 (측정방법)	① Σ (지원프로그램 수혜자수)						
①수혜자 만족도	0.6 (정량)	목표	85.5	85.8	88.6	88.047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복권기금사업 성과 연구용역"의 만족도조사 결과 점수
		실적	85.2	85.8	88.613		
		달성도	100.3	102.7	100.02%		
측정산식 (측정방법)	② $\{\Sigma(7\text{점 척도}-1) \times 16.7\} / \text{전체응답자수}$						

〈표 2-20〉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5-2-3) 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구분	실 적			목표치	자료 수집방법 및 출처
			'15년	'16년	'17년	'18년	
문화마을 조성 지원 개수(개)	1 (정량)	목표	13	23	32	25	지원 실적
		실적	13	29	32		
		달성도	100%	111.5%	100%		
측정산식(측정방법)	지원 개수						

5.2.4. 전통·향토문화 전승·활용 정책군

□ 정책군 개요

○ 정책군 도입 배경 및 필요성

- 도시 따라잡기 방식의 인프라 및 문화·예술 공급 중심의 농촌 문화·여가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배경으로 ‘전통·향토문화 전승·활용’ 정책군이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문화·여가 부문에 새롭게 형성되었음.
- 해당 정책군의 목표는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한편, 지역 자체의 장소 이미지를 형성하고 고유 브랜드화를 촉진’하는 것임.

○ 정책군 주요 사업 내용

- 전통문화자원 복원 확산
 - * 농어촌 전통지식자원의 발굴·전승
 - * 전통놀이와 같은 특별한 문화자원에 대한 복원·확산
 - *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상의 추진 사업: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광역 및 기초)
- 문화관광축제 지원
 - * 주민의 문화향유권을 신장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축제 지원
 - *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상의 추진사업: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광역 자치단체)
 - * 2018년의 경우 3개 대표축제, 7개 최우수축제, 10개 우수축제, 21개 유망축제 등 41개의 문화관광축제와 40개의 문화관광육성축제 선정

□ 평가 결과

가. 정책 형성에 대한 평가

- 본 정책군의 목표는 ‘농촌에 전승되고 분포하고 있는 전통·향토문화를 복원하고 전승·확산하여 농촌주민의 문화·여가활동에 활용함으로써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해당 정책군이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새롭게 도입된 취지와 부합된다고 할 수 있음.
 - 문화관광축제지원사업은 수혜자(지원대상)가 농어촌 주민이 아닌 일반 국민 및 외래관광객으로 타겟팅되는 사업으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정책수단(추진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음. 오히려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활성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나.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

- 전통문화자원 복원·확산을 위해 추진된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사업’의 경우 2015년 예산 집행율 95.9%를 제외하고는 매년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100% 집행하였음.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율은 거의 100%에 달하고 있음.
 - 전반적인 사업예산(합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음. 2015년 대비 2018년 예산 규모를 보면,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사업은 47.4% 수준까지 축소되었으며,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은 74.3%로 축소됨.
- 지역특화문화행사나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언론보도 및 홍보의 노력은 많았지만, 대부분 개별 축제·행사에 대한 홍보였으며, 해당 정책 또는 정책사업에 대한 홍보, 특히 정책의 목표나 결과에 대한 공감이나 성과확산 등을 위한 노력은 부족했음.

다.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사업(전통문화자원 복원·확산)의 경우 ‘지역별 행사 개최 수’ 성과 목표를 측정하는 바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해 왔음.
 - 반면,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의 경우 성과 목표 중 ‘문화관광축제 당 평균 관람객 수’는 목표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내고 있으며, ‘문화관광축제 관람객 만족도’는 목표를 상회하고 있음.
- 사업추진으로 인한 농촌주민 수혜자의 증가나 주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 정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회의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음.
 - 정책군의 주요 사업인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사업과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이 농촌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음. 농촌에 특화된 정책사업이라 할 수 없으며 대도시나 일반시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5.3. 문화·여가 부문 과제 및 정책 제언

5.3.1. 문제점 및 개선과제

-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및 인적 기반 확대정책군은 그동안 문화·여가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농촌의 문화·여가 접근성을 향상하였다는 점은 성과이나, 여전히 도·농 간 문화향유 기회에 격차가 존재하여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형성 및 사업 설계가 필요함.
- 문화소외지역 지원 강화 정책군은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문화 향유의 사각지대를 보완한 것은 성과임. 다만 농어촌에 한정하거나 특화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어 그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 생활 속 문화참여 확대 정책군의 사업별 성과 목표가 농촌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반적인 양적 목표로 설정되어 있어 정책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성과지표가 새롭게 설정될 필요가 있음.
 - 정책군에서는 생활 속 생활문화시설의 조성 과 프로그램의 제공, 공동체적 활동으로의 유도 와 관련하여 사업이 제시되었으나, 지역주민과 문화자원을 연계시키거나 문화 활동을 촉진시키는 인력(매개 또는 촉진인력, 기획자) 관련 사업, 동호회 관련 사업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전통·향토문화 전승·활용 정책군은 전통문화자원의 복원·확산을 통하여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실제 시행된 사업은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사업’과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에 한정되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수단(사업) 발굴이 필요함.
 - 사업추진 내용에 있어서도 농촌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문화나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임. 농촌주민을 수혜자(지원대상)로 하는 농촌특화사업으로 4차 삶의 질 향상정책의 사업에서 확대 추진 필요

5.3.2. 정책 방향 제언

-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및 인적 기반 확대정책군은 농촌의 문화·여가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농촌은 여전히 문화·여가를 즐길 만한 시설이나 장소가 부족하여 체감할 수 있는 문화·여가 시설 및 장소에 대한 지원이 필요
 - 고령화 심화, 열악한 문화 향유 기반 등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추진 체계와 사업 내용, 성과 목표 설정 등 정책 형성 및 사업 설계가 필요
 - 인프라, 프로그램, 인적 기반 등 농어촌의 문화·여가 향유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개발

- 문화소외지역 지원 확대 정책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농 간 문화 향유 기회에 격차가 존재하므로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지속 필요
 -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목표 설정이 필요
- 주민의 능동적 문화 참여 확대 정책군에서는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기간(2020~2024년) 전체에 적용되는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의 가치와 방향을 적용
 - ‘사람이 있는 문화’의 가치를 적용하여 ‘농촌 특수성을 반영한 단계별 문화향유 활성화’, ‘농촌 특화형 문화다양성 증진’, ‘문화 창의 교육과 활동 증진’을 위한 과제를 개발하여 제4차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
- 기존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인력 양성과 운영지원에 집중
 - 그동안의 시설 조성에서 벗어나 기존 시설을 활성화는 운영 지원(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 방식으로 생활문화시설 관련 사업을 변경
 - 문화인력 양성 사업을 활용하여 농촌에 맞는 문화인력을 양성하고 배치
- 농촌의 특수성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발굴 및 지원
 - 문화비전 2030의 세부 과제를 활용하여, 농촌의 특수성(고령사회, 인적 자원의 부족)이 반영되면서 농촌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발굴
 - 농촌주민의 치유와 통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
- 전통·향토문화자원의 복원과 농촌주민 참여에 의한 확산 관련 사업 확대
 -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의 정책사업 중 전통·향토문화 관련 사업을 제4차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확대하여 포함

- * 전통·향토문화자산 발굴 및 집대성, 전통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 확대, 토요문화학교 등 문화예술교육에 전통문화 확대, 전통문화 소재 스토리 개발 및 문화교류 활성화 지원 등
 - 농촌주민만을 수혜자(지원대상)로 농촌 특화 사업의 4차 삶의 질 향상정책의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지역 특화의 특성이 없는 기존 사업의 농촌형 사업 분리·확대
- 농촌 지역의 전통·향토문화 기반의 생활문화 및 교육활동 증대
 - 농촌 지역의 또는 농촌형 생활문화센터의 전통·향토문화 기반 생활문화 활성화
 - 농촌 지역 초·중·고 학교 문화 프로그램 중 전통·향토문화 기반의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활동 특화
 - 농촌주민의 전통·향토문화 활용 문화·여가활동 실태 및 수요조사 정례화
 - 문화·여가의 핵심영역으로서 농촌주민의 여행증진을 포함시키고,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하여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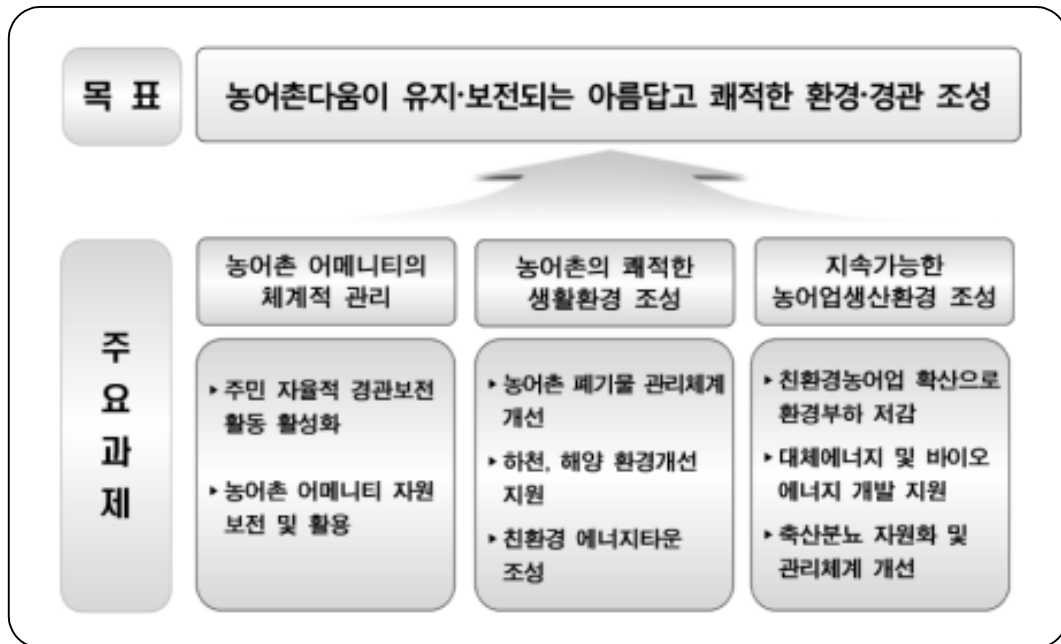
6. 환경·경관 부문

6.1. 환경·경관 부문 전체 평가 결과

6.1.1.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환경·경관 부문 개요

- 제3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 환경·경관 부문의 현황 및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경관 보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경관 보전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함.
 - 농어촌 지역에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해양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투기되고, 이를 지자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함.
 - * 영농폐기물 수거율('13): 폐비닐 32만 톤 중 23.3%, 폐농약병 6,180만 개 중 30%
 - * 해양폐기물 미수거율('12): 해양쓰레기 발생량 176천 톤 중 27.5%
 - 가축 분뇨에 의해 악취 문제가 발생하지만, 관리 부실과 저장 공간 부족 등으로 무단 투기와 살포가 발생함.
 - * 축산분뇨 처리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13.8. 환경부) 결과 전체 시설(95천 개소) 중 무허가·미신고 시설이 약 50%
-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환경·경관 부문의 목표는 ‘농어촌다움이 유지·보전되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경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설정함.
 - 제3차 기본계획 중 환경·경관 부문의 주요 과제로 ①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②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③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환경 조성의 정책군으로 제시하며, 각 주요 과제별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됨.

〈그림 2-5〉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환경·경관 부문의 목표 및 주요 과제



- 단, 본 평가에서는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③ 지속가능한 농어업생산환경 조성 정책군 중에서 ‘대체에너지 및 바이오에너지 개발 지원’ 분야를 별도의 정책군으로 설정하여 평가 수행
- ①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주민의 자율적 경관 보전 활동 활성화’, ‘농어촌 어메니티 자원 보전 및 활용’
 - ②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농어촌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하천, 해양 환경 개선 지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 ③ 지속가능한 농어업생산환경 조성: ‘친환경 농어업 확산으로 환경 부하 저감’, ‘축산분뇨 자원화 및 관리체계 개선’
 - ④ 친환경 에너지 보급: ‘대체에너지 및 바이오에너지 개발 지원’

6.1.2. 정책 목표 달성도

- 각 주요 과제별 세부 목표의 성과 목표 및 지표는 다음과 같이 8가지 평가 지표를 설정하여 매년 정책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고 있음.

〈표 2-21〉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환경·경관 부문의 성과 목표

주요 과제(정책군)	세부 성과	성과 목표	
		2014년	2019년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국가 중요 농어업 유산 지정(개소)	4	19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개소)	55	74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영농폐기물 종합집하장 설치(누계, 개소)	1,000	3,950
	마을도랑 살리기 추진(개소)	-	300
지속가능한 농어업생산환경 조성	친환경농업지구 조성(개소)	1,143	1,250
	가축분뇨 자원화율(%)	89.5	91.0
친환경 에너지 보급	목재펠릿 생산량(천톤/년)	89	107
	바이오에너지 생산용 소재 개발(종)	10	15

- 환경·경관 부문의 성과지표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목표 연도인 2019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및 ‘마을 도랑 살리기 추진’ 지표는 현재 추진 실적이 목표를 약간 하회할 전망
 - ‘목재펠릿 생산량’ 지표는 매년 생산량이 축소되고 있어 2019년까지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농어촌 주민의 환경·경관 부문 만족도는 2014년 5.79점에서 2015년 5.9점까지 상승하였으나, 최근 2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

〈표 2-22〉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환경·경관 부문의 연차별 평가지표 달성도

정책군	성과지표	성과 목표				
		2014 (실적)	2015 (실적)	2016 (실적)	2017 (실적)	2019 (목표)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㉟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개소)	4	6	7	9	13
	㊱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개소)	55	61	65	69	74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㊲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누계, 개소)	1,000	1,950	2,900		(17)3,950
	㊳ 마을 도랑 살리기 추진(개소)	-	62	77	89	300(누계)
지속가능한 농어업생산환경 조성	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개소)	1,143	1,158	1,174	1,186	1,232
	㊵ 가축분뇨 자원화율(%)	89.5	90.2	90.6	91.0	91.0
친환경 에너지 보급	㊶ 목재펠릿 생산량(천톤/년)	90	82	53	67	107
	㊷ 바이오에너지 생산용 소재 개발(종)	10	10	12	23	-
정주 만족도	㊸ 농어촌 환경·경관 만족도(10점척도)	5.79	5.90	5.82	5.8	-

- 농촌주민 6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의 2018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삶의 질 7대 부문별로 환경·경관 부문의 정책 중요도가 9.8%로 응답하여, 농어촌 주민의 정책 중요성 인식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정책 우수성은 12.9%로 응답하여, 정책에 대한 우수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표 2-23〉 삶의 질 7대 부문별 정책 중요도 및 우수성 설문

단위: %

부문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합계
중요한 정책 부문	30.3	6.4	15.4	25.9	6.9	9.8	5.2	100.0
우수한 정책 부문	35.9	8.2	12.9	7.3	14.7	12.9	8.2	100.0

* 1,2순위를 합하여 집계

- 환경·경관 부문의 정책군별 정책 중요도 및 우수성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정책군에 대한 중요도 및 우수성 모두 가장 높게 평가함.

〈표 2-24〉 환경·경관 부문의 정책군별 정책 중요도 및 우수성 설문

단위: %

정책군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농어업생산환경 조성	합계
정책 중요도	22.4	49.7	27.9	100.0
정책 우수성	31.9	40.5	27.6	100.0

* 1,2순위를 합하여 집계

* 정책군 중에서 '④ 친환경 에너지 보급' 분야는 '지속가능한 농어업생산환경 조성'과 통합하여 설문 수행

6.1.3. 삶의 질 개선 현황

- 농어촌 서비스 기준 핵심 항목 중 환경·경관 부문 항목 및 목표치는 ‘하수도 보급률을 85% 이상으로 한다’로 설정됨.
 - 공식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점검한 결과, 2015년 기준 전체 농어촌 시·군의 인구 수 약 2,054만 명 중 공공하수처리구역의 인구는 1,680만 명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82.0%로 집계됨.
 - 지역별로는 군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66.4%, 도농복합시는 86.4%로 지역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중기 목표치인 85%를 달성한 시·군은 전체 농어촌 시·군 중 38곳(27.5%)에 불과함. 이중 중기 목표치를 달성한 군 지역은 7개(8.5%)에 불과하여 군 지역의 하수도 보급이 시급함.
- 시·도별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인천의 군 지역(강화군, 옹진군)의 항목의 이행 수준(43.4%)이 전국 평균에 크게 미달하여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전남 및 경북, 충남, 전북 순으로 이행 수준이 평균 대비 낮은 시·도 지역으로 조사됨.
-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 중 환경·경관 부문의 정주 만족도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5.8점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2014년 이후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2017년 정주 만족도 조사(농촌 주민 1,991명 대상) 결과, 안전 부문이 6.5점으로 가장 높고, 정주생활기반(6.2), 보건·복지(5.8), 교육(5.8), 환경·경관(5.8) 순임.

6.2. 환경·경관 부문 정책군별 평가 결과

6.2.1.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 정책군 개요

- 오늘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이고 다원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음.
 - 이러한 인식 변화로 농업·농촌은 교육, 관광, 치유, 휴양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활용이 모색되고 있으며, 새로운 정책적 수요를 제시하여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에 반영
-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정책군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경관보전활동을 활성화하고 농어촌 어메니티 자원 보전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 자율적 경관보전활동 추진 외 7개의 사업을 시행

□ 평가 결과

<정책 성과>

-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인 관리 정책군 사업은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 정책 목표 및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됨.

〈표 2-25〉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인 관리 정책군의 세부 사업 및 목표, 성과 및 실적

단위: %

구 분	목표	추진 성과 및 실적			
		'15	'16	'17	'18
주민 자율적 경관보전활동 추진	경관생태분야 사업지구수 증가(지구)		121	155	147
경관보전직불제 개선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 활성화 프로그램과 연계한 방문객 증가율(%)	5.2	5.3	5.7	5.9
조건불리지역 활성화를 위한 직불금 지급	정주농 비율(%)	99.0	99.7	97.7	99.7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직불금 수령률(%)	82	97.6	91.1	90
농업유산 지정·관리	방문자 증가율(%)	-	5.5	22.9	5.9
농촌 경관 및 공간계획 기반기술 구축	농촌경관 및 공간계획 기술개발 및 현장지원(건수)	6	6	6	5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	생태숲 누적 조성개소(개소)	61	65	69	72
농어촌 생태관광 활성화	생태관광객 증가율(%)	55	91.4	112.1	93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사업진도율(%)의미, '18년도는 목표치

6.2.2.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정책군 개요

- 도시 지역에 비해 환경오염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촌 지역이 여전히 다수 분포하고, 생활환경에 대한 농촌 주민의 만족도와 도·농간 격차 역시 하락 추세이거나 확대되고 있어³,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계속 필요

- 2015년도 진행된 도·농간 정주민족도 비교 조사 결과, 환경·경관 부분 중 ‘환경오염상태’ 항목은 2015년을 기점으로 지속 하락

3 구체적으로 2015년도부터 진행된 도·농간 정주민족도 비교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환경·경관분야에 대한 도·농간 정주민족도 격차는 상대적으로 확대추세(0.1('15)→0.5('17))이고, 농촌 주민 만족도는 2015년을 기준으로 보건·복지 등 다른 분야와 달리 하락 추세(54.4('15)→53.1('17))를 보이고 있음.

〈표 2-26〉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정책군의 세부 사업 및 목적

구분	사업목적	지원규모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농어촌 지역에 매립, 소각, 재활용 등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1995년부터 계속 추진중인 국고 보조사업(보조율 70%, 최대 15억원/개소)으로써, 2017년까지 11,278억원을 투자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	농어촌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	2015년부터 시작된 지자체 보조사업(국고 50%)으로써, 2017년까지 36.8억원을 투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비닐 및 폐농약용기 등을 수거·보관할 수 있는 마을단위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 지원은 1987년부터,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은 2004년부터, 공동집하장 지원은 2014년부터 시작되는 등 지속 확대되고 있는 지자체 보조사업임
주민참여형 마을 도랑 살리기	쓰레기, 생활하수, 가축분뇨 등으로 오염되고 방치된 농어촌마을의 도랑을 복원·관리	2011년부터 시작된 지자체 보조사업(국고 100%)으로써, 2017년까지 76.32억원을 지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장마·태풍 등 집중호우시 하천·하구로 유입되는 유쓰레기를 적기에 수거·처리	2009년부터 시작된 지자체 경상보조 사업(광역시 40%, 그 외 도·시·군 760%)임
갯벌생태계 복원	훼손·방치·오염되어 있는 과거 갯벌지역(폐염전, 폐양식장 등) 복원하거나,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갯벌의 해적생물 구제 및 퇴적물·오염토 정화 등을 통한 갯벌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함	2010년 이후 계속된 지자체 보조(국비 70%, 지방지 30%) 사업임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소각장·가축분뇨처리장 등 기피·혐오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소각폐열·바이오가스 등)를 피해주민 수익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임	사업기간은 2014년-2018년이며, 총 사업비는 635억원임. 2017년까지 기투자액은 444.3억원임

□ 평가 결과

-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정책군 사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 정책 목표 및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판단됨.
 - 특히, 제3차 삶이 질 기본계획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목표의 성과지표인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및 마을도랑 살리기 사업도 당초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됨.

〈표 2-27〉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정책군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구 분		목표	추진 실적 및 성과				
			'15	'16	'17	'18	
농어촌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개소)	9 (목표 :9)	14 (신규 10, 계속 4)	10 (신규 1, 계속 9)	8 (신규 6, 계속 2)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	재활용동네마당(개소)	111	163	173	163	
		재활용동네마당 재활용품 수거량 증가율(%)	-	-	12.5 (목표:10)	N.S. (목표:10)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개소, 누계)*	성과지표	1,950	2,900	3,850	4,800
		폐농약용기 수거(만개)		-	5818 만개	6179만개	N.S.
하천, 해양 환경개선 지원	주민참여형 마을 도랑 살리기	마을도랑 살리기 추진(개소)*	성과지표	62	139	229	319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량		40천톤 (-)	49천톤 (-)	44천톤 (목표:40천톤)	N.S. (목표 : 50/40천톤)
	갯벌생태계 복원	폐염전 폐양식장 등 갯벌복원(개소, 누적)		8	9 (9)	10 (10)	N.S. (*18: 11)
친환경에너지 타운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친환경에너지타운 선정수(개소)		-	3	3	5

6.2.3.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환경 조성

□ 정책군 개요

-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환경 조성 정책군은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부하를 감소시키고 또한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본문에서는 첫 번째, 세 번째 과제에 대해서만 논의함.

- 친환경농어업 확산으로 환경부하 저감
- 대체에너지 및 바이오 에너지 개발 지원
- 축산분뇨 자원화 및 관리체계 개선

〈표 2-28〉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 환경 조성 정책군의 세부 과제 및 목적

정책군	세부 과제	목적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 환경 조성	6-3-1-1. 유기질비료공급으로친환경농업기반구축	농림축산부산물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여 토양환경을 보전
	6-3-1-2. 자원순환형친환경농업단지조성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절감 및 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소 유도
	6-3-1-3. 친환경어구보급	일정기간 경과 후 자연분해 되는 생분해성어구 보급으로 어장환경 오염 방지
	6-3-1-4. 해양폐기물정화	바닷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를 통한 깨끗한 해양경관 조성
	6-3-1-6.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 증대를 위한 종묘 배양 및 양식시설 건립 지원
	6-3-3-1. 축산분뇨자원화·에너지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확충과 시설개선을 통한 가축분뇨 정화·자원화 등 적정 처리
	6-3-3-2. 축산분뇨처리지원및관리체계화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토양 등 환경 오염 방지 등을 위한 처리시설·장비 등 지원

- 이 정책군은 가축사육으로 배출된 분뇨에 의한 악취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도입되었음.
 - 특히, 가축분뇨는 대부분 퇴·액비로 자원화되고 있으나 관리 부실과 저장공간 부족 등에 따른 무단 투기, 살포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음.
 - 2013년 8월에 실시된 환경부의 축산분뇨 처리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결과 전체 시설(95,000여 개소) 중 무허가, 미신고 시설이 약 50%에 이르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2014).

□ 평가 결과

<정책 성과>

- 이 정책군의 사업들은 성과 목표를 모두 100%이상 달성하였으나, 과제별로 사업의 성과나 파급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과지표가 필요함.

- 그러나 이것은 사업의 직접적인 성과물(output)을 성과지표로 설정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좀 더 해당 성과물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의 개선이 필요함.
- 친환경농어업 확산으로 환경부하 저감 과제: 이 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과지표로는 사업의 성과나 파급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움. 제도개선이나 주민의 만족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성과지표가 필요함.
- 축산분뇨 자원화 및 관리체계 개선 과제: 사업의 성과와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반면,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주민 만족도나 체감도 등 지표 평가 필요.

6.2.4. 친환경 에너지 보급

□ 정책군 개요

- 농어촌 환경·경관 부문에는 총 두 개의 정책군이 존재하고, 이 중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활환경 조성’ 중 하부 세부 과제 중 하나인 ‘친환경에너지 보급’이 중요한 정책 검토 및 평가의 대상으로서, 별도의 정책군으로 설정하여 평가함.
 - 정책군 목적은 농업생산 부문의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화 그리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관련된 것으로 지역의 에너지정책 노력을 통해 주거(住居)나 생산 관련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것임.
 - 본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은 다양한 부처 연계 사업으로, 사업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려면 관련 사업간 연계 및 중복성 제거가 역점 과제
 - 비록 관장하는 부처가 상이하다 하더라도, 서로 관련된 사업, 특히 기술개발 부문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어낼 개연성이 높아 사업 간 연계가 더욱 필요

- 친환경에너지 보급 정책군 내에는 6개의 세부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농·식품부 사업 3개, 해양수산부 사업 2개, 산림청 사업 1개로 이뤄짐.
 - 6개의 세부 사업은 3개의 하위 그룹으로 나뉘질 수 있음(① 대체에너지를 활용한 농업시설 확대, ② 목재펠릿 에너지 국내생산 확대 및 수급체계 안정화, ③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스템 확립을 위한 기술 개발).

〈표 2-29〉 친환경에너지 보급 정책군 내 세부 사업 및 담당 부처

번호	친환경에너지 보급 정책군 내 세부 사업		담당 부처
① 대체에너지 활용 농업시설 확대	6-3-2-1	농업에너지절감을 위한 대체에너지 보급	농식품부
	6-3-2-2	친환경에너지 보급	해양수산부
	6-3-2-3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 개발	농식품부
② 목재펠릿 에너지 국내 생산 확대	6-3-2-4	목재펠릿 사용 확대	산림청
③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스템 확립을 위한 기술개발	6-3-2-5-①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로 친환경 에너지 다변화	농식품부
	6-3-2-5-②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해양수산부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4),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 계획”

□ 평가 결과

<정책 성과>

- 친환경에너지 정책군의 성과지표는 ④① 목재펠릿 생산량(천 톤/년), ④② 바이오에너지 생산용 소재 개발(종)로 제시되어 있음.
 - 목재펠릿 생산량 목표는 2017년 기준 2019년 목표인 107천 톤/년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평가됨. 2015년 실적(82천 톤/년)에 비해 2016년에는 크게 하락하고, 2017년 다소 개선되었지만, 현재의 추세를 보면 2019년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바이오에너지 생산용 소재 개발(種 개수 기준)은 2017년 현재 이미 2019년 목표인 15개를 개발 목표를 이미 달성함으로써, 초과성적을 창출했다고 판단됨.

〈표 2-30〉 친환경에너지 정책군의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4 (실적)	2015 (실적)	2016 (실적)	2017 (실적)	2019 (목표)
㉑ 목재펠릿 생산량(천톤/년)	90	82	53	67	107
㉒ 바이오에너지 생산용 소재 개발(종)	10	10	12	23	15

자료: 농식품부, 삶의 질 3차 기본계획 7대 부문별 성과지표

○ 과급효과 여부

- 정책군의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긍정적이지만, 상위 부문의 평균 지표값은 2015~2017년에 계속 낮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표 2-31〉 친환경에너지 정책군 주민 만족도

구분	2015	2016	2017	2018
만족도 (상위부문 평균값)	5.04 (5.90)	5.08 (5.82)	5.3 (5.8)	-

주: ()는 부문평균임; 만족도는 10점 만점임.

자료: 농식품부(2015, 2016, 2017),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6.3. 환경·경관 부문 과제 및 정책 제언

6.3.1. 문제점 및 개선과제

□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정책군

- 정책군 세부 과제는 전체 8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량적인 성과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우수한 이행율과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성과 지표의 적정성, 정책의 시행체계와 방법 등에서는 정책별로 차이가 있어 보완이 필요함.
- 7대 부문별 삶의 질 향상 중요도 순위에서 환경·경관 순위가 도시와 농촌 모두 2016년, 2017년 연이어 최하위로 나타남.

- 여전히 환경·경관 부문보다 복지나 경제활동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향후 환경·경관 부문 정책의 개선과 시행에 정책 부문별 인식 차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함.

□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정책군

- 농어촌다움이 유지·보전되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경관 조성을 위해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농어촌 폐기물 관리체계개선, 하천 해양 환경개선 지원,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의 정책과제를 설정함.
-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의 경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목표의 세부 목표로 설정하기에는 사업특성과 내용, 범위 등이 다소 맞지 않아 개선이 요망되지만,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및 마을도랑 살리기 추진을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는 점은 영농폐기물 미회수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 특성과 주민참여를 통한 환경복원과 같은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환경 조성 정책군

- 제3차 기본계획에서 나타난 이 정책군 도입 필요성에서 축산분뇨 이외에 일반적인 관행 농업에 따른 환경 및 경관 훼손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며 도입 배경에 일반 관행농업에 따른 환경 및 경관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못하고 있음.
- 친환경농업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일반 관행농어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농업환경프로그램을 내역사업으로 도입하는 등 주요과제의 변경이 필요함.

- 축산분뇨 자원화 및 관리체계 개선 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사업은 이미 발생된 가축분뇨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지속적인 시설비 지원예산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근원적으로 가축분뇨를 현장 사육 농가에서 처리하는 환경친화적인 사육방법 도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6.3.2. 정책 방향 제언

- 현재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농어업생산환경 조성’으로 되어 있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경관 부문의 정책 목표를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그대로 두고, ‘지속가능한 농어업생산환경 조성’은 ‘농어업 생산의 환경 및 경관보전 기능 강화’, ‘친환경 에너지 보급’으로 나누어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정책군

- 농촌 어메니티의 핵심요소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함.
 - 아름답고 쾌적한 농어촌 환경과 농어업생산, 농어촌문화, 농어촌주민의 복합적인 요소들이 잘 결합 될 때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인 관리가 완성될 수 있음.
- 농어촌다움의 유지에 필수적인 대상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함.
 - ‘농어촌다움’, 이른바 ‘농어촌답다’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경관과 생태적으로도 우수한 자연환경 그리고 생계수단을 유지할 수 있는 농업생산기반 그리고 농어촌의 전통문화가 유지될 때 가능하므로 농어촌다움의 유지에 필수적인 대상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사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요구됨.

- 부문별 또는 세부 정책 간 협력추진 및 통합 성과창출시스템 마련 필요
 - 개별 정책군과 사업은 모두 목표가 분명하고 성과지표도 대체로 잘 제시되고 있으나 정책 간 협력을 통해 더 좋은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부문별 또는 세부 정책 간 협력추진 및 통합 성과창출시스템과 통합 성과지표의 마련이 필요함.

□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은 제 4차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생활환경의 복원 및 재생을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지원하고 정책사업을 발굴해야 함.
 - 농어촌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려면 마을도랑, 마을숲, 빈집, 도로 등 훼손되거나 유희화된 생활환경의 복원 및 재생 등을 위한 관리·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
 - 농촌 지역의 고령화, 과소화 대비 생활환경의 복원 및 재생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
 - 농업·농촌 분야에서 폭염,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 대책 마련
- 상·하수도 사업은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서 제시되었지만, 실제 사업 분야에서는 누락되어 있어 서비스 기준과 사업간 연계가 필요함.

□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환경 조성

- 정책 목표의 재정립 및 정책 과제 조정 필요
 -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환경 조성의 정책 목표를 ‘농어업 생산의 환경 및 경관보전 기능 강화’로 조정함이 바람직함.

- 정책의 주요 과제로서 ‘친환경농어업 확산으로 환경부하 저감’은 ‘환경을 보전하는 농어업 생산 방식의 개선 지원’으로 수정하고 ‘축산분뇨 자원화 및 관리체계 개선’은 그대로 유지함.
- 주요 성과지표의 개선
 - 가축분뇨 자원화율 지표는 그대로 유지함.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지표는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반영하는 지표이긴 하지만 실제 환경보전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농업환경프로그램을 반영하여 ‘농업환경 프로그램 참여 농지 및 농가 수의 증가’를 성과지표로 도입

□ 친환경 에너지 보급

- 친환경 에너지 보급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평가 지표를 개선
 - ‘목재펠릿 생산량’, ‘바이오에너지 생산용 소재 개발’ 등 현행 설정되어 있는 두 개의 성과지표는 친환경에너지 보급 정책군의 성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지나치게 간소화되어있어 종합적이며 개괄적인 평가지표가 필요함.
 - 친환경에너지 보급 정책군은 농어촌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생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기존의 성과지표를 대신하여, ‘화석에너지 사용 감소량(천 TOE)’ 혹은 ‘신재생에너지 비율(%)’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대기오염도($\mu\text{g}/\text{m}^2$)’나 ‘이산화탄소 배출량($\text{CO}_2 \text{ eq ton}$)’ 등을 성과지표로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6.3.3. 신규 정책 어젠다

□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 주민 자율적 경관보전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농촌경관 보호지구제도 도입
 - 농어촌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주민 자율적 경관보전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 예산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사업은 다양하게 시도되지만, 주민 운동 성격의 경관보전활동 보급과 확산은 미비함.
 - 농어촌 주민들이 스스로 아름다운 생활환경과 문화경관의 가치 인식과 유지를 위해 동기 부여하도록 예산 지원을 통한 환경·경관 정책에서 벗어나 도·농 간 사회적 합의로 농어촌 문화경관 가치를 인정하고 함께 유지(지원)해 나가도록 농어촌경관 보호지구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의 전통농업 경작 유지를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
 - 농업유산은 실제 경작이 이루어질 때, 주민의 생계유지뿐만 아니라 농업 시스템으로서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이 작동될 수 있으나 현재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에서 농업생산성 저하와 인구감소로 경작을 포기함.
 - 농업유산의 공공재적 가치를 고려하여, 농업유산 지역으로 지정된 농업생산지역의 경작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적 직불금 형태의 경작장려 지원제도에 대한 조속한 검토와 시행 필요

- 농어촌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창업·일자리 창출 시스템 확립
 - 현재 주로 농어촌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농어촌생태관광의 공급전략에서 벗어나 도시 지역에서도 농어촌 생태관광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생태관광 사업기회와 연결하고 예비 귀농·귀촌 인재

들의 참여를 장려하여 농어촌생태관광 서비스 수준 향상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

- 2000년 이후 시행된 농어촌 생태관광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시설 노후와 운영주체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 농어촌 생태관광 리모델링(재생사업) 사업을 추진하여 운영 활성화 도모

□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정책군은 농어촌다움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적 사항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다만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2018년까지 추진하는 한시적 사업인만큼 후속사업의 여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책 목표에 대한 부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환경 조성

- 공익형 직불제 개편 논의 반영
 - 기존 직불제에서도 환경 및 경관을 보전하는 농법을 도입하는 최소한의 환경보전 의무수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농업 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개편 논의 반영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개편 논의 반영
 - 농어업인들에게 농어업활동이 환경 및 경관에 주는 영향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인 환경 및 경관보전 요소를 보전하는 사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함께 환경보전 활동을 위해서 감소되는 소득을 보상해 주는 환경보전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축산농가 가축분뇨 자체 처리 체계 구축
 - 가축분뇨의 발생 및 처리를 공공시설에 의존하기 보다는 축산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 도입 검토 필요
 - 농업환경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환경친화적인 사육방법을 도입하는 농가에게 환경친화형 축산 지원 장려금 제공 필요

- 농어업 활동이 환경·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와 모니터링 강화
 - 장기적으로 농법의 변화를 통해서 농어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도록 농어업 활동이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토양침식,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연구하는 사업 도입이 요망

□ 친환경 에너지 보급

- 농업분야 친환경에너지 기금 조성
 - (필요성)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 다양한 부처가 각 부처별 예산을 이용하여 관련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부처별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여러 부처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도의 중복성 등이 발생하여 효율적 추진에 문제가 발생됨. 둘째, 기술개발에서부터 원료확보 그리고 설비 설치와 운영에 이르는 전체 영역이 서로 다른 부처(주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체계적인 사업 계획에 따라 시행되지 못하여 사업의 중복투자나 과소투자가 우려됨. 셋째,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지원 받는 농가 혹은 어가의 소득수준이 상이하여 자가 부담분이 부담스러운 지원대상이 존재함. 특히 이들 대상들은 일반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접근이 한정되어 있고, 금융상품 활용이 용이하지도 않음.
 - (목표) 농업분야 친환경에너지 확대의 중장기 계획 수립,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 원료확보, 설비 설치 및 운영 등
 - (조성방식) 기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첫 번째는 관련

부처들의 일반 예산을 통해 조성하고, 나머지는 기금 운영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대한 저리 융자 자금 회수금을 통해 조성함

- (운영) 주무부처가 지정하는 제3의 공공금융기관이 담당
- (위원회 설치 및 운용) 기금의 사용과 사후 검정을 위해서는 관련 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며 세부 사업을 수행하는 각 부처는 기금 활용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활용 여부를 판단하여 기금에서 보조금 재원을 확보하여 활용

7. 안전 부문

7.1. 안전 부문 전체 평가 결과

7.1.1. 정책 목표 달성도

- 안전 부문은 ‘자연재해 및 범죄·안전사고에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농어촌 조성’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으며 <표 2-32>과 같이 총 8개의 평가지표를 통해 매년 정책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고 있음.
 - 수리시설 보수·보강,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 개선율,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수, 마을별 방범용 CCTV 설치, 농업용 기계 사고 발생건수, 1만 명 당 보행 사망자 수, 농어촌 안전 만족도

<표 2-32> 제3차 기본계획의 안전 부문 평가지표

7대 부문	평가지표	성과 목표				
		2014 (실적)	2015 (실적)	2016 (실적)	2017 (실적)	2019 (목표)
안전	수리시설 보수·보강(누계, %)	47	51	55	57	62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 개선율(누계, %)	56	57	58.1	59.8	66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57.9	59.0	55.5	54.3	63.0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40	43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자수(명)			22,121	22,911	22,660
	마을별 방범용 CCTV설치(%)	30	35.8	43.2	49.3	50
	농업용 기계 사고 발생 건수	1,100	1,130	1,083	911	900
	1만 명 당 보행 사망자 수(명)	0.6	0.35	0.33	0.33	0.5
농어촌 안전 만족도(10점척도)	6.53	6.61	6.57	6.5	-	

- 8개 평가지표 대부분이 성과 목표를 달성하거나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은 2019년까지 63%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됨.
 -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해서 낮아지

고 있어 2019년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2016년 관련 법을 제정·시행하면서 보장 범위와 수준이 확대됨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농어업인이 부담을 느껴 가입률이 감소함.

- 국가 최소기준이라 할 수 있는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항목의 목표치는 안전 부문 3개 항목이 모두 달성하기 어려워 보임.
 - 경찰 순찰 항목의 경우 수치를 현황을 파악할 수 없으며, 소방출동의 경우 목표치의 절반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방범설비는 2016년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2019년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을 확신하기는 어려움.

〈표 2-33〉 농어촌 서비스기준 안전 부문 핵심 항목 이행실태의 변화

부문	핵심 항목	국가최소기준	목표 ('19)	2016	2017	증감
7. 안전 (생활 안전)	15) 방범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60	43.2	49.3	/
	16)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100	-	-	X
	17)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55	25.2	24.6	\

주 1) 각 세부기준에 대하여 향상된 경우 /, 변동이 없는 경우 -, 하락한 경우 \,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 X로 나타냄.

7.1.2. 삶의 질 개선 현황

-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 중 안전에 대한 농촌 주민들의 주관적 만족도가 6.5점(10점 척도)으로 가장 높음.
 - 2017년 농촌 주민 1,9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안전 부문이 6.5점으로 가장 높고 그 뒤로 정주생활기반(6.2), 보건·복지(5.8), 교육(5.8), 환경·경관(5.8), 경제활동·일자리(5.2) 순으로 만족도가 나타남.

-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안전 부문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다소 증가함
 - 안전 부문 만족도: 도시 지역 ('16) 6.9 → ('17) 7.0, 농어촌 지역 ('16) 6.6 → ('17) 6.5

7.2. 안전 부문 정책군별 평가 결과

7.2.1. 자연재해·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 정책군 개요

-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정책군의 사업목표는 크게 자연재해 취약시설을 보수·보강하고, 산불재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체계를 강화하며 마지막으로 발생한 재난·재해에 대한 정보전달체계를 강화하는데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의 8개 주제에 대한 세부 과제를 수행
 - 수리시설 안전관리(농림축산식품부)
 - 소하천 정비(행정안전부)
 - 어항시설 보강(해양수산부)
 -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대책(농림축산식품부)
 - 산악기상 관측망 구축(산림청)
 - 산불예방·방지대책(산림청)
 - 산림보호 지원⁴(산림청)
 -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강화(산림청)

4 제3차 기본계획과 2015년도 시행계획에서는 “산림재해 모니터링”이었으나, 2016년도 시행계획부터 “산림보호 지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내용상 차이점은 없음

□ 평가 결과

가. 정책 형성에 대한 평가

<정책 목표 합리성>

- 본 정책군의 목표는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대응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으며, 본 정책군의 목표는 제3차 기본계획에 도입된 취지와 부합된다고 할 수 있음.

<목표-수단 연계성>

-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본 정책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8가지의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음.
 - 다만, 내용상으로 분류하면 크게 풍수해와 산불·산림재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집중하고 있어 보여 그 외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무방비인 상태임.
 - 특히, 최근 농어촌의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파, 폭염, 가뭄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사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다양한 자연재해에 대한 과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나.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

- 본 정책군의 연도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이는 세부 과제는 농식품부 소관 수리시설 안전관리 과제임.
 - 2018년도 예산 중 2017년도 예산보다 감액된 과제는 모두 농식품부 소관 세부 과제임(수리시설 안전관리,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대책).
 - 2017년 예산이 100% 집행된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예산 확보율의 감소는 본 과제의 성과 목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향후 본 정책군에서 제외 등).

다.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 본 정책군 세부 과제별 성과지표와 실적 달성도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세부 과제의 성과는 목표치를 초과하는 사례도 발생
 - 농식품부 소관과제인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대책”과 산림청 소관과제인 “산불예방·방지대책” 과제는 목표치 이상의 실적을 도출
 - 반면, 농식품부 소관과제인 “수리시설 안전관리”와 행정안전부 소관과제인 “소하천 정비” 과제는 목표치 대비 실적이 완전달성에는 미도달
 - * 두 과제 모두 2015, 2016년에는 초과달성하였으나, 2017년에는 미달
 - 안전 부문 소속 타 정책군과 비교시 본 정책군의 목표 달성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도출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결과는 정책 목표를 적극적으로 달성했다고 판단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목표 달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표들로 구성되었는지 추후 검토가 필요
- 각각의 세부 과제의 정책적 목표와 그 실현도를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지표 간의 차이가 있어 정량적 지표를 달성한다고 해서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 * 반대로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였다면 정량적 지표는 달성한 것임
 - 산림청 소관과제인 “산악기상 관측망 구축” 과제의 경우 구축된 산악기상 관측망이 직접적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므로 삶의 질과 향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목으로 재설정하여야 함.
 - 산림청 소관과제인 “산림보호 지원” 과제의 경우 산림보호를 감시할 인원 고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림보호지원 인력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성과지표를 선정해야 할 것임.
 - 산림청 소관과제인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강화” 과제의 경우 실태조사 달성율이 산사태 취약지역을 환기시켜 주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험지역을 어떻게 보수·보강했는지에 대한 것을 성과지표로 선정해야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

7.2.2. 안전한 영농·영어활동 기반 조성

□ 정책군 개요

- 재해에 안전한 영농활동 기반 조성 정책군 사업은 10개임
 - 10개의 사업은 크게 3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
 - ①농어업인의 농어작업 활동 과정에서의 사고나 질병을 보장하기 위한 농어업인안전보험, ②재해로 인한 농수산물의 경제적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및 ③농어업인의 농어작업(업무)상 재해 예방과 관련한 사업
- (1) 농어업인 재해안전 관련 제도(보험) 정착
 -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 농업인업무상재해보장제도 지원
 - * 수산인 안전공제(어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
 - * 어선원 및 어선 보험 지원
- (2)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 *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 * 어업재해보험
- (3) 농어업 작업상 재해 예방관리 강화
 - * 어작업자 건강위해요소 측정 및 어업인 질환 현장조사
 - * 농업인 업무상 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 농작업 안전관리 시범 및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이장비 지원
 - * 농작업 안전기술 개발 및 정보화

□ 평가 결과

가. 정책 형성에 대한 평가

<정책 목표 합리성>

- 농어업인이 농어작업 중 안전사고를 당하거나 재해로 인한 농수산물의 피해가 발행하는 경우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어가의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설정하고 있는 농어업인안전재해보험, 농어업 재해보험은 적절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농어업 작업상 재해 예방관리 강화 또한 적절하게 목표를 설정함.

<목표-수단 연계성>

-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만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농기계종합보험과 농작업근로자보험의 가입률도 별도의 지표로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 재해보험의 경우 성과 목표치를 전체 가입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규모가 큰 품목의 가입률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됨.
 - * 가입률 저조 품목의 가입률을 높이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농작업 안전관리 시범 및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과 ‘농작업 안전기술 개발 및 정보화’ 사업의 경우 표현은 다르지만 유사한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나.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

- 본 정책군의 연도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예산확보와 집행은 무리가 없어 보임.
 - 다만, 어업인안전보험법 제정·시행에 따라 보장범위가 확대 또는 신설되면서 보험료가 크게 인상됨에 따라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가입률이 저조해진 것은 아쉬운 점이며,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편의장비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예산이 조금씩 감소하다가 2018년에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다.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 농어업인재해보험

- 농어업인안전보험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많은 농어업인이 가입하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으로써 ‘가입률’이 가장 중요한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음.
 - * 농어업인안전보험 관련 사업들은 나름대로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보임.
 - * 그러나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가입률은 50%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으며, 어업인안전보험과 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가입률은 이보다 훨씬 낮은 실정임.
-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부담 경감, 보장수준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가입률은 담보 상태이기 때문에 가입률 목표치를 높게 설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농어업인안전보험이라는 우산(보장) 아래 보다 많은 농어업인이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과 목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재해보험

- 농어업재해보험이나 어업재해보험 모두 매년 가입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 다만, 어업재해보험의 경우 전년도 실적에 비해 성과 목표를 낮게 설정하고 있는데, 성과 목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농업재해보험(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과 어업(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품목 간에 편차가 심한데, 가입률이 저조한 품목의 가입률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 작업상 재해 예방관리 강화
 - 농어업 작업상 재해 예방관리 강화와 관련된 4개의 세부 과제 중 3개는 연구사업이고 1개만이 정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성과지표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 달리 설정해야 하지만 과제별 목표 달성 정도를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해야 함.
 - * 4개 과제의 성과지표를 보면 이행건수(조사 건수), 조사농가수, 결과활용건수, 농작업효율개선율, 농작업안전관리수준향상율, 교육매체 개발건수(산업재산권 건수), 정보화접속 건수 등 다양하며, 매년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 그러나 이들 지표들로 각각의 세부 과제의 성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임.

7.2.3.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 정책군 개요

-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정책군 사업은 총 7개임.
 - 지능형 CCTV 및 CCTV 통합관제센터 확대 구축
 - 생활안전지도 구축 및 공개
 - 농어촌 지역 범죄예방활동 강화
 - 농어촌 폭력예방교육 인프라 강화
 - 위험도로 구조 개선
 - 교통안전활동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 평가 결과

가. 정책 형성에 대한 평가

- 상향식 정책 형성이 아닌 하향식 정책 형성의 한계
 - 농어촌 주민 안전을 위한 대부분의 안전정책이 주민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책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관주도형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하향식 정책 형성에 의한 안전 정책은 결국 집행단계에서 큰 호응과 참여를 동반하기 어려움. 결국 정책 성과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생활안전 사각지대야 말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형성하고 참여하여 사업구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정책 형성에서의 주민참여 기회 확대
 - 생활안전지도나 농어촌 지역 범죄예방활동과 같은 사업의 경우 정책 형성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음.
 - 실제 생활안전상의 위험요소와 범죄빈번 장소에 대한 주민들의 정보가 정책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안전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정책 형성에 참여하게 할지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지능형 CCTV,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책 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노인계층의 실질적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정보화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나.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

- 정책 집행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한 각 부처의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대부분 사업예산이 기계적으로 집행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안전관련 사업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이 어느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해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 설정을 위한 객관적 및 주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종합하여 정책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함.
 - 우선순위에 따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정책사업의 성과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주민들의 정책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임

다.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 단기적 성과에서 중장기적 성과로의 전환
 -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는 대부분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음. 지능형 CCTV 구축이나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은 단기적 예산투입에 따른 물리적 유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바람직한 정책 성과 평가는 단기적 성과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사업에 따르는 중장기적 성과도 측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임. 특히, 생활안전지도, 농어촌 지역범죄예방 활동, 농어촌 폭력예방교육 인프라 강화, 교통안전 활동강화 등은 단기적 성과로 측정이 어려움.
 - 단기적 성과 측정의 한계를 벗어나 정책의 성과를 중장기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단기적 정책 성과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정책에 따르는 본질적 성과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임.

- 양적 위주 평가에서 질적 위주 평가로의 전환
 - 대부분의 정책사업이 주어진 기간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양적인 평가에 치중하고 있음. 숫자로 표현되는 명확함과 간결함이 주는 장점도 있지만, 사업의 목적이라는 본질적인 질적 성과는 제대로 측정되고 평가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양적 평가를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질적 평가와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함. 지능형 CCTV 구축, 위험도로구조의 물리적 개선 등은 양적 평가와 기준으로 보이겠지만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더불어 정책 집행을 통해 무엇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질적인 평가 내용도 함께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양적 위주 평가에서 질적 위주 평가로의 전환은 성과위주의 정부사업평가의 약점을 극복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며,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의 균형은 바람직한 정책 성과 평가의 나가야할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임.

7.3. 안전 부문 과제 및 정책 제언

7.3.1.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정책군 세부 과제의 다양화 필요
 - 본 정책군은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에 새로이 도입된 정책군으로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자연재해 취약시설의 보수·보강, 소화천 정비 등을 통해 재해 사전예방 및 안전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산불방지, 산사태 취약지역의 집중관리를 통해 산림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음.
 - 다만, 제3차 기본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자연재해가 과거에서부터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통적인 자연재해인 풍수해와 산불, 그리고 산사태

에 국한하여 다루고 있는 점이 아쉽다고 할 수 있음.

- 기후변화는 기존의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한파, 폭염, 가뭄 등과 같이 우리에게 비교적 생소한 신종 재난들을 발생시켜 농어촌 지역에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이와 같은 신종재난에 대해서 안전한 농어촌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농어작업 안전 관련 사업의 재조정 필요

- ‘안전’ 부문은 제3차 기본계획에서 새로이 추가된 부문으로 농어업작업 안전 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타 부문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들을 모아 놓은 것임.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사업 분류와 사업내용이 재조정될 필요가 있음.
 - * 기존 사업의 통·폐합, 내용 조정, 신규 과제 설정 등
- 현재 보건·복지 부문에 속해 있는 농업안전보건센터 사업과 어업안전보건센터 사업도 농어업인 업무상 재해 및 질병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도 포함하여 전면적인 사업 재분류가 필요함.

○ 농어업재해보험 사업의 부문 재분류

- 현재 안전 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사업과 어업재해보험 사업은 사업부문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안전 부문’을 별도의 부문으로 설정한 것은 농어업의 산업적 특성상 농어업인이 업무상 활동에서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쉬워 이를 예방하거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
 - * 농어업인의 신체상 상해나 질병 및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의 안전에 대한 것들임.
- 그러나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인의 신체나 생명과는 직접적인 관련성

은 없으며, 농축산물과 양식수산물 및 관련시설 및 장비, 즉 물적 재산에 대한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 부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분류하기 어려움.

- 농어업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농가소득의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농어업인의 소득 보장과 관련된 부문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7.3.2. 정책 방향

-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정책 추진
 -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약칭: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1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시행계획은 동법 시행령 제7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농촌진흥청장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음.
 - 따라서 농어업인 안전사고 및 재해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5년마다)에 따라 사업(과제)을 발굴·설정하고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어업인 직업성 질병 규명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추진
 - 농업인이 일반인에 비해 유병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업인 질병의 상당 부분이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거나 하우스나 축사 등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작업하기도 하며, 수시로 각종 농기계를 다루는 등 농업 특성상 불가피한 농작업으로 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병을 규명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집행의 탄력성 확보

- 국가나 지방정부의 예산은 주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집행해야하는 당위성을 지니고 있음. 이에 따라 정책 집행의 탄력성이 매우 떨어지는 비효율성이 발생함.
-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 탄력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의 타당성 확보가 안전 부문 관련 사업의 집행에 필요함.
- 안전관련 사업의 경우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예산집행의 필요성이 급증하는 경우가 많으며 반대로 예산집행의 필요성이 급감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보다 탄력적인 예산집행 및 운용이 필수적인 분야임.
-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 집행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 설정과 효과성 향상을 위한 정책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임.

○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의 정책 방향 전환

- 하향식 정책 형성에 따르는 정책 집행과 성과평가는 하드웨어 구축사업에 치중하는 성향이 강함. 어느 정도의 양을 일정한 기간 동안 집행하는 내용을 담기에 사업내용이 명확하고 평가가 용이한 측면이 있음.
- 하지만,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같은 정책사업들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중요한 사업들도 많이 있음.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 간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함.
- 생활안전지도와 지역범죄예방활동, 폭력예방 교육 인프라 강화 등은 하드웨어 사업이라기보다 소프트웨어 사업에 가깝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제방이나 댐과 같은 물리적 방재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안전지도, 범죄예방교육, 교통안전활동 강화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함께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8. 7대 정책 부문별 평가 결과 요약

① 보건·복지 부문

○ 문제점

- **(사회안전망 구축 부문)** 제3차 기본계획에서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의 경우 취약계층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주를 이루어, 보다 다양한 계층에 대한 정책 고려가 부족했으며,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지원 대상과 목표 대상층을 확대하여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의료서비스)** 농어촌에 특화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직접적인 사업이 부족하였으며, 농어촌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목표 설정 및 관련 사업이 부족하였음.
- **(보육서비스)**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특수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간 연장 보육시설, 24시간 보육시설, 휴일 보육시설의 추가 확대가 필요함.
- **(농어촌 복지 전달 체계)** 국가 복지서비스의 2/3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복지 예산과 대상자의 급증으로 인한 업무과다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농어촌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읍·면·동 중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실태와 욕구를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 조사 및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제언

- **(농어촌형 사회안전망 확충)** 정부 사회안전망 대책이 주로 노동자, 도시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어촌형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틀 속에서 농어촌 지역의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자체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 개발)** 최근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농업인 기본소득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농어촌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소요되는 비용(의료, 교육, 교통, 주택 수리비 등)을 줄여주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 **(필수 의료의 현장 초동대응체계 강화 및 서비스 수준 제고)** 농어촌 지역 어디에서나 항시 작동할 수 있는 현장 초동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주민의 참여를 통해 부족한 지역의 여건을 보충하는 방안이 필요함. 농어촌 지역에서 필수요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과 인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보육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수준 제고)**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면부를 중심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목표도 새로운 국가정책에 맞춰 전체 이용아동의 40%로 확대하여 단계적 이행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특화 여성친화정책 개발)** 여성농업인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센터의 인력과 예산 확대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여성농업인의 수요가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매뉴얼화 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고충상담 실적이 없는 센터는 전문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기능 개선)** 복지직 공무원을 충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읍·면·동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기능을 개선해야 함. 통합사례관리 및 찾아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해야 함.

○ 정책군별 주요 사업 평가 종합

〈표 2-34〉 보건·복지 부문 세부 사업 평가 결과

정책군	주요 사업명	계속여부	내용개선	평가 사유
농어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 구축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①	②	·지원기준 상향 조정
	농지연금사업	①	②	·고령농업인의 노후소득 지원
	두루누리 사업 활성화	③	②	·사업의 실효성 미미
	경영이양 고령농업인 소득지원	③	②	·농지연금사업으로 통합
	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 해소	①	②	·사각지대 해소 노력 지속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구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실태조사 개선, 농업인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농어촌 보건·복지 지원 대상자 확대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및 의료 취약지 해소	거점공공의료기관 육성	②	②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공공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	①	②	·농어촌지역 공공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 우선
	공공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②	②	·시설·장비 보강사업 축소, 보건의료서비스(S/W) 강화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①	①	·농촌 현장(마을) 중심 응급 인프라 확충 강화
	분반 취약지 지원	①	②	·현행 사업 지속 추진 (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확산	②	②	·유사 사업과 연계 및 통합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사업	①	②	·누락지역 해소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 시범사업	①	②	·본(전국)사업으로 전환
	농어업인 안전보건센터 운영	①	②	·사업 목적 명확화, 방향 재정립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필수의료의 현장 초동대응체계 강화, 필수의료의 서비스의 질 수준 제고			
계층별 복지서비스 강화	농어촌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①	①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①	②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	①	②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지원	②	①	·사업 정체성 정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①	②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①	②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①	②	
	여성친화적 지역사회조성	②	①	·관련성 낮은 사업 정리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농어촌형 특수보육시설 확충, 농어촌 특화 여성친화정책 개발				
농어촌 복지전달체계 구축	농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개선	①	②	
	행복모음센터 육성	①	②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	①	②	
	농촌건강 장수마을 사업	①	①	·서비스 중복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정책군 외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외국인 근로자의 보건·복지 인권서비스 강화, 치매 예방 및 관리 강화,				

주 1) 계속여부: ① 확대 ② 유지 ③ 폐지로 평가

2) 내용개선정도: ① 전면 개편, ② 일부 개선, ③ 현행 유지로 평가

② 교육 부문

○ 문제점

- **(농어촌 공교육 서비스 확충 부문)** 농어촌 학생 복지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어촌 교육을 시도하였지만 여전히 도·농 간 교육격차가 심함. 농어촌 학교 ICT 기기보급, 농어촌 거점 중학교, 원격 진로멘토링, 농어촌 유학 지원 등이 새롭게 시도되었지만 주민들의 도·농 간 교육만족도 차이는 여전하고, 농어촌 지역 내에서도 읍·면 간 교육 격차가 존재함.
-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농어촌 교육’을 추구하였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성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음. 청년세대들의 농어촌 교육에 대한 불만이 높아, 이들이 농어촌을 떠나는 중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장애인, 다문화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조손 가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농어촌 교육 복지 강화가 필요하고,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과 더불어 높은 노인의 문해교육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선별적 농촌 학교 지원은 선정되지 못하는 학교의 교육 환경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농산어촌 모든 학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농어촌 교육복지(기초안전망, 기초학습, 문화·예술·체육, 사회성, 심리·정서 등)가 확보되어야 함.
- **(교육 공동체 활성화 부문)** 농어촌 주민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확대 추진이 필요함.
- **(지역 교육 거버넌스·지원체계 부문)** 농어촌 교육여건 중간지원조직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 필요하며, 지역단위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협력을 위한 지방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지역 농어촌 교육 활성화 논의 촉진해야함.

○ 정책 제언

- **(기본방향)** 교육 협치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보편적 농어촌 교육 복지의 실현을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교육 부문 정책 목표로 제언

- **농어촌 주민의 기본 역량 강화**
 - * 농어촌 성인의 문해능력(기초 문해, 기능 문해) 향상
 - * 농어촌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 배양
- **보편적 농어촌 교육 복지 실현**
 - * 전원학교 플러스
 - * 면단위 평생학습센터
 - * 농어촌 통학버스
-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농어촌 교육 공동체 구현**
 - * 마을선생님 육성·배치
 - * 학교-지역연계
 - * 농어촌 유학
- **지자체 차원의 지역 사회 교육 협치 실현**
 - * 일반·교육 행정간 협치
 - * 통합 교육지원센터

○ 정책군별 주요 사업 평가 종합

〈표 2-35〉 교육 부문 세부 사업 평가 결과

정책군	주요 사업명	계속여부	내용개선	평가 사유
교육복지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①	②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③		·전원학교 플러스 사업으로 강화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 여건 개선	②	②	
	농어촌학교 통학여건 개선	①	②	·공유 통학버스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지원	①	②	
	농어촌 지역 중고교 진로교사 배치 확대 및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 확산	①	②	
	농산어촌 ICT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	①	②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 전원학교 플러스(농산어촌형 혁신학교(초중학교) 사업 확대)				
- 농어촌학생 기초학습 강화(방과후 공부방)				
평생학습	행복학습센터 운영	①	②	·면단위 평생학습센터 발전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1면 1문해학교(농촌 학교(초중학교)를 활용한 노인 문해교육)			

(계속)

정책군	주요 사업명	계속여부	내용개선	평가 사유
교육 공동체	청소년 교육문화 공동체 육성	①	②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 지역 마을교사 육성(마을단위 기초안전망, 기초학습, 문화·예술·체육, 사회성, 심리·정서 등 교육복지를 지원할 지역교육자원 양성) - 농촌 유학 활성화(농촌의 교육적 가치를 반영한 활동을 통해 도시 아이들이 인성을 함양 + 농촌 학교 학생 유치를 통한 활성화)			
지역 교육거버넌스지원체 계	농어촌교육지원 체계화	①	①	
	농어촌학교 활성화 주체 육성	②	③	
	교육청 평가 개선	③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 일반-교육행정 협치(광역 단위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간의 협력 거버넌스 운영) - 통합교육지원센터 운영(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이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등을 담당할 실무 조직)			

주 1) 계속여부: ① 확대 ② 유지 ③ 폐지로 평가

2) 내용개선정도: ① 전면 개편, ② 일부 개선, ③ 현행 유지로 평가

③ 정주생활기반 부문

○ 문제점

- **(농어촌 정주 공간 활성화)** 농어촌 생활권 활성화 관련 세부 사업들은 아직까지 인구감소 및 과소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임. 농촌 공간 전략 계획의 부재로 시·군 내 사업 추진이 체계적이지 못해 생활권 강화라는 목적 달성에 있어서 성과가 저하됨. 주민 참여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기간의 단축 및 프로그램 보완이 필요함.
- 다양하고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로 인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조율하기 위한 참여 주체간의 역할 규정이 필요함. 농촌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고, 공동체를 자발적인 지역 개발 주체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함. 귀농·귀촌 교육의 질적 측면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농어촌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생활용수 개발 등의 사업은 계획대비 집행율 및 정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투입(input) 중심의 성과지표로부터 실제 수혜가구의 체감도 등 결과(outcome) 중심의 성과지표를 사용한 목표 달성도 측정이 필요함.

○ 정책 제언

- **(농어촌 정주 공간 활성화)** 중심지와 배후마을의 공간 전략적 관점으로 효율적 압축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상위정책수단으로 통합적 공간 계획과 사업 추진 체계 개선이 필요함. 농어촌 지역에서 시행되는 타부처 사업들을 연계하는 통합관리 체계 마련으로 정책 사업들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 필요함.
- 지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권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지자체가 통합적인 관점에서 생활권 설정 및 생활권 중심지의 기능강화 방향을 포함하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생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야 함.
- 목표 달성을 위한 생활서비스 공급 활동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종료 이후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공동체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주민참여, 주민역량강화 정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 **(농어촌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생활편의와 안전에 중점을 둔 사업 위주 지원과 경제활동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시설 지원 등을 구분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방안과 기존 운수사업자간의 관계 형성 방안 등을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수립하고, 운수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에 다양한 유형의 차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대안(법제 정비 등) 마련이 필요함.
-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농어촌 최저주거기준 마련과 장기적인 데이터 수집·분석·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고령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주택 개선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정책군별 주요 사업 평가 종합

〈표 2-36〉 정주생활기반 부문 세부 사업 평가 결과

정책군	주요 사업명	계속여부	내용개선	평가 사유
농어촌 정주 공간 활성화	농촌 중심지 활성화 및 마을정비	②	②	·농발계획 등 시·군 단위 통합적 지역개발과의 정합성 강화 ·S/W, Hn/W 중심의 사업 추진을 통해 공동체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도시재생 뉴딜, 사회복지·문화예술·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사업과 협업(복합·연계) 강화
	주민주도 지역개발 지원	①	②	·자치분권 진전에 따른 광역시도 단위 중간지원조직 역할 강화 ·시·군 단위 농업·농촌활성화 중간지원조직간 연계/통합 운영 강화 ·마을 단위의 주민, 리더 대상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귀농·귀촌, 귀어·귀촌, 귀산촌 활성화 지원	①	②	·귀농·귀촌, 귀어·귀촌, 귀산촌 지원 기능의 유기적 연계 또는 통합 플랫폼 지원 ·청년 대상 신규취농 및 사회적 경제활동 프로그램 다각화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 농촌형 스마트 타운 육성(시범사업): 마을-지자체 연결 공동 플랫폼 구축, 온라인장터, ICT 기반 생활서비스 혁신/주민참여 촉진, 지역뉴스 포털 등, 도·농간 정보·서비스·인력 공유(ICT 기반의 도·농파트너십) - 스마트 빌리지 육성(시범사업): ICT 활용 농촌주민의 실생활 개선, 지역 특성에 맞춰 스마트 빌리지 구축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사업	①	②	·농촌형 교통모델의 다양화(서비스 방식, 차량 유형) - 다양한 사업자 참여 허용,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가용 유상 운송 ·농촌형 단거리 개인 생활교통 시스템 개발·보급(버스정류장의 개인 교통수단 보관 및 전기충전 등)
	농어촌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사업	②	②	·생활편의 및 안전 중심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지원 대상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 보급/정비 수준 평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②	②	·취약지역 생활용수 보급수준 평가 및 우선 공급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 농촌형 생활 SOC 확충사업: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농촌형 생활 SOC를 공급하되, 중심지활성화 사업과 연계하고, ICT 적극 활용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농어촌 주택정비 지원	①	②	·최근 폭한·폭염 등 기후 재년에 농어촌 지역 고령자의 주거 취약성이 증대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①	②	·집수리사업과 집수리사업단 등 사회서비스업 활성화를 연계
	도시가스 공급배관사업	②	③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②	②	·엄격한 안전관리제도 도입 및 안전관리 강화
	농어촌 슬레이트 철거 지원	①	②	·현재 정부의 슬레이트지붕 철거 목표치가 전체 슬레이트 건축물의 13.5%에 불과하므로, 적극적인 목표치 상향 및 재정 지원 확대 ·집고쳐주기 등 관련 사업과의 통합 목표치 설정 및 관리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 농촌형 제로에너지 코하우징 개발·보급사업: 현재의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생활 홀보다 진일보한 농촌형 제로에너지 코하우징의 다양한 유형을 개발하여 보급				

주 1) 계속여부: ① 확대 ② 유지 ③ 폐지로 평가
 2) 내용개선정도: ① 전면 개편, ② 일부 개선, ③ 현행 유지로 평가

4 경제 활동·일자리 부문

○ 문제점

- **(6차산업 활성화)** 중앙정부 공모형태로 추진되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농촌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미흡함. 또한 사업 간 정책 목표가 매우 유사하여, 향후 계획 수립 시 유관 사업, 정책들을 정책군으로 통합·운영이 필요함. 인프라 구축 중심의 사업 추진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일자리 활성화)** 실효성 있는 인력 문제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며, 농촌형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어야 함. 위원회 등 관련 활동이 존재하나 보다 체계적인 협력이 필요함. 제도 활용에 따른 각종 행정처리의 번거로움 등 실행 여건이 미비하며 주무부처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갖춰야 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형 새일센터의 중요성에 비해 센터의 수가 확대되지 않았으며(성과지표 부재), 농어촌 특화형 전문인력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부족함. 외국인 취업자 근무처 추가제도의 경우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파악됨.
- **(농촌관광 체계화 및 품질제고)** 중간지원조직 운영, 조례 제정, 관련 정책 연계 추진, 사업추진 로드맵 수립 측면이 다소 미흡함. 농어촌관광 품질 제고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홍보, 집행과정 개선, 정책 환류 등이 다소 미흡함.
- 관광두레 조성 사업은 사업 추진체계상 기초 지자체의 지원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자체의 관심·역할 미흡 등이 지적되어 자구적 노력이 미흡함.

○ 정책 제언

- **(6차산업 활성화)** 6차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 수립 및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위한 추진 체계 개선이 필요함. 6차산업 부문 간 융복합의 실효성·내실화위해 정책 연계 인센티브 제공, 통합적 사업위한 지자체 권한 강화가 필요함.
- 가공중심 하드웨어 지원을 벗어나 다기능적 농업 관점에서 농촌교육, 사회적농업 등 사업내용 다각화가 필요함. 민간의 주도적 참여 장려를 위해 직접적 자금지원에서 기술개발, 인력양성, 정보제공 등 간접지원 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 **(농어촌 일자리 활성화)** 부처 간 협력 추진 모델을 마련하고, 기존의 일자리 사업 추진에 더해 농촌 지역 활성화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가 필요함. 중앙 단위의 협력·협업 체계 구성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문제 해결 지향의 종합적인 사업을 적극 진행해야 함.
- 청년층의 참여를 촉진하고, 복지·문화·교육 등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로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야 함(전라북도 무주군 공동체활성화지원단).
- **(농촌관광 체계화 및 품질제고)** 농촌관광 관련 법·제도 정비 및 통합적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함. 호텔, 콘도, 펜션 등 타 숙박시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등급제기준 상향과 함께 농어촌관광마을 중심에서 개별 민박경영체의 등급제 체계화가 필요함. 민박으로 신고하고 운영은 펜션으로 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전문숙박업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농가민박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정을 구체화해야 함.
- 5개 부처·청의 14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개별적 추진의 한계 극복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여러 세부 과제를 연계·패키지화하여 다년간 체계적·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유도해야 함.

○ 정책군별 주요 사업 평가 종합

〈표 2-37〉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세부 사업 평가 결과

정책군	주요 사업명	계속여부	내용개선	평가 사유
6차산업화 기반 마련 및 창업 촉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①	②	·지역(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여 지역특성화를 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 핵심사업이므로 확대 필요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	③	①	·시범사업 종료, 기존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어촌 6차산업화 지원	②	②	·법인 및 개별 사업자의 역할 증대 방안 모색 필요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②	③	
	6차산업화 지구 조성	②	②	·단지형 조성방식의 효과성·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므로, 기 조성 단지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비 및 사업추진 방식 조정 필요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②	②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②	②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②	③	·사업내용이 산지가공시설과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중심으로 되어 있어 사업내용의 변화 필요
	수산물전자직거래활성화	③	③	·수협통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종료된 사업임.
	수산정보이용 활성화	②	③	·수산u-IT융합 모델사업에 대한 연구사업임.
	농촌융복합(6차)산업 자금 융자 지원	①	③	·사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융자금리 하향이 필요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
	소규모 농업인 창업 및 소득화 지원	①	①	·중소농가의 농업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 따라서 농외 소득 증대를 위해 농가창업 활성화 필요 ·현재는 농산물종합기공센터 조성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단기소득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 조성	①	②	·산림 활용 소득화의 정책이 미흡하므로, 본 정책의 적극 확대가 필요. 단, 지자체 차원의 단지 조성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 방식 변경 필요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①	②	·농촌자원복합산업화와 통합 추진 필요 ·성과평가를 통한 사업의 재배치 고려
농촌 전통지식 발굴 및 활용 지원	②	③	·농진청의 연구 사업으로 계속 추진 필요	
<p>〈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p> <p>-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현재 동 사업은 농촌마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더 효과적임.</p>				
농어촌 관광 체계화 및 품질제고	관광두레 조성	①	③	·지역별 특화된 우수 사례(섬진강두꺼비, 성지순례 등)가 나타나고 있어 지역 관광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 ·사업효과 제고 위해 지역의 자율성 및 사업비를 확대 필요
	농촌관광 품질 제고	①	①	·등급제 기준이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지표를 현실화하고 상향화해야 함 ·선진국처럼 개별경영체 육성 중심의 등급제 및 품질개선 방식 필요

(계속)

정책군	주요 사업명	계속여부	내용개선	평가 사유
농어촌 관광 체계화 및 품질제고	어촌관광 활성화	①	①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②	③	-
	산림휴양치유 공간 조성	②	③	-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	②	③	-
	말산업육성지원	②	③	-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②	②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농촌 음식관광 소비가 증대. 다양한 개인경영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사업지원 대상 및 조건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음
	슬로시티 녹색관광 자원화	②	②	-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②	②	·'17년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기 조성된 교육농장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 ·특히 교육농장 운영의 법적근거가 미흡하므로,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
	농촌유학 지원사업	①	②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운영자가 필요.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상황이 필요
	농촌테마공원 조성	②	③	-
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②	②	·마을단위 관광사업의 한계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방식 변경 필요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없음				
농어촌 일자리 지원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	②	②	·본 사업은 현장 노동부족 해소를 해소하는 주요한 정책 과제이나, 행복생활권 사업 종료와 함께 2018년 이후 관련한 대책·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기존 인력지원센터의 유지와 함께 노동력이 부족한 주산지 시·군을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개편, 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함.
	외국인근로자 근무처 추가제도 활성화	③	②	·농업부문의 적용이 어렵고, 관련 실적도 매우 부진함 ·농업, 제조업 등 전체 산업의 근무처 추가제도는 유지하되 삶의질 계획에 포함하여 평가·관리 하는 실익이 없음
	외국인근로자 쿼터확대 및 처우 개선	①	②	·농산업 필요 인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외국인 쿼터 확대가 필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 인력지원의 법적·제도적 체계화르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①	②	·농어촌 지역 내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된 취·창업을 지원하는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기본계획에 구체적 목표 제시가 미흡하므로, 명확한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확대하고, 여성인력

(계속)

정책군	주요 사업명	계속여부	내용개선	평가 사유
				교육목표 제시, 관련 특화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을 확대함.
	들녘경영체육성	③	②	· 들녘별경영체의 경우 공동경영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 논농업 규모화 추진 등 산업적 목적의 사업임. · 삶의 질 계획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임.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 (법무부)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 - (농식품부) 영농작업단 -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및 (농촌진흥청) 치유 농업 활성화 - 청년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경영체 및 지역 인턴제 -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 및 일자리 활성화				

<정책군 외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 농어촌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
- 생산자조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 확대를 위한 사업
- 기존 조직의 사회적 경제 전환, 혹은 신규 조직 창설을 위한 목적, 필요성, 절차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사회복지 등 여러 영역간 사업의 연계, 융합 지원

주 1) 계속여부: ① 확대 ② 유지 ③ 폐지로 평가

2) 내용개선정도: ① 전면 개편, ② 일부 개선, ③ 현행 유지로 평가

5 문화·여가 부문

○ 문제점

-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및 인적 기반 확대)** 문화·여가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농촌의 문화·여가 접근성을 향상하였다는 점은 성과로 볼 수 있으나, 여전히 도·농 간 문화향유 기회에 격차가 존재하여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형성 및 사업 설계가 필요함.
- **(문화소외지역 지원 강화)**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문화 향유의 사각지대를 보완한 것은 성과이지만, 농어촌에 한정하거나, 특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어 그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 **(생활 속 문화참여 확대)** 사업별 성과 목표가 농촌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반적인 양적 목표로 설정되어 있어 정책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성과지표가 새롭게

설정될 필요가 있음. 생활 속 생활문화시설의 조성과 프로그램의 제공, 공동체적 활동으로의 유도와 관련하여 사업이 제시되었으나, 지역주민과 문화자원을 연계시키거나 문화 활동을 촉진시키는 인력(매개 또는 촉진인력, 기획자) 관련 사업, 동호회 관련 사업이 없어 보완이 필요함.

- **(전통·향토문화 전승·활용)** 전통문화자원의 복원·확산을 통하여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실제 시행된 사업은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사업’과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에 한정되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수단(사업) 발굴이 필요함. 사업추진 내용에 있어서도 농촌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문화나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임. 농촌주민을 수혜자(지원대상)로 하는 농촌특화사업으로 제4차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사업에서 확대 추진이 필요함.

○ 정책 제언

-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및 인적 기반 확대)** 농촌의 문화·여가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농촌은 여전히 문화·여가를 즐길만한 시설이나 장소가 부족하여 체감할 수 있는 문화·여가 시설 및 장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고령화 심화, 열악한 문화 향유 기반 등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추진체계와 사업 내용, 성과 목표 설정 등 정책 형성 및 사업 설계가 필요함. 인프라, 프로그램, 인적 기반 등 농어촌의 문화·여가 향유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개발해야 함.
- **(문화소외지역 지원 확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농 간 문화향유 기회에 격차가 존재하므로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프로그램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목표 설정이 필요함.
- **(주민의 능동적 문화 참여 확대)**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기간 전체에 적용되는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의 가치와 방향을 적용해야 함. ‘사람이 있는 문화’의 가치를 적용하여 ① 농촌 특수성을 반영한 단계별 문화향유 활성화, ② 농촌 특화형 문화다양성 증진, ③ 문화 창의

교육과 활동 증진을 위한 과제를 개발하여 제4차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해야 함.

- 그동안의 시설 조성에서 벗어나 기존 시설을 활성화는 운영 지원(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 방식으로 생활문화시설 관련 사업을 변경해야 함. 문화인력 양성 사업을 활용하여 농촌에 맞는 문화인력을 양성하고 배치
- 문화비전2030의 세부 과제를 활용하여, 농촌의 특수성(고령사회, 인적자원의 부족)이 반영되면서 농촌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농촌주민의 치유와 통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해야 함.
- **(전통·향토문화 전승·활용)**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의 정책사업 중 전통·향토문화 관련 사업을 제4차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확대하여 포함하는 등 전통·향토문화자원의 복원과 농촌주민 참여에 의한 확산관련 사업을 확대해야 함.
 - * 전통·향토문화자산 발굴 및 집대성, 전통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 확대, 토요문화학교 등 문화예술교육에 전통문화 확대, 전통문화 소재 스토리 개발 및 문화교류 활성화 지원 등
- 농촌주민만을 수혜자(지원대상)로 농촌 특화 사업의 제4차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지역 특화의 특성이 없는 기존 사업에서 농촌형 사업을 분리·확대해야 함. 농촌형 생활문화센터의 전통·향토문화 기반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 등 농촌 지역의 전통·향토문화 기반의 생활문화 및 교육활동 증대가 필요함.
- **(신규 정책 부문으로 ‘여행증진’ 정책 제안)** 문화·여가의 핵심영역으로서 농촌주민의 여행증진을 포함시키고,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하여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함.

○ 정책군별 주요 사업 평가 종합

〈표 2-38〉 문화·여가 부문 세부 사업 평가 결과

정책군	주요 사업명	계속여부	내용개선	평가 사유
문화여가 인프라 및 인적 기반 구축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②	③	·공공도서관 봉사인구수에 따라 건립규모 등을 정하는데, 농어촌을 특수성을 인정하여 공공도서관이 확대되어야 함 ·접근성에 대한 고려 필요
	농어촌 작은도서관 조성	①	②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농어촌 특성을 고려,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필요
	농어촌 작은영화관 조성	①	②	·수요가 높아 확대 필요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	②	③	·내용적으로 농어촌주민의 체육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확대(시설+프로그램 지원)
	지역 문화 지수	③	①	·지역문화지수는 농어촌 삶의 질과 무관하며, 3년에 1회 평가 한계 ·각 시·군별 차이 및 부족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문화지수 파악에 신중히 접근, 개선 필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①	②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으로 무관하며, 광역단위로 사업 추진하고 있어, 지역에 특화된 인력 양성과 활동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사 배치	②	②	·전면적으로 확대가 필요. 농어촌 이동거리를 감안, 확대 지원
	문화 이모작	②	②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음. 교육 등에 참여한 주체들의 활동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내용 필요
	지역문화 컨설팅 기반구축	②	②	·농어촌에 특화된 형태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필요
	학교예술강사 지원	①	②	·학교예술교육부터 문화 저변확대는 시작됨, 확대 필요
	예술꽃씨앗학교 지원	②	③	·농어촌에 대한 특성 고려 필요
<p>〈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생활문화시설 지역문화인력 배치 지원 사업: 현재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지역문화인력 배치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농어촌 지역 생활문화시설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지원 : 현재, 도시 지역에 더 많은 인력이 배치 지원됨 - 농어촌 문화여가 이동권 보장 사업: 농어촌 문화시설 및 여가시설로의 이동을 위한 무료버스 등의 이동권을 제공(예, 도서관수영장 버스 등) - 농어촌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소외지역 문화여가 지원 강화	문화누리카드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제공	①	①	·지원예산 확대(2019년 확대예정), 카드사용방식 변경(농어촌 카드사용장소가 없음), 더 많은 수요와 카드사용처 창출 필요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②	①	·사업은 의미가 크나, 현재 방식으로는 농어촌 지역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향유할 수 없음. 성과지표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함 ·'문화가 있는 날' 행사 공급자 인센티브와 수요자 측면에서 혜택이 미미

(계속)

정책군	주요 사업명	계속여부	내용개선	평가 사유
소외지역 문화여가 지원 강화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②	②	·다수의 농어촌 주민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 보완
	찾아가는 어린이 도서관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	②	①	·농어촌 지역과 크게 상관없으며, 사업의 효과가 미비(농어촌 삶의 질 향상계획에 담기에 미흡)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주체와 체계, 내용 등 전면적 개편 필요
	찾아가는 박물관(국립중앙 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	②	①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②	①	
	찾아가는 미술관교육 (현대미술관)	②	①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①	②	·농어촌 지역에 실질적 문화복지가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방식 개선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 농어촌 주민여행 활성화 지원:2019년 정부가 확대 추진하는 체크바캉스(근로자 여행지원) 방식으로, 농어촌 주민(특히 노인)의 여행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문화이용권 사업으로 여행을 하기에는 역부족)			
생활 속 문화참여 확대	생활문화센터 조성	②	②	·농어촌 지역 센터의 경우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도시와 매칭 비용 차별화 등) ·신규(신설) 조성보다 기존 시설의 재활성화 필요 ·공급자 위주보다 수요자 위주의 생활문화센터 운영 필요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①	③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사업의 성과가 큰 사업으로 판단 ·주민만족도가 높으며, 능동적인 문화활동 지원사업이므로 확대
	문화도시 문화마을 조성	②	③	·현재 시작하는 초기사업이므로 추진 후 평가와 개선점에 대한 피드백 필요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 농촌문화동호회 활동 지원: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예술동아리 지원'사업을 활용하거나, '농촌문화'를 특화한 농촌만의 문화동호회 지원 사업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원 - 농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현재 문화예술교육사업 예산 등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업이 삶의 질 향상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예술강사, 예술꽃씨앗 사업 등 학생대상 사업만 포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농촌 지역에 필요)			
전통·향토문화의 전승·활용	전통문화자원 복원 확산	①	①	·전통문화자원 복원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업내용으로 개선 필요
	문화관광축제 지원	③	①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성과지표 개편 (지원유형 분리: 도시형, 농촌형)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 농촌축제지원: 농촌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과 관련된 농촌축제 개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농촌축제를 신규 포함				
<정책군 외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농촌형 문화일자리 관련 - 문화·여가 향유를 넘어 일자리로 발전되도록 지원				

주 1) 계속여부: ① 확대 ② 유지 ③ 폐지로 평가

2) 내용개선정도: ① 전면 개편, ② 일부 개선, ③ 현행 유지로 평가

⑥ 환경·경관 부문

○ 문제점

-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정량적인 성과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우수한 이행률과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성과지표의 적정성, 정책의 시행체계와 방법 등에서는 정책별로 차이가 있어 보완이 필요함.
-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의 경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목표의 세부 목표로 설정하기에는 사업특성과 내용, 범위 등이 다소 맞지 않아 개선이 요망됨.
-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환경 조성)** 축산분뇨 이외에 일반적인 관행 농업에 따른 환경 및 경관 훼손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며 도입 배경에 일반 관행농업에 따른 환경 및 경관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못하고 있음. 친환경농업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일반 관행농어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농업환경프로그램을 내역사업으로 도입하는 등 주요과제의 변경이 필요함. 축산분뇨 자원화 및 관리체계 개선 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 필요하나 현재 사업은 이미 발생된 가축분뇨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지속적인 시설비 지원예산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근원적으로 가축분뇨를 현장 사육 농가에서 처리하는 환경친화적인 사육방법 도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제언

-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농어촌 주민들이 스스로 아름다운 생활환경과 문화경관의 가치 인식과 유지를 위해 동기 부여하도록 예산 지원을 통한 환경·경관 정책에서 벗어나 도·농 간 사회적 함의로 농어촌 문화경관 가치를 인정하고 함께 유지(지원)해 나갈 수 있는 농어촌경관 보호지구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함.
- 농업유산의 공공재적 가치를 고려하여, 농업유산 지역으로 지정된 농업생산지역의 경작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적 직불금 형태의 경작장려

지원제도에 대한 조속한 검토와 시행이 필요함.

- 농어촌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농어촌생태관광의 공급전략에서 벗어나 도시 지역에서도 농어촌 생태관광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생태관광 사업기회와 연결하고 예비 귀농·귀촌 인재들의 참여를 장려하여 농어촌생태관광 서비스 수준 향상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함.
-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농어촌의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마을도랑, 마을숲, 빈집, 도로 등 훼손되거나 유향화된 생활환경의 복원 및 재생 등을 위한 관리·지원방안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농촌 지역의 고령화, 과소화 대비 생활환경의 복원 및 재생을 위한 정책사업이 발굴되어야 함.
-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정책적, 국민적 관심이 높은 폭염, 미세먼지 등의 환경위해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농촌분야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상·하수도 사업의 경우 농어촌 서비스 기준으로 제시되었지만, 실제 사업 분야에서는 누락되어 있어 서비스 기준과 사업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함.
-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환경 조성)** 공익형 직불제는 기본형에서도 환경 및 경관을 보전하는 농법을 도입하는 최소한의 환경보전 의무수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농업의 환경 및 경관보전 효과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농어업활동이 환경 및 경관에 주는 영향을 농어업인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농어업 활동을 통한 구체적인 환경 및 경관을 보전하는 사업이 도입되어야 함.

○ 정책군별 주요 사업 평가 종합

〈표 2-39〉 환경·경관 부문 세부 사업 평가 결과

정책군	주요 사업명	계속여부	내용개선	평가 사유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주민 자율적 경관보전활동 추진	②	②	·경관계획수립 의무화 지침이 자율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성과지표의 수정이 필요함 ·경관형성계획 수립보다는 경관보전협의체 구성과 협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경관보전직불제 개선	②	②	·성과지표로서 방문객 증가율을 사용하고 있으나 단위 사업에 대한 방문객수 집계와 통계처리방식이 모호
	① 조건불리지역 활성화를 위한 직불금 지급	①	②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익형 직불제를 통한 통합적 시행체계 개편 필요 ·직불금 인상 및 지방재정 완화를 위한 국고부담비를 확대
	②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②	②	·유형별, 특성별 수산직불제 지급에 대한 개선안 필요
	농업유산 지정·관리	②	②	·지방농업유산제도의 신설을 통한 신규 농업유산 발굴 및 양적 확대 필요
	농촌 경관 및 공간계획 기반기술 구축	②	②	·농촌 지역 맞춤형 재난 대비 기술개발, 주민 참여형 농촌 지역 재난 복구 기술개발 연구 등은 정책군 내의 연관성이 약함
	생태숲 조성	②	②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보다 도시민들의 휴양공간 제공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될 수 있는 맞춤형 사업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농어촌 생태관광 활성화	①	②	·생태관광 활성화는 지역개발의 수단뿐 아니라 농어촌 자원의 보호와 관리 개념이 강하게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확대 시행이 필요함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 농촌경관 보호지구제도: 농어촌 주민들이 스스로 아름다운 생활환경과 문화경관의 가치를 인식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 자율적 경관 보전 활동 장려를 위한 농촌경관 보호지구제도 도입 - 전통농업 경작유지 제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에 전통농업의 경작활동 유지를 위한 전통농업 경작유지제도를 포함하고, 공익형 직불금 제도에 해당 내용을 신설 - 농어촌 생태관광 리모델링(재생사업) 사업: 2000년 이후 시행된 농어촌 생태관광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시설이 노후하고, 운영 주체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 운영 활성화 도모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②	②	·민간 부문의 쓰레기 수거업체 및 재활용업체들과 더불어 생활쓰레기 종합관리 협력체계(생활쓰레기 자원화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중심 역할을 센터에서 추진하도록 개선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	②	②	·영농폐기물과 달리 농촌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마을 단위의 자율적 분리 배출을 유인하기 어려울 수 있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②	③	·마을 공동체에 역할을 부여하거나 우수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활성화 방안 검토

(계속)

정책군	주요 사업명	계속여부	내용개선	평가 사유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주민참여형 마을 도랑 살리기	①	②	· 개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마을만들기 등의 활동과 연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사업방식의 개선 필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②	③	· 태풍 등 집중강우 발생 시기를 고려하여 현장 점검과 쓰레기 발생원 파악 필요
	갯벌생태계 복원	②	②	· 공간적 규모, 소득창출 방안, 수혜자 등과 관련해 더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②	②	· 운영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마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 유희화된 생활환경의 복원 및 재생: 마을숲, 빈집, 도로 등 훼손되거나 유희화된 생활환경의 복원 및 재생 등 관리·지원방안 지속적으로 확대 - 환경 위해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농촌 분야의 대책: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정책적, 국민적 관심이 높은 폭염, 미세먼지 등의 환경 위해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농촌 분야의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농촌 인지도적 관심 또한 부족			
지속가능한 농어업생산환경 조성	유기질비료 공급으로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②	②	· 유기질 비료를 지자체와 공급업체가 결정하고 일률적으로 보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농업인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과 함께 직불제로 통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②	③	· 이 사업의 핵심사항인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지역 주민의 반대로 설치되기 어려운 상황도 연출됨
	친환경 어구보급	②	②	· 생분해성어구 생산기술특허 개발 건수, 사용자 교육 참여자 수, 사용 선택 수 증가율 등의 지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
	해양폐기물 정화	②	③	· 해양폐기물 처리를 통한 해양환경정화에 효과를 주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됨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②	②	·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공동체 형성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음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	②	③	·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통해서 농어촌 지역의 환경 보전에 일정 수준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됨
	축산분뇨 처리 지원 및 관리 체계화	②	②	·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과정에서 사업의 효과에 대해 지역 주민을 설득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직한 사업임 · 위의 <축산분뇨자원화·에너지화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 공익형 직불제의 확대 개편: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감소되는 소득을 보상하는 직불금 제공 등 - 환경친화형 축산업 지원 장려금을 제공: 가축분뇨의 발생 및 처리를 공공시설에 의존하기보다 축산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			
친환경 에너지 보급	농업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체에너지 보급	②	③	· 본 사업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함
	친환경에너지 보급	②	③	· 과거 실적 및 기업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제공하여, 농가에서 직접 관련 시행 업체를 선정하도록 해야 함

(계속)

정책군	주요 사업명	계속여부	내용개선	평가 사유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	②	②	·수익금을 농가나 어가의 재생에너지 설비나 에너지효율 개선 설치비의 일부를 보전하는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조정 필요
	목재펠릿 사용 확대	②	②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의 성과와 연계 필요
	①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로 친환경에너지 다변화	②	②	·운영비 절감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해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예산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개선이 요망됨
	② 해조류바이오매스 통합활용기반 구축	②	③	·사업의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계획 기간 내에 일정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음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없음				

주 1) 계속여부: ① 확대 ② 유지 ③ 폐지로 평가

2) 내용개선정도: ① 전면 개편, ② 일부 개선, ③ 현행 유지로 평가

7 안전 부문

○ 문제점

- **(자연재해·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제3차 기본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자연재해가 과거에서부터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통적인 자연재해인 풍수해와 산불, 그리고 산사태에 국한하여 다루고 있음. 기존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한파, 폭염, 가뭄 등과 같이 우리에게 비교적 생소한 신종 재난에 대해서 안전한 농어촌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함.
- **(안전한 영농·영어활동 기반 조성)** 현재 보건·복지 부문에 속해 있는 농업 안전보건센터 사업과 어업안전보건센터 사업도 농어업인 업무상 재해 및 질병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도 안전 부문에 포함하여 전면적인 사업 재분류가 필요함.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사업은 농어업인의 신체나 생명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며, 농축산물과 양식수산물 및 관련 시설 및 장비, 즉 물적 재산에 대한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전 부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분류하기 어려움.

○ 정책 제언

-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인 안전사고 및 재해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5년마다)에 따라 사업(과제)을 발굴·설정하고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약칭 :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1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시행계획은 동법 시행령 제7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농촌진흥청장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음.
- **(농어업인 직업성 질병 규명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 농업인이 일반인에 비해 유병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농업인 질병의 상당부분이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거나 하우스나 축사 등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작업하기도 하며, 수시로 각종 농기계를 다루는 등 농업 특성상 불가피한 농작업으로 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병을 규명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집행의 탄력성 확보)** 국가나 지방정부의 예산은 주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당위성을 지니고 있음. 이에 따라 정책 집행의 탄력성이 매우 떨어지는 비효율성이 발생함.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 탄력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의 타당성 확보가 필요함. 특히 안전관련 사업의 경우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예산 필요성이 급증하는 경우가 많으며 반대로 예산 집행의 필요성이 급감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보다 탄력적인 예산집행 및 운용이 필수적인 분야임. 정책 집행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 설정과 효과성 향상을 위한 정책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임.
-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의 정책 방향 전환)** 하향식 정책 형성에 따

르는 정책 집행과 성과평가는 하드웨어 구축사업에 치중하는 성향이 강함. 사업내용이 명확하고 평가가 용이한 측면이 있음. 하지만,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같은 정책사업들은 하드웨어도 중요하나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중요한 사업들도 많이 있음.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 간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함. 생활안전지도와 지역범죄예방활동, 폭력 예방 교육 인프라 강화 등은 하드웨어 사업이라기보다 소프트웨어 사업에 가깝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제방이나 댐과 같은 물리적 방재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안전지도, 범죄예방교육, 교통안전활동 강화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함께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정책군별 주요 사업 평가 종합

〈표 2-40〉 안전 부문 세부 사업 평가 결과

정책군	주요 사업명	계속여부	내용개선	평가 사유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수리시설 안전관리	②	③	-
	소하천 정비사업	①	②	·IoT 등 4차산업혁명 기술과 연계한 사업 추가 필요
	여항시설 보강	②	③	-
	배수개선 사업	②	③	-
	산악기상 관측망 구축	②	②	·농어촌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산불예방·방지대책	②	②	·소득증대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됨
	산림보호지원단 사업	③	①	·고용창출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됨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강화	②	②	·산사태 위험을 직접 예방하는 방법과 산사태 위험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중 기본계획의 취지에 맞는 것으로 방향전환 필요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한파, 폭염, 가뭄 등 신종재난 대책				
재해에 안전한 영농활동 기반 조성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 보험)	②	②	·가입률 제고 방안 강구 ·보장수준 확대
	농업인업무상재해보장제도 지원	③	①	·사업 목적 명확화, ·타 사업과 연계·통합, 재정비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②	②	·가입률 제고 방안 강구
	어선원 및 어선 보험 지원	②	②	·가입률 제고 방안 강구

(계속)

정책군	주요 사업명	계속여부	내용개선	평가 사유
재해에 안전한 영농활동 기반 조성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 범위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수입보장보험)	②	②	·품목별 가입률 제고 방안 강구
	어업재해보험	②	②	·품목별 가입률 제고 방안 강구
	어작업자 건강위해요소 측정 및 어업인 질환 현장조사	②	②	·전국적 조사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농업인 업무상 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국립농업과학원 수행 5개 연구 과제)	③	①	·사업 목적 명확화 ·타 사업과 연계·통합, 재정비
	농작업 안전관리 및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익장비 지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익장비 지원)	③	①	·사업목적 명확화 ·“농작업 편익장비 개발·지원”으로 사업명 변경 제안
	농작업 안전기술 개발 및 정보화(국립농업과학원 수행 4개 연구과제)	③	①	·사업 목적 명확화 ·타 사업과 연계·통합, 재정비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없음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지능형 CCTV 및 CCTV 통합관제센터 확대 구축	②	③	
	생활안전지도 구축 및 공개	①	②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커뮤니티 단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농어촌 지역 범죄예방활동 강화	①	②	·경찰청 범죄 예방 진단팀의 자체 예산이 없어 지자체의 관심에 따라 성과가 결정됨, 경찰의 자체 사업 추진 검토 필요
	농어촌 폭력예방교육 인프라 강화(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②	③	
	위험도로 구조 개선	①	②	·사업비가 감축되는 추세로 사업 위축이 우려되며, 주민이 참여하는 교통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업 체감도를 높일 필요
	교통안전 활동 (노인보호구역 지정, 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정비)	①	②	·사업이 주로 노인 보호 구역 설정에 그침 ·예산 확보를 통한 실질적 여건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어선 안전장비 3종 지원)	①	②	·안전 장비 구매에 부담이 커 사업 집행률이 낮음. 조업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자부담 비중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신규 도입이 필요한 사업> - 노인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농촌 노인들의 자가용 운행, 대중교통 이용,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 유형과 사고 예방법에 대한 교육 자료 개발 및 교육 실시			

주 1) 계속여부: ① 확대 ② 유지 ③ 폐지로 평가

2) 내용개선정도: ① 전면 개편, ② 일부 개선, ③ 현행 유지로 평가

제 3 장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 결과 및 과제

1.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성과

1.1. 농촌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여건 변화

1.1.1. 농촌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부문별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농촌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 조사 목적: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주요 부문별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의견을 조사
 - 각 부문 및 하위 정책군별로 중요도와 성과의 우수성을 각각 파악
 - 조사 대상: KREI리포터 및 농촌 주민 1,500명 중 661명 (응답률: 44.1%)

- 농촌 주민 설문조사 결과, 7대 부문 중 중요한 정책 부문은 보건·복지 (30.3%), 경제활동(25.9%), 정주생활기반(15.4%) 순으로 응답

- 7대 부문 중 제3차 기본계획 동안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정책 부문은 보건·복지(35.9%), 문화·여가(14.7%), 정주생활기반(12.9%) 순으로 응답
 - 중요한 정책 부문에 대해서는 읍부와 면부 주민간 큰 차이가 없으나, 우수한 정책 부문에 대해서는 읍부는 문화·여가 부문, 면부는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정책이 상대적으로 잘 되었다고 평가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경우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성과 측면에서는 우수하다는 응답 비율이 낮음.

〈표 3-1〉 삶의 질 정책 7대 부문 중요도 및 성과 평가

단위: %

구분	부문	중요한 정책 부문			성과가 우수한 정책 부문		
		전체 (n=661)	읍부 (n=107)	면부 (n=436)	전체 (n=661)	읍부 (n=107)	면부 (n=436)
전체	보건·복지	30.3	32.5	30.1	35.9	34.6	36.2
	교육	6.4	5.7	6.1	8.2	7.2	8.4
	정주생활기반	15.4	12.9	15.8	12.9	9.6	14.3
	경제활동·일자리	25.9	26.3	25.5	7.3	7.2	6.7
	문화·여가	6.9	6.7	7.4	14.7	21.6	13.2
	환경·경관	9.8	10.0	10.3	12.9	13.0	13.0
	안전	5.2	5.7	4.7	8.2	6.7	8.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전체 응답자 중 읍·면부 거주지를 밝힌 주민에 대한 집계

2) 1,2순위를 합하여 집계

자료: 농촌 주민 설문조사 결과

- 정책 부문별 하위 정책군의 중요성 및 제3차 기본계획 동안의 성과에 대해 설문조사 실시
 - 보건·복지 부문의 경우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및 의료취약지 해소’ 등 기본적인 보건·복지 서비스 관련 정책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해당 정책군의 성과가 타 부문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교육 부문은 ‘공교육 서비스 확충’ 및 ‘농어촌 학생 교육 복지 확대’ 정책군을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역시 해당 정책군의 성과가 높은

(계속)

부문	정책군	중요한 정책 과제			성과가 우수한 정책 부문		
		전체	읍부	면부	전체	읍부	면부
경제활동 일자리	6차산업화 기반 마련	33.1	30.8	32.7	43.2	44.9	42.9
	창업 촉진 및 역량 강화	17.4	15.4	17.4	22.0	19.4	22.0
	농어촌 관광 체계화품질제고	11.9	14.4	12.2	16.6	20.4	15.9
	농어촌 일자리 지원	37.6	39.4	37.6	18.1	15.3	19.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문화여가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34.7	37.1	35.6	41.1	45.9	39.7
	문화소외지역 지원 강화	29.7	31.4	29.6	20.4	24.5	20.2
	주민의 능동적 문화 참여 확대	23.0	22.9	23.1	21.2	17.3	21.4
	전통·향토문화의 전승·활용	12.6	8.6	11.6	17.2	12.2	18.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환경경관	농어촌 여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22.4	18.4	23.3	31.9	34.7	30.8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49.7	52.4	48.5	40.5	40.8	41.7
	지속가능한 농어업생산환경 조성	27.9	29.1	28.2	27.6	24.5	27.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안전	자연재해,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52.0	45.6	54.5	43.7	37.6	43.0
	안전한 영농·영어 활동 기반조성	24.4	31.1	21.3	21.3	23.8	22.3
	농어촌의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17.5	15.5	17.4	20.7	22.8	19.7
	안전한 보행·교통 환경 조성	6.1	7.8	6.7	14.3	15.8	15.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순위만 집계

자료: 농촌 주민 설문조사 결과

1.1.2. 2018년 정주민족도 조사 결과

-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의 현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도시·농촌 주민의 정주민족도 조사를 실시
 - 조사 목적: 농촌 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사업 발굴에 활용
 - 조사 대상: 총 3,152명(동지역 949명, 읍/면지역 2,203명)
 - 조사 방법: 인터넷 조사 및 전화 인터뷰 조사

- 포괄적인 만족도 결과를 살펴보면, 도·농 간 차이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마을과 시·군 발전 전망에서의 점수 차이도 줄어드는 추세

〈표 3-3〉 도시농촌 주민의 포괄적인 삶의 질 만족도 평균점수 변화

구 분	현재 행복감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마을 발전 전망			시군 발전 전망			(신규) 마을발전 정도
	'16	'17	'18	'16	'17	'18	'16	'17	'18	'16	'17	'18	'18
도시 지역(동) (N=949)	6.4	6.2	5.9	6.7	6.3	6.1	6.8	6.7	6.5	6.9	6.8	6.5	6.2
농촌 지역(읍·면) (N=2,203)	6.4	6.2	6.2	6.5	6.3	6.2	6.0	6.1	6.2	6.4	6.5	6.3	6.0
도·농 차이(농촌-도시)	0	0	0.3	-0.2	0	0.1	-0.8	-0.6	-0.3	-0.5	-0.3	-0.2	-0.2

주: 2016년, 2017년 조사는 10점 척도(1~10점 부여). 2018년 조사는 11점 척도(0~10점 부여) 사용
자료: 유은영·박지숙(2017) 재작성

- 전체적으로 볼 때 도·농 간 만족도 격차는 감소하고 있으나, 부문별로는 보건·복지, 문화·여가, 교육 순으로 도·농 간 격차는 여전히 유지
 - 전반적으로 7대 정책 부문의 도·농 간 만족도 격차는 줄어들고 있음.
 - 교육 및 문화·여가 부문의 경우 도시·농촌 주민 간 만족도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 부문이 경우 도시·농촌 주민 간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크면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음.

〈표 3-4〉 부문별 정주민족도 결과 증감

부문 (평균점수)	2016년			2017년			2018년		
	도시 (n=950)	농촌 (n=2337)	차이	도시 (n=1039)	농촌 (n=1991)	차이	도시 (n=949)	농촌 (n=2203)	차이
보건·복지	7.1	5.9	-1.2	7.0	5.8	-1.2	6.8	5.6	-1.2
교육	6.8	5.4	-1.4	6.9	5.8	-1.1	6.3	5.6	-0.7
정주생활기반	7.4	6.2	-1.2	7.0	6.2	-0.8	6.9	6.3	-0.6
경제활동·일자리	5.7	4.8	-0.9	5.9	5.2	-0.7	5.6	5.1	-0.5
문화·여가	6.6	4.6	-2.0	6.5	5.1	-1.4	6.1	5.4	-0.7
환경·경관	6.4	5.8	-0.6	6.5	5.8	-0.7	6.2	5.9	-0.3
안전	6.9	6.6	-0.3	7.0	6.5	-0.5	6.8	6.3	-0.5
전체평균	6.7	5.6	-1.1	6.7	5.8	-0.9	6.4	5.7	-0.7

주: 2016년, 2017년 조사는 10점 척도(1~10점 부여). 2018년 조사는 11점 척도(0~10점 부여) 사용
자료: 유은영·박지숙(2017) 재작성

○ 세부 정책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

- 보건·복지 정책 부문의 응급의료, 의료서비스 범위, 임신·출산 관련 의료 서비스 등 보건서비스 영역, 대중교통 서비스 부문이 상대적으로 도·농 주민 간 만족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3-5〉 삶의 질 세부 정책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2018년)

부문	도시 지역	농촌 지역	도·농 차이	설문 문항																				
보건 복지	7.3	6.1	-1.2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7.1	5.6	-1.5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범위(종류)와 수준이 양호하다																				
	6.6	5.6	-1	아동의 양육보호를 위한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																				
	6.4	5.7	-0.7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																				
	7.0	5.5	-1.5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6.4	5.6	-0.8	노인 돌봄, 보육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6.5	5.1	-1.4	(신규문항)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6.8	5.6	-1.2	(평균)																				
교육	6.5	5.8	-0.7	(신규문항) 지역 학교(초/중/고)의 ()에 대해 만족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문항</th> <th>도시</th> <th>농촌</th> <th>차이</th> </tr> </thead> <tbody> <tr> <td>①교사 전문성 (교육방법, 면학분위기 조성, 학생관리 등)</td> <td>6.4</td> <td>5.7</td> <td>-0.7</td> </tr> <tr> <td>②학생들의 성취수준</td> <td>6.4</td> <td>5.6</td> <td>-0.8</td> </tr> <tr> <td>③학교시설</td> <td>6.5</td> <td>5.9</td> <td>-0.6</td> </tr> <tr> <td>④통학의 편리성</td> <td>6.8</td> <td>5.8</td> <td>-1</td> </tr> </tbody> </table>	문항	도시	농촌	차이	①교사 전문성 (교육방법, 면학분위기 조성, 학생관리 등)	6.4	5.7	-0.7	②학생들의 성취수준	6.4	5.6	-0.8	③학교시설	6.5	5.9	-0.6	④통학의 편리성	6.8	5.8	-1
				문항	도시	농촌	차이																	
				①교사 전문성 (교육방법, 면학분위기 조성, 학생관리 등)	6.4	5.7	-0.7																	
				②학생들의 성취수준	6.4	5.6	-0.8																	
	③학교시설	6.5	5.9	-0.6																				
	④통학의 편리성	6.8	5.8	-1																				
	6.5	5.7	-0.8	학생들이 방과후에도 좋은 교육(학교 방과후교육, 사교육)을 받을 수 있다.																				
6.0	5.3	-0.7	어른들이 배울 수 있는(평생학습) 기회가 충분하다.																					
6.0	5.4	-0.6	(신규문항)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활발한 교육활동이 이뤄진다.																					
6.3	5.6	-0.7	(평균)																					
정주 생활 기반	6.7	6.6	-0.1	(신규문항) -->내가 거주하는 주택은																				
				<table border="1"> <thead> <tr> <th>문항</th> <th>도시</th> <th>농촌</th> <th>차이</th> </tr> </thead> <tbody> <tr> <td>① 규모가 적당하다.</td> <td>6.5</td> <td>6.5</td> <td>0</td> </tr> <tr> <td>②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시설 등의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다.</td> <td>7.0</td> <td>6.8</td> <td>-0.2</td> </tr> <tr> <td>③ 지붕, 벽, 바닥 등이 상태가 낙후되지 않고 양호하다.</td> <td>6.6</td> <td>6.6</td> <td>0</td> </tr> <tr> <td>④ 통풍, 단열이 잘 되고 화재 위험에서 안전하다.</td> <td>6.5</td> <td>6.5</td> <td>0</td> </tr> </tbody> </table>	문항	도시	농촌	차이	① 규모가 적당하다.	6.5	6.5	0	②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시설 등의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다.	7.0	6.8	-0.2	③ 지붕, 벽, 바닥 등이 상태가 낙후되지 않고 양호하다.	6.6	6.6	0	④ 통풍, 단열이 잘 되고 화재 위험에서 안전하다.	6.5	6.5	0
				문항	도시	농촌	차이																	
				① 규모가 적당하다.	6.5	6.5	0																	
				②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시설 등의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다.	7.0	6.8	-0.2																	
③ 지붕, 벽, 바닥 등이 상태가 낙후되지 않고 양호하다.	6.6	6.6	0																					
④ 통풍, 단열이 잘 되고 화재 위험에서 안전하다.	6.5	6.5	0																					

(계속)

부문	도시 지역	농촌 지역	도·농 차이	설문 문항
정주 생활 기반	7.0	6.4	-0.6	도시가스·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인프라가 양호하다
	7.1	6.2	-0.9	생필품 구입, 목욕탕, 이·미용실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7.1	5.8	-1.3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7.5	6.7	-0.8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6.2	5.9	-0.3	주민들이 마을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6.9	6.3	-0.6	(평균)
경제 활동 일자리	5.6	5.1	-0.5	지역에서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5.6	5.2	-0.4	최근 3년간을 볼 때,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	5.2	-	농산물 가공판매, 농촌 체험 및 관광, 농가 식당 및 레스토랑 등과 같이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농촌 지역만 조사)
	5.6	5.1	-0.5	(신규문항)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알선, 역량 강화 교육(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 구직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5.4	5.0	-0.4	(신규문항)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 일자리 지원, 정책 지원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5.6	5.1	-0.5	(평균)
문화 여가	6.2	5.4	-0.8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6.1	5.3	-0.8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6.2	5.6	-0.6	지역축제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향토문화를 접할 수 있다.
	5.7	5.1	-0.6	(신규문항) 동아리, 소모임 등 지역주민들이 문화공동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6.1	5.4	-0.7	(평균)
환경 경관	6.4	6.1	-0.3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5.9	5.6	-0.3	지역의 에너지정책 노력으로 주거나 생업과 관련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6.3	5.9	-0.4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6.2	5.9	-0.3	(평균)
안전	6.7	6.6	-0.1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6.4	6.3	-0.1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7.1	6.6	-0.5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7.0	6.3	-0.7	소방서 등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시설이 가까운 거리 내에 잘 구비되어 있다
	6.7	6.1	-0.6	농기계 등으로 인한 농작업 재해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다.(농업종사자만 조사)
	6.7	6.0	-0.7	(신규문항) 우범지역 및 사고위험 지역에 CCTV 등의 안전시설과 설비가 잘 구축되어 있다.
	6.8	6.3	-0.5	(평균)
전체 평균	6.4	5.7	-0.7	(전체 평균)

자료: 2018년 정주민족도 조사 결과.

1.2. 농어촌 서비스기준 핵심항목 점검 결과

-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의 질 수준으로 2011년에 도입, 2015년부터 7개 부문, 17개 세부항목으로 개편 - 2019년을 중기 목표치로 설정하고 공식 통계자료와 부처 및 지자체 협조자료를 포함 29개 통계자료를 통해 매년 이행 실태를 점검
-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연도별 이행실태 변화를 살펴보면, 상수도, 난방, 광대역망, 하수도, 방범 설비(CCTV설치)등 하드웨어 중심의 서비스기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진료서비스, 초중학교, 소방출동 등의 서비스기준은 하락

〈표 3-6〉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서비스기준 핵심항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중기목표 (’19)
보건 복지	진료서비스	76.8	73.9	71.7	71.0	80
	응급서비스	98.4	98.6	98.6	99.4	97
	노인서비스	71.8	70.1	71.1	81.5	80
	영유아	69.7	69.2	69.6	69.0	80
교육	초중학교	71.1	71.8	70.2	70.3	100
	평생교육	21.8	19.7	18.9	20.4	40
정주생활 기반	주택*	-	-	-	-	95
	상수도	67.8	69.3	71.3	72.9	82
	난방	53.1	57.0	60.0	63.1	70
	대중교통	90.4	90.4	88.6	88.6	100
	광대역통합망	85.8	92.8	96.4	완료	90
경제활동일자리	창업및취업교육	67.3	67.4	75.4	73.2	100
문화여가	문화프로그램	91.3	92.0	91.3	93.5	100
환경경관	하수도	80.8	81.0	82.0	82.9	85
안전	방범설비	35.8	43.2	49.3	53.6	60
	경찰순찰*	-	-	-	-	100
	소방출동	41.1	25.2	24.6	18.8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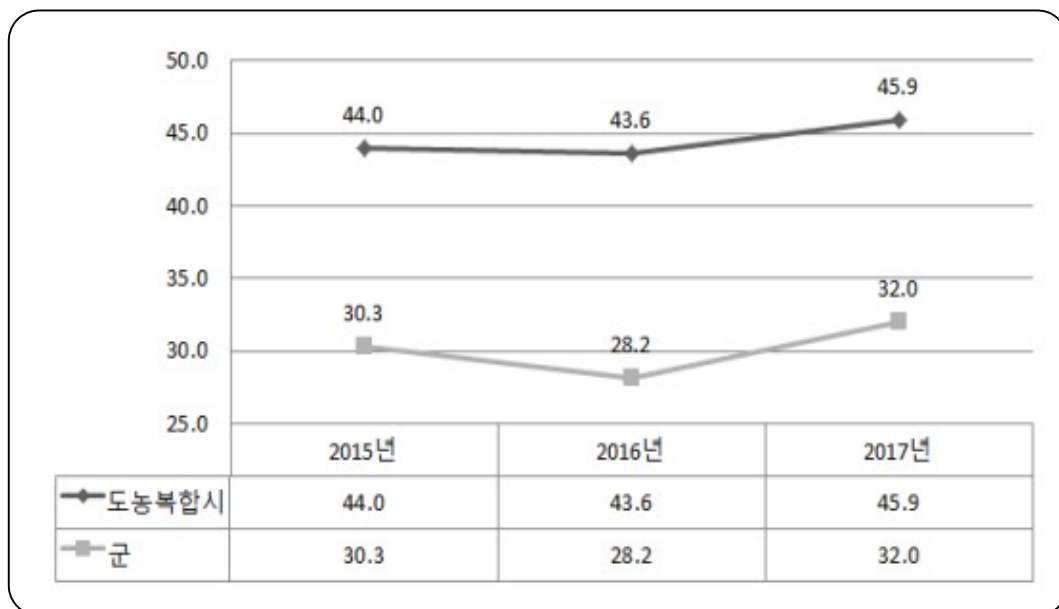
주 1) '주택', '경찰순찰' 항목은 구득 가능한 자료가 없어 비교 항목에서 제외하였음.

2) '응급서비스' 항목은 2015년에는 138개 전체 시·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데 반해 2016년에는 소방서가 입지한 114개 시·군, 2017년에는 117개 시·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짐.

자료: 엄진영 외(2015); 김광선 외(2016); 정도채 외(2017); 김용욱 외(2018) 미발간

- 서비스기준의 도농복합시, 군지역 이행실태를 비교하면,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군지역 중 기준치에 못 미치는 부진 지역이 다수 분포함을 의미
 - 평균적으로 도농복합시는 16개 항목중 7~8개 항목의 중기목표치를 달성한 반면, 군 지역은 약 5개 항목의 달성에 그침.

〈그림 3-1〉 지역별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률(평균)의 변화



주: 경찰순찰 항목을 제외한 16개 항목의 시·군별 중기 목표치 달성 비율을 집계한 결과
 자료: 엄진영 외(2015); 김광선 외(2016); 정도채 외(2017)

1.3. 삶의 질 정책 부문별 주요 성과지표 달성 결과

- 제3차 기본계획 정책 부문별 주요 성과 목표 달성 현황
 - 제3차 기본계획에서 각 정책 부문별로 2019년까지의 정책 성과지표를 설정

- 2017년 기준, 점검이 가능한 41개 성과지표 중 조기에 중기(2019년) 목표를 달성한 목표는 7개(응급의료시설, 농어촌 거점중학교, 농어촌학교 ICT 기기보급률, 농어촌 광대역 통신망 구축,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 문화·예술 관람률,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수)에 불과
- 일부 항목의 경우 달성 수준이 하락하거나(보건·복지 만족도), 2017년 실적과 2019년 목표 간 격차가 커,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표 3-7〉 부문별 주요 성과 목표 달성정도

부문	성과지표	성과 목표				
		2014 (실적)	2015 (실적)	2016 (실적)	2017 (실적)	2019 (목표)
보건·복지	①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자(천명)	320	350	365	380	400
	② 농지연금 가입자 수(명)	3,957	5,206	6,783	8,631	12,000 (9,000)
	③ 응급의료시설 부재 군 지역(개)	12	12	5	4	5
	④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개소)	580	606	625		630
	⑤ 농어촌 보건복지 만족도(10점척도)	5.69	5.91	5.94	5.8	-
교육 여건	⑦ 농어촌 거점중학교(누계, 개교)	50	80	80	80	(17) 80
	⑧ 농어촌학교 ICT 기기보급률(%)	48	100	100	100	(17) 100
	⑨ 농어촌 특성화 프로그램(개)	-	1	2	6	10
	⑩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참여학교 수)	457	1,500	1,742	1,647	(17)1,700
	⑪ 농촌유학 지원시설 수(개소)	16	19	21	18	25
	⑫ 읍·면내 행복학습센터 수(개소)	36	69	92		99
	⑬ 평생학습도시 지정 시·군·구 수(누계, 개)	-	-	-	153	160
	⑬ 농어촌 교육여건 만족도(10점척도)	4.94	5.48	5.37		-
정주생활기반	⑭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육성(누계, 개소)	-	15	33	51	80
	⑮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	71	73	76.3	-	82
	⑯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65.9	67.1	67.4	-	85
	⑰ 50세대 미만 농어촌 광대역통합망 구축률(%)	66.5	80.9	92.0	101.8	-
	⑰-1 농어촌 광대역통합망 구축률(%)	81	85.8	92.8	96.4	90
	⑱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10)88.3	-	-	-	90
	⑲ 농촌 주택개량 융자지원(누계, 천 동)	7.8	15.2	22.1	30.3	37.3
	⑳ 슬레이트주택 철거(누계, 천 동)	51	79	106	134	187
	㉑ 빈집(폐가) 정비(누계, 천 동)	121.7	129.4	136.8	144.3	151.3

(계속)

부문	성과지표	성과 목표				
		2014 (실적)	2015 (실적)	2016 (실적)	2017 (실적)	2019 (목표)
경제활동· 일자리	㉔ 농가소득 대비 농외소득률(%)	31	-	-	-	36
	㉕ 6차산업화 지구 수(누계)	3	9	13	16	25
	㉖ 6차산업 사업자 인증 수(개)	(예비)379	802	1,130	1,397	1,500
	㉗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만 명)	829	871	1,001	1,111	980
	㉘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 (누적, 건)	-	42,602	90,892	159,486	-
	㉙ 마을단위 공동경영체(개)	(12)2,600	-	-	-	-
	㉚ 농어촌 경제활동·일자리 만족도(10점 척도)	4.28	4.77	4.83	5.20	-
	문화·여가	㉛ 생활문화센터 조성(누계, 개소)	25	48	67	81
㉜ 농어촌 문화마을 지정(개소)		2	13	29	32	50
㉝ 문화소외지역 생활문화 공동체지정(개소)		13	13	13	11	120
㉞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프로그램 수(개)		1,574	2,081	1,657	2,832	3,000
㉟ 문화예술 관람률(%)		71.3	(2년주기)	78.3	(2년주기)	73
㊱ 농어촌 문화·여가 만족도(10점척도)		3.15	4.69	4.63	5.1	-
환경·경관	㊲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개소)	4	6	7	9	13
	㊳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개소)	55	61	65	69	74
	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누계, 개소)	1,000	1,950	2,900		(17)3,950
	㊵ 마을 도랑 살리기 추진(개소)	-	62	77	89	300(누계)
	㊶ 친환경농업지구 조성(개소)	1,143	1,158	1,174	1,186	1,232
	㊷ 가축분뇨 자원화율(%)	89.5	90.2	90.6	91.0	91.0
	㊸ 목재펠릿 생산량(천 톤/년)	90	82	53	67	107
	㊹ 바이오에너지 생산용 소재 개발(종)	10	10	12	23	-
	㊺ 농어촌 환경·경관 만족도(10점 척도)	5.79	5.90	5.82	5.8	-
안전	㊻ 수리시설 보수·보강(누계, %)	47	51	55	57	62
	㊼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 개선율(누계, %)	56	57	58.1	59.8	66
	㊽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57.9	59.0	55.5	54.3	63.0
	㊾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수(명)	40	43	22,121	22,911	22,660
	㊿ 마을별 방범용 CCTV설치(%)	30	35.8	43.2	49.3	50
	㊽ 농업용기계 사고 발생 건수	1,100	1,130	1,083	911	900
	㊽ 1만명 당 보행 사망자 수(명)	0.6	0.35	0.33	0.33	0.5
	㊽ 농어촌 안전 만족도(10점척도)	6.53	6.61	6.57	6.5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2018)

1.4.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투융자 실적

-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기간의 총 투융자 규모는 51조 9천억 원 수준이 될 전망
 - 투융자 실적을 살펴보면 2015, 2016년은 투입 실적이 시행계획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7년의 경우 집행률은 95.7%로 삶의 질 정책 관련 불용액이 발생

〈표 3-8〉 연도별 삶의 질 정책 투융자 실적

단위: 억 원

구 분	2015년 (실적)	2016년 (실적)	2017년 (실적)	2018년 (계획)	2019년 (계획)	합계	
계획	95,800	105,519	104,407	115,073	98,668	519,467	
실적	119,961	131,198	109,067	-	-	-	
집행률(%)	125.2	124.3	95.7	-	-	-	
재원별	국비	93,897	94,830	71,563	79,100	68,695	408,085
	지방비	21,317	28,780	25,012	26,296	25,169	126,574
	기타	4,747	7,589	7,840	9,677	4,804	34,657
분야별	보건·복지	35,078	37,395	15,764	20,113	16,059	124,409
	교육	833	626	431	312	608	2,810
	정주생활기반	37,145	48,532	42,297	55,069	28,017	211,060
	경제활동·일자리	9,319	8,306	9,174	9,051	8,128	43,978
	문화·여가	3,573	4,658	5,146	4,760	3,607	21,744
	환경경관	10,989	11,128	11,399	11,122	12,864	57,502
	안전	23,024	20,553	20,196	19,205	29,384	112,362

주: 2018년은 삶의 질 시행계획, 2019년은 기본계획 보고서 상의 계획 예산을 기입

자료: 삶의 질 시행계획(각 연도);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2. 삶의 질 정책 추진기반 구축과 한계

2.1. 제3차 기본계획 삶의 질 정책 추진기반 구축 현황

- 삶의 질 정책 네트워크 구축
 - 전문지원기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국책연구기관, 시·도 발전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 삶의 질 심층연구 수행 및 삶의 질 계획 관련 평가, 이행실태 점검 실시
 - 부처 간 협업을 위한 정책 과제, 신규 사업의 발굴·기획이나, 지자체의 삶의 질 정책을 추동할 수 있는 정책 과제 제시는 부족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하위에 분과위원회 운영
 - 보건·복지, 정주생활기반, 교육·문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년 분과 위원회를 개최하여 삶의 질 정책 어젠다 논의
 - * 분만취약지역 사업 개선, 소규모 학교 통폐합 대응 방안 등(2017년 분과 위)
 - 농식품부(해수부) 관계 부서 하에 운영되었으며, 타 부처의 낮은 관심으로 인해 활발한 정책 토론 및 대안 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함
- 농어촌영향평가 제도 개선
 - 전문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영향평가 제도 운영 지침 수립(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예정)
- 현장의 정책 체감도 평가를 위한 현장자문단 및 정책 모니터링단 운용
 - 지자체 공무원 그룹과 전문가·활동가 그룹은 ‘현장자문단’으로서 삶의 질 정책 관련 자문에 참여
 - KREI 리포터·통신원을 삶의 질 정책 모니터링단으로 활용

- 삶의 질 컨퍼런스, 정책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삶의 질 정책 관련 설문조사 수행 시 현장자문단 및 정책 모니터링단의 의견 청취

2.2. 제3차 기본계획 삶의 질 정책 추진기반 관련 문제점

-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안전 부재, 부처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해 서면회의로 개최되어, 안전에 대한 형식적인 논의에 그치고 정책 조정 성과 미흡
 - * 본위원회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총 18회 개최(연평균 1.4회), 대면회의 7회(2013~2017 1회), 서면회의 11회, 총리 대면보고 2회(2015, 2017)
 -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총괄하는 사무국의 역할 발휘에도 제약이 따름.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운영하지만, 부처간 업무 연계·조정 역할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
 - 부처 간 상시적인 협조와 조정, 의견 수렴 및 정책 피드백 등을 목적으로 주요 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부처의 관심이 저조하여 운영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특별위원회, 삶의 질 기획단, 부처간 협업 시범사업 등 당초 기획했던 삶의 질 정책 기반 강화 방안 미추진
-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환류 미비
 -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부진 과제 및 우수 과제에 대한 조치, 농어촌 영향평가 실시 및 환류 등 삶의 질 기본계획 실행 및 관리 방안의 이행을 위한 부처 간 협력 및 정책 수단 미흡

- 지자체 삶의 질 추진 기반 구축 미흡
 - 시·도 및 시·군·구 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 재정 지원 등 지역단위 삶의 질 정책 추진체계가 실제 구축·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 지자체에서 책임 있게 삶의 질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조직이 부재하며, 지자체 삶의 질 정책은 농정조직 위주로 운영되어 보건·복지·교육·환경·정주여건 등 다양한 삶의 질 이슈의 종합적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통합적 접근이 힘든 실정

-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수준 개선을 위한 정책 수단 부족
 - 제3차 기본계획 동안의 목표 달성이 어려운 항목이 다수 있으며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 수준 부진 항목에 대한 별도의 정책 수단이 부재
 - 지자체 서비스기준 선택항목을 제정하였으나, 지역 전문가에 의한 이행 실태 점검에 그치고 있으며 선택항목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별도 노력은 부족한 실정
 - 서비스기준 관련 시·도별 조례 제정을 위한 계획 및 일정을 수립하였으나(2017), 실제 조례 제정 등으로 이행되지 못함

- 농촌 현장의 삶의 질 정책 실행 주체 부족
 - 현장 자문단, 정책 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하였지만, 지역에서 삶의 질 정책을 실행할 조직·인력이 부족

〈표 3-9〉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추진기반 강화 이행 실적

구분	내 용	실행여부
범부처 협력	분과위원회 신설·운영	3개 분과위원회(보건·복지, 정주생활기반, 교육·문화) 운영
	삶의 질 정책 네트워크 구축	전문지원기관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심층연구 수행 및 평가 시 활용
	영향평가 사전 의무화	전문영향평가 실시 영향평가 운용지침 제정
	특별위원회 신설	미실행
	부처 간 협업 모델 발굴(시범사업 추진)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정책설계 원칙 제시 (지방비 매칭 차등화)	
지역기반 구축	지자체 삶의질 기획단 설치·운영	미실행
	지자체 민관협력 거버넌스 육성	
계획 실행·관리	부처별 시행계획 수립·평가, 환류	재원투자·배분 방향(하위 그룹 예산 감액 등) 미적용
	시·도 및 시·군 계획 수립	형식 상의 계획은 수립, 지자체 차원의 정책추진 미미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현장자문단, 정책모니터링단 구성하였으나, 역할 및 기능 미흡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 (지자체 서비스기준 운영)	지자체 서비스기준(선택항목) 확정 지자체 서비스기준 이행 관련 조례 미제정(조례 제정 계획은 수립)

3. 농어촌 주민 삶의 질 정책 추진 여건 변화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삶의 질 개선 강조

- 5대 국정목표로 ① 국민이 주인인 정부, ② 더불어 잘사는 경제, ③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④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제시
 -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일자리 안전망 강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서민 및 노인·청년·신혼부부 등 맞춤형 사회복지 강화, 보육 및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국민 안전 및 환경을 지키는 안심사회 등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자치분권 추진 및 주민 참여 실질화,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등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목표 과제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복지 농산어촌 조성 및 농어업 소득안전망 확충 등 농어촌 삶의 질 과제를 제시
 -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어촌 교통·의료 인프라 확충, 농지연금 신규상품 도입, 6차산업 고도화, 부존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 농어업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직불제·보험 같은 소득안전망 강화, 각종 수급정책 정비로 농산물 수급불안 해소
 -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청년농민의 영농창업 활성화 지원,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 등 육성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 향상

□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농업·환경·먹거리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

현하고,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하기 위해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을 역점에 두고 농정 추진 전략 수립

- 주요 농정과제로는 ①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②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강화, ③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④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
 -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직불제 확대, 농가경영안전장치 강화, 농산물 가격안정과 유통 혁신
 -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강화: 농식품 혁신성장 역량강화,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육성
 -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안심 먹거리체계 구축, 건강한 식생활 지원, 농축산물 안전·품질 관리 강화
 - 누구나 살고싶은 복지농촌 조성: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구현,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지역 순환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계획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의 비전 하에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정
- 균형발전계획의 3대 전략으로, ① (사람)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② (공간)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③ (산업)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으로 설정
 - (사람)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①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②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③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 (공간)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④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⑤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⑥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 (산업)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으로 설정: ⑦ 혁신도시 시즌2, ⑧ 지역산업 3대 혁신, ⑨ 지역 유희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 균형발전계획의 농정 과제로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부문에서 농어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실천 과제를 제시
 -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 불편없는 농촌 3·6·5 생활권 구축,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다움 회복, 맞춤형 귀농어·귀촌 정착 지원, 청년의 농어촌 정착 지원, 산림자원을 활용한 활력있는 산촌 조성
- 지방 분권 강화에 따라 향후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 가능한 정책 수단이 축소될 전망
 -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을 기준으로 일부 과제가 시·군 또는 시·도 자율편성사업에 해당
 - 지자체 및 다양한 현장 주체들과 협력하는 역량 확보가 앞으로 삶의 질 향상 정책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

□ 시사점

-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취지에 맞춰 농어촌 삶의 질 정책 영역을 적극적으로 발굴, 확대할 필요
 -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책임제, 온종일 돌봄, 아동수당, 기초연금의 5대 복지 정책 및 사회 일자리 확대 등의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추어 농어촌 삶의 질 과제가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선
 -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기반을 갖추는 방안 마련이 필요
 - 문화, 복지, 환경, 경관 등 지역밀착형 생활기반 확충,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통한 사람 투자 등 농어촌 삶의 질 영역의 다방면 확대 및 정책수단 개선 필요

- 농어촌 삶의 질 정책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농식품부 농발계획 등 유관 계획과의 정책 연계를 적극 강화할 필요
 - 농발계획에서 농촌 일자리, 농촌 환경 및 정주여건, 농촌 복지·문화 서비스 전달체계 등 주민 삶의 질 영역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강화되는 추세
 - 농식품부 정책을 포함하여 부처별 정책 간 연계를 통해 농어촌 주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

- 최근 제기되는 지방 소멸 우려와 농촌 공동화 문제에 대응하여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 필요성 부각이 요구되며, 새로운 정책 영역 발굴이 필요
 - 인구 감소와 저성장 기조 하에 국민 삶의 질 제고 및 새로운 생활양식 실현을 위해 농촌 역할이 강화될 필요성 제기(반농반X의 라이프스타일, 워라벨, 자아실현 등)
 - 기존 정책 영역은 노인,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나, 현 정부 들어 청년 일자리, 사회적 경제, 사회적 농업 등 다양한 부문으로 삶의 질 정책 영역 확대

4.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개선 과제

- 삶의 질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실효성 확보 필요
 - 위원장 일정과 안건 부재, 부처 관심 부족 등으로 서면회의 중심으로 개최되어 실질적인 논의와 정책조정 효과 미흡
 -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대면회의 개최 비율을 늘리고, 삶의 질 정책 추진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연중 개최 시기와 시기별 위원회 논의 사항 등을 정례화 할 필요, 예를 들어 상반기 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개선 관련 핵심 과제 논의
 - 삶의 질 위원회 본 위원회를 정책 의제 논의 중심으로 운영, 위원회 개최 시 삶의 질 관련 핵심 의제(의료, 교육, 교통, 문화분야 등)를 상정하여 심층 논의 추진
 - 분과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정책 의제 발굴 기구로 운영

- 농어촌 서비스기준 개편 및 실효성 제고
 - 이행실적 점검이 불가능한 서비스기준 항목(주택 및 경찰순찰), 이미 목표를 달성한 항목(광대역통신망)의 개편 필요
 - 농어촌 서비스기준 미달성 지역 등 삶의 질 여건이 특별히 열악한 낙후 농어촌 지역에 대하여 공공서비스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 사업을 도입
 - 삶의 질 특별회계 도입 등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재원 마련
 - 제3차 기본계획 기간 도입한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이 내실있게 운영 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수단 마련이 필요

○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활성화 필요

- 농어촌 영향평가제도는 농어촌 대상 정책 추진 시 불리한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여 보완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영향을 사전에 해소할 목적에서 도입
- 2011년 도입 후 중앙부처 10개 정책을 대상으로 자체평가 및 전문영향평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실시(2011~2014)하였으나, 관계 부처의 이해 부족, 구체적 운영 지침 부재로 인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음.
 - * '11(방과후학교 운영, 여성 경제활동 확대), '12(평생교육진흥, 응급의료), '13(에너지 복지, 정신보건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주택바우처), '14(장애인복지, 폐기물관리)
- 농어촌 영향평가 지침을 제정·시행하여, 영향평가 평가주체 및 대상, 절차, 환류방안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매년 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관계부처가 삶의 질 위원회(실무·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구체적 계획 수립 및 관리와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환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

○ 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지자체의 삶의 질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정책 과제의 관리 방식 개선

- 지방 분권 강화에 따라 시·도 및 시·군 차원의 삶의 질 향상 정책 목표와 방향 설정, 실행 수단 확보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
- 농촌계획협약과의 연계,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 등 추진 등을 통해 지자체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기반 구축을 지원할 필요
- 핵심적 삶의 질 향상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별도 재원 확보 방안 모색
 - * 프랑스 농촌성협약의 경우도 범부처 위원회 차원의 정책이라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국토교통부 자체적인 재원이 협약 추진의 근간을 이룸

<참고> 프랑스의 농촌성협약 사례

- 국토평등위원회(CGET; DATAR 후신)에 속한 '농촌을 위한 부처공동위원회(CIR)' 주관으로 도입
 - 공공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 농촌의 지역별 다양성 고려, 농촌이 지닌 기회와 잠재력 활용 등이 목적
- 세 차례 위원회('15~'16년 개최)를 통해 도출한 104개 정책수단을 패키지 지원
 - 6개 범주의 정책 수단: ① 서비스 및 치료·돌봄 접근, ② 중심지(bourgs-centres) 활성화, ③ 지역의 매력, ④ 이동, ⑤ 생태적 전환, ⑥ 사회통합(사회적 연대) 등
- 국가와 지역 공공단체(코뮌, 데파르트망 의회) 등이 계약 과정에 참여
 - 6년 주기 계약(중간점검)으로 지역투자지원기금 활용('17년 216백만 유로 계획)
 - 현재 '국토결속부'(구 '국토정비·농촌·지방공공단체부)에서 농촌계약 관련 업무 주관

- '농촌성(Rurality)'의 관점 하에서 여러 관계 부처 정책이 추진되도록 유인
 - 농촌 현실을 반영한 부처 정책 추진 유도 (다양한 '농촌형' 정책 모델 도입 유도)
 - 공식적 농어촌 영향평가에 한정되지 않는 폭넓은 방식으로 농촌 실태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구축 및 현장 연계 강화
 -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범정부 정책으로 추진 중인 생활SOC 구축과 관련하여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어촌에 적합한 기준 및 사업 모델 발굴 적용

※ 잉글랜드 DEFRA 정책을 지원하는 ACRE (Action with Communities in Rural England) 및 RCCs (Rural Community Council) 네트워크 사례

- RCC는 잉글랜드 전역에 38개 구성되며 각 RCC마다 약 20명 가량의 스태프들이 활동
- ACRE는 카운티 단위 RCC를 연계하는 전국 단위 총괄 기구 역할로 DEFRA와 계약 하에 농촌 커뮤니티 지원 역할 담당 ('14-'15년의 경우 ACRE 네트워크에 연 223만 파운드 DEFRA 사업비 지원)
- 지자체 정책 형성 과정에 RCC가 참여하여 농촌 커뮤니티 문제를 제기
- 지역정책 파트너십 기구인 LEP의 지역경제전략 수립에 참여하는 등 비농업 부문 주체들과 협력 파트너 역할
- 커뮤니티의 Neighborhood Plan 수립 과정 지원, 지역 내 자원조직(volunteer group)을 커뮤니티 단위로 연결하는 역할 등 수행

- 현장과 소통하는 채널 구축과 상시적 협력 방안 마련
 - ‘농촌성’ 관점을 견지한 현장 주체들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 방안 모색
- 제3차 기본계획의 부문 및 하위 정책군 구성 내용 재검토를 통해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중점 부문과 전략 도출
 - 제3차 기본계획: 7대 부문, 27개 정책군, 184개 과제 (46.5조 원 규모 투융자 계획)
 - 주민 수요가 높고 중요도가 큰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2019년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토록 하며, 제4차 기본계획에 반영

〈표 3-10〉 향후 추진할 삶의 질 향상 역점 과제 예시

정책 부문	정책군 내용	역점 과제
보건·복지	의료 서비스 확충	응급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분만취약지역 지정 확대 및 혜택 강화 농어업인 직업질환 대응 전문 진료기관 운영 농어촌 특화형 정신건강보건센터 운영
	취약계층 돌봄·생활복지 지원 확대	영유아 보육 시설 및 인력 확대 취약계층 재가복지 서비스 지원 강화 취약계층 대상 주거·복지 연계형 공동생활홈 조성 농어촌 마을 복지 돌봄이 고충 지원 행복버스 등 찾아가는 생활복지 서비스 제공
교육	농어촌 교육여건 보장	농어촌 다문화 학생 대상 교육 지원 강화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 개선 지원 주민 평생교육 및 노인 문해교육 지원
정주생활기반	정주생활기반 강화	농어촌 교통사각지대 해소 농어촌 마을 주거 환경 개선 주민 난방비 절감 지원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경제활동·일자리	청년 정책과 농어촌 일자리 창출	청년 영농 활동 지원 청년의 농업 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지원 청년의 농어촌 주택 구입·임대 지원
문화·여가	문화·여가 서비스 지원	작은도서관·영화관 등 농촌형 문화·여가시설 찾아가는 문화·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 문화공동체 활동 지원
환경·경관	환경·경관 보전활동 지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및 공익형 직불제도 확대 축산분뇨 처리·재활용과 축산악취 저감 마을·지역단위 폐기물 수거·재활용 체계 구축
안전	재해·범죄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화재 응급 출동 및 즉시 대응 능력 강화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확대 및 순찰 강화 주민 자율 재해·범죄 예방 및 대응 활동 지원

자료 :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리

부 록 I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를 위한 설문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하고, 2015년부터 18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제3차 기본계획 하에서 추진되었던 정부 정책의 추진 성과의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종합평가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종합평가 연구의 일환으로,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주요 정책 부문별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의견을 조사할 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개별기관 및 응답자에 관한 모든 사항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2018년 10월 25일(목)까지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조사문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정도채 연구위원, 정희라 연구원(061-820-2067)

I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5~'19) 평가

※ 다음은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7대 정책 부문과 부문별 목표입니다.

부문	목표	부문	목표
보건·복지	농어촌 보건·복지 서비스 질 제고와 복지 체감도 증진	교육	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어촌 교육 실현
정주생활 기반	공동체 주도의 살기 좋고 편리한 정주기반 및 생활권 구현	경제활동 일자리	농어업·농어촌 자원의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문화·여가	다양한 문화·여가 향유 및 활동참여 여건 조성	환경경관	농어촌다움이 유지·보전되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경관 조성
안전	자연재해 및 범죄·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농어촌 조성		

Q01.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위의 정책 부문 중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 부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보건·복지 ② 교육 ③ 정주생활기반 ④ 경제활동·일자리
⑤ 문화·여가 ⑥ 환경·경관 ⑦ 안전

Q02. 귀하께서 지난 3년('15~'18년)을 돌아보실 때, 위의 정책 부문 중 정부 정책의 성과가 가장 우수한 정책 부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보건·복지 ② 교육 ③ 정주생활기반 ④ 경제활동·일자리
 ⑤ 문화여가 ⑥ 환경·경관 ⑦ 안전

※ 다음은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중 보건·복지 부문의 주요 정책 과제들입니다.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국민연금, 농지연금 가입 지원, 농업인 노후안정 지원 등 · 보건 의료 서비스 확충 및 의료취약지 해소 :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 응급분만 등 의료사각지 해소 등 · 계층별 복지 서비스 강화 : 아동, 청소년, 여성, 다문화 복지지원 확대 등 · 농어촌 복지전달체계 구축 : 읍·면사무소 복지기능 강화, 농·수협 주민 복지서비스 확대 등
----------	--

Q03.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위의 보건·복지 정책 과제 중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② 보건 의료 서비스 확충 및 의료취약지 해소
 ③ 계층별 복지 서비스 강화 ④ 농어촌 복지전달체계 구축

Q04. 귀하께서 지난 3년('15~'18년)을 돌아보실 때, 위의 정책 과제 중 정부 정책의 성과가 가장 우수한 정책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② 보건 의료 서비스 확충 및 의료취약지 해소
 ③ 계층별 복지 서비스 강화 ④ 농어촌 복지전달체계 구축

Q05. 위의 정책 과제 외에 농어촌 보건·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책과제 사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 다음은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중 교육 부문의 주요 정책 과제들입니다.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특성반영 공교육 서비스 확충 : 농어촌 초등학교 지원, 거점 중학교 육성, 통학여건 개선 등 ·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및 주체 육성 : 진로교육 강화,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농어촌 교원 확보 등 · 농어촌학생 교육복지 확대 : 취약가정 학비 지원, 농어촌 출신 학자금 지원 등 · 농어촌 지역과 학교 연계 강화 : 농어촌 평생교육 활성화, 농어촌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복합 공간화 등
----------	---

Q06.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위의 교육 정책 과제 중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농어촌 특성반영 공교육 서비스 확충 ②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및 주체 육성
- ③ 농어촌학생 교육복지 확대 ④ 농어촌 지역과 학교 연계 강화

Q07. 귀하께서 지난 3년('15~'18년)을 돌아보실 때, 위의 정책 과제 중 정부 정책의 성과가 가장 우수한 정책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농어촌 특성반영 공교육 서비스 확충 ②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및 주체 육성
- ③ 농어촌학생 교육복지 확대 ④ 농어촌 지역과 학교 연계 강화

Q08. 위의 정책 과제 외에 농어촌 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 정책이나 지원 사업을 말씀해주십시오.

※ 다음은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중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주요 정책 과제들입니다.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공간 활성화 및 농어촌 생활권 구현 : 농어촌 마을 정비, 읍·면소재지 활성화, 교통 개선(100원택시) 등 · 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 확산 : 깨끗한 마을만들기, 도시민 유치·정착 지원 등 · 농어촌의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 상·하수도, 도로, LPG 저장소, 인터넷망 등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등 · 고령자 및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 : 고령자 맞춤 공동시설 조성,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
----------	--

Q09.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위의 정주생활기반 정책 과제 중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정주공간 활성화 및 농어촌 생활권 구현 ② 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 확산
- ③ 농어촌의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④ 고령자 및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

Q10. 귀하께서 지난 3년('15~'18년)을 돌아보실 때, 위의 정책 과제 중 정부 정책의 성과가 가장 우수한 정책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정주공간 활성화 및 농어촌 생활권 구현 ② 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 확산
- ③ 농어촌의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④ 고령자 및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

Q11. 위의 정책 과제 외에 농어촌 정주생활기반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책 과제 사업을 말씀해주십시오.

※ 다음은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중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주요 정책 과제들입니다.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차산업화 기반 마련 : 지역별 6차산업(제조, 가공, 체험, 관광 등) 육성, 로컬푸드 등 신유통 활성화 · 창업촉진 및 역량 강화 : 6차산업화 창업지원, 농업인 소규모 가공 지원, 등 · 농어촌 관광 체계화·품질제고 : 농어촌 관광상품 개발, 농어촌 관광 서비스 개선 등 · 농어촌 일자리 지원 :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여건 개선 등
----------	---

Q12.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위의 경제활동·일자리 정책 과제 중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6차산업화 기반 마련
- ② 창업 촉진 및 역량 강화
- ③ 농어촌 관광 체계화·품질제고
- ④ 농어촌 일자리 지원

Q13. 귀하께서 지난 3년('15~'18년)을 돌아보실 때, 위의 정책 과제 중 정부 정책의 성과가 가장 우수한 정책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6차산업화 기반 마련
- ② 창업 촉진 및 역량 강화
- ③ 농어촌 관광 체계화·품질제고
- ④ 농어촌 일자리 지원

Q14. 위의 정책 과제 외에 농어촌 경제활동·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 정책이나 지원 사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 다음은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중 문화·여가 부문의 주요 정책 과제들입니다.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 농어촌 공공도서관·작은 도서관·작은 영화관·체육공원 구축, 문화인력 양성 등 · 문화소외지역 지원 강화 : 소외지역 문화프로그램 지원,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제공 등 · 주민의 능동적 문화 참여 확대 : 생활문화센터 조성, 농어촌 주민 생활문화 활동 및 공간 조성 지원 등 · 전통·향토문화의 전승·활용 : 농어촌 전통·향토문화자원 발굴·전승·활용, 전통놀이 복원, 지역축제 활성화 등
----------	--

Q15.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위의 문화·여가 정책 과제 중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 ② 문화소외지역 지원 강화
- ③ 주민의 능동적 문화 참여 확대
- ④ 전통·향토문화의 전승·활용

Q16. 귀하께서 지난 3년('15~'18년)을 돌아보실 때, 위의 정책 과제 중 정부 정책의 성과가 가장 우수한 정책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② 문화소외지역 지원 강화
③ 주민의 능동적 문화 참여 확대 ④ 전통·향토문화의 전승·활용

Q17. 위의 정책 과제 외에 농어촌 문화·여가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책과제 사업을 말씀해주세요.

※ 다음은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중 환경·경관 부문의 주요 정책 과제들입니다.

정책 과제	·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 농어촌 경관보전, 농어업유산 관리, 농어촌 생태우수자원 보전·활용 등 ·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농어촌 폐기물관리체계 개선, 하천·해양환경 개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등 · 지속가능한 농어업생산환경 조성 : 친환경농어업 확산, 대체에너지·바이오에너지 개발, 축산분뇨 자원화 등
----------	--

Q18.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위의 환경·경관 정책 과제 중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 부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②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③ 지속가능한 농어업생산환경 조성

Q19. 귀하께서 지난 3년('15~'18년)을 돌아보실 때, 위의 정책 과제 중 정부 정책의 성과가 가장 우수한 정책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②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③ 지속가능한 농어업생산환경 조성

Q20. 위의 정책 과제 외에 농어촌 환경·경관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 정책이나 지원 사업을 말씀해주세요.

※ 다음은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중 안전 부문의 주요 정책 과제들입니다.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 재해 취약시설 보수,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 등 · 안전한 영농·영어 활동 기반 조성 : 농어업인 재해안전 제도(보험 등) 정착, 농어업재해 보험 확대 등 · 농어촌의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 생활안전 통합관리체계 구축(CCTV 확충 등), 범죄예방 강화 등 · 안전한 보행·교통 환경 조성 : 교통사고에 취약한 농어촌 도로 개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관리 강화 등
----------	--

Q21.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위의 안전 정책 과제 중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자연재해,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② 안전한 영농·영어 활동 기반조성
 ③ 농어촌의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④ 안전한 보행·교통 환경 조성

Q22. 귀하께서 지난 3년('15~'18년)을 돌아보실 때, 위의 정책 과제 중 정부 정책의 성과가 가장 우수한 정책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자연재해,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② 안전한 영농·영어 활동 기반조성
 ③ 농어촌의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④ 안전한 보행·교통 환경 조성

Q23. 위의 정책 과제 외에 농어촌 안전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책과제 사업을 말씀해주십시오.

Q24. 귀하께서는 농촌에서 나타나는 다음의 각 사회변화 모습들이 앞으로 농촌 주민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주요 변화 모습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1점에서 7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농촌을 둘러싼 변화	전혀 영향 없음	←----- 보통 ----->	매우 영향이 큼	점수
①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①	-----④-----	⑦	()점
② 농촌 내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①	-----④-----	⑦	()점
③ 농촌 내 일손이 부족하다.	①	-----④-----	⑦	()점
④ 농촌에서 생활하기 위한 일자리가 부족하다.	①	-----④-----	⑦	()점
⑤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①	-----④-----	⑦	()점
⑥ 농촌 지역에서 생활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①	-----④-----	⑦	()점
⑦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늘고 있다.	①	-----④-----	⑦	()점
⑧ 농촌이 제공하는 환경, 경관, 생태계 기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①	-----④-----	⑦	()점
⑨ 4차산업혁명 등 과학기술 발전이 농촌 생활양식을 변화시킨다.	①	-----④-----	⑦	()점

II 정책 부문별 평가 및 정책 수요

Q25. (보건·복지) 귀하가 사시는 지역(시·군)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보건·복지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1점에서 7점까지 매겨 주십시오.

설문 문항	매우 불만족 <----- 보통 -----> 매우 만족	점수
① 보건소, 병·의원 등 지역 보건·의료 기관의 일반적 보건·의료서비스	① -----④ ----- ⑦	()점
② 응급의료서비스 (119 응급이송,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① -----④ ----- ⑦	()점
③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서비스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직업훈련, 취업·일자리의 상담 및 알선 등)	① -----④ ----- ⑦	()점
④ 노인복지서비스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 노후 주택 수리, 노인일자리 제공, 경로당 지원 등)	① -----④ ----- ⑦	()점
⑤ 여성복지서비스 (여성농업인 지원, 여성문제 상담, 여성단체 지원 등)	① -----④ ----- ⑦	()점
⑥ 영·유아 및 아동복지서비스 (영·유아 양육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불우 아동 후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① -----④ ----- ⑦	()점
⑦ 청소년복지서비스 (장학사업, 학자금지원, 청소년 상담·선도, 청소년 활동 지원 등)	① -----④ ----- ⑦	()점
⑧ 장애인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교통편의 지원, 장애인 보조장비 지원 등)	① -----④ ----- ⑦	()점
⑨ 다문화가족복지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글교육 및 영농정착 지원 등)	① -----④ ----- ⑦	()점
⑩ 농어촌 보건·복지서비스의 종류, 신청자격,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④ ----- ⑦	()점
⑪ 서비스 대상자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방문 검진, 방문 진료, 방문 요양, 방문 상담 등)	① -----④ ----- ⑦	()점
⑫ 지역(시·군)의 전반적인 보건·복지서비스 수준	① -----④ ----- ⑦	()점

Q26. (교육) 다음 표에 제시된 농촌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정도를 1점에서 7점까지 매겨 주십시오.

설문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보통 -----> 전적으로 동의함	점수
① 노인 문해 교육(한글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① -----④ ----- ⑦	() 점
② 학부모, 지역 주민의 교육 참여 활동이 활발하다	① -----④ ----- ⑦	() 점
③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활발한 교육활동이 이뤄진다.	① -----④ ----- ⑦	() 점
④ 귀하가 사시는 지자체는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청과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	① -----④ ----- ⑦	() 점

Q27. (교육) 다음 중 농촌 아이들(초·중·고)에게 가장 시급한 교육 분야는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순서대로 3개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초학력교육(국영수) ② 예체능교육 ③ 기본 인성교육
- ④ 진로교육 ⑤ 직업 교육·훈련 ⑥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
- ⑦ 다문화 교육 ⑧ 기타 ()

Q28. (교육) 다음 중 농촌 성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교육 분야는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순서대로 3개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문해교육 (한글교육 포함) ② 직업교육 (자격증, 취업·창업, 전직)
- ③ 인문교양교육 (외국어, 문학, 경제 등) ④ 컴퓨터 교육 (인터넷 활용 포함)
- ⑤ 문화예술교육 (음악, 미술) ⑥ 스포츠·건강 교육
- ⑦ 시민참여교육 (마을개발, 지도자과정, 자원봉사 교육 등) ⑧ 기타 ()

Q29. (경제 활동·일자리) 다음 표에 제시된 농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하여 그 중요성에 동의하시는 정도를 1점에서 7점까지 매겨 주십시오.

설문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보통 -----> 전적으로 동의함	점수
① 농업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① -----④ ----- ⑦	() 점
② 6차산업(가공, 체험, 농촌 관광 등) 등 지역의 농업, 특화품목과 연계한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① -----④ ----- ⑦	() 점
③ 보건, 요양, 보육 및 기타 사회복지 부문 등 사회적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① -----④ ----- ⑦	() 점
④ 농공단지 조성,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① -----④ ----- ⑦	() 점
⑤ 농촌 노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① -----④ ----- ⑦	() 점
⑥ 청년들이 농촌에 유입될 수 있도록 청년 대상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① -----④ ----- ⑦	() 점
⑦ 다양한 역량을 가진 귀농·귀촌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④ ----- ⑦	() 점

Q30. (문화·여가) 다음 표에 제시된 농촌 지역의 문화·여가 여건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정도를 1점에서 7점까지 매겨 주십시오.

설문 문항	전혀 동의 하지 않음	← 보통 →	전적 으로 동의 함	점수
① 나는 문화여가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간다.	①	-----④-----	⑦	()점
② 나는 문화여가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다.	①	-----④-----	⑦	()점
③ 내가 살고 있는 곳에는 문화여가를 즐길만한 시설이나 장소가 충분하다.	①	-----④-----	⑦	()점
④ 나는 동호회, 동아리 등을 통해 함께 하는 문화여가 활동(생활문화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①	-----④-----	⑦	()점
⑤ 문화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 공동체(동호회, 동아리 등)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이 농촌주민들을 위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④-----	⑦	()점
⑥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문화여가를 즐길 때, 필요시 전문 인력(강사, 기획자 등)의 도움을 받기 수월하다.	①	-----④-----	⑦	()점
⑦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하는 세시풍속이나 일상의례가 잘 전승되고 있다.	①	-----④-----	⑦	()점
⑧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전통문화나 향토문화를 즐길 기회가 충분하다.	①	-----④-----	⑦	()점
⑨ 농촌에서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	①	-----④-----	⑦	()점

Q31. (환경·경관) 귀하가 거주하시는 농촌 지역의 환경·경관 여건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를 1점에서 7점까지 매겨 주십시오.

설문 문항	전혀 동의 하지 않음	← 보통 →	전적 으로 동의 함	점수
① 최근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 혹은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①	-----④-----	⑦	()점
② 농촌주민들이 자연생태 및 환경보호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①	-----④-----	⑦	()점
③ 정부가 우리 지역에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①	-----④-----	⑦	()점
④ 영농폐기물 혹은 농촌생활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어 처리되고 있다.	①	-----④-----	⑦	()점
⑤ 지역 농업활동이 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거나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①	-----④-----	⑦	()점
⑥ 축산 분뇨가 제대로 처리되어 악취 혹은 수질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고 있다.	①	-----④-----	⑦	()점
⑦ 농어업유산과 주변 풍경이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	①	-----④-----	⑦	()점
⑧ 마을경관과 주거환경이 깨끗하게 정비되고 가꾸어지고 있다.	①	-----④-----	⑦	()점

Q32. (환경·경관) 다음 중 향후 10년 동안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환경·경관 정책 분야는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순서대로 3개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 | | |
|----------------------------|-----------------------|
| ①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 대응 | ② 마을도랑 등 생태공간의 복원과 재생 |
| ③ 미세먼지, 화학물질 등의 생활환경 안전 강화 | ④ 먹는 물의 안전한 공급 보장 |
| ⑤ 농업용수의 안전한 공급 | ⑥ 오염된 농경지 등 토양정화 |
| ⑦ 전신주, 첩탑 등 농촌경관 저해요소의 개선 | |

III 응답자 기본사항

Q0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 / 여)

Q02.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19~29세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Q03. 지금 살고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시·도 ()시·군 ()읍·면 ()리(행정리)

Q03-1. 선생님께서는 귀농·귀촌하셨습니다습니까? ()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Q04. 현재의 마을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년)

♣ 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부 록 II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과제 목록
(2015년 기준)

일련 번호	과제 번호	과제명		관련부처
		세부 과제명		
	1	보건·복지(28)		
	1-1	농어업인에 특화된 사회안전망 구축(6)		
1	1-1-1-1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농식품부
2	1-1-1-2	두루누리 사업 활성화		고용부
3	1-1-2-1	농업인 노후안정 농지연금 지원		농식품부
4	1-1-2-2	산지 담보 연금 도입 검토		산림청
5	1-1-2-3	경영이양 고령농업인 소득 지원		농식품부
6	1-1-3-1	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 해소		복지부
	1-2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및 의료취약지 해소(8)		
7	1-2-1-1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		복지부
8	1-2-1-2	공공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복지부
9	1-2-1-4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 시범사업(기간내 추진)		해수부
10	1-2-2-1	①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복지부
11		②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국민안전처
12	1-2-2-2	분만취약지 지원		복지부
13	1-2-4-1	농어촌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확산		복지부
14	1-2-4-2	①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농식품부
15		②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해수부
16	1-2-4-3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		복지부
	1-3	대상그룹별 복지 서비스 강화(10)		
17	1-3-1-1	①취약농가 인력 지원		농식품부
18		②취약어가 인력 지원		해수부
19	1-3-2-1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복지부
20	1-3-2-2	농촌 보육여건 개선		농식품부
21	1-3-2-4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복지부
22	1-3-2-5	농어촌 법인어린이집 지원		복지부
23	1-3-2-6	청소년시설 확충		여가부
24	1-3-3-1	여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여가부

(계속)

일련 번호	과제 번호	과제명	관련부처
		세부 과제명	
25	1-3-3-2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	농식품부
26	1-3-4-1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	여가부
27	1-3-4-2	다문화가족 농업교육	농식품부
	1-4	농어촌 복지전달체계 구축(4)	
28	1-4-2-1	농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복지부
29	1-4-2-2	행복모음센터 등 농수협 복지서비스 강화	농식품부
30	1-4-3-1	사회서비스형 농촌공동체회사 육성	농식품부
31	1-4-3-2	농촌건강장수마을	농진청
	2	교육여건(19)	
	2-1	농어촌 특성 반영 공교육 서비스 확충(5)	
32	2-1-1-1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교육부
33	2-1-2-1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교육부
34	2-1-3-1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	교육부
35	2-1-4-1	농어촌 학교 통학여건 개선	교육부
	2-2	농어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학교 활성화 주제 육성(4)	
36	2-2-1-1	농어촌교육지원 체계화	교육부
37	2-2-1-2	우수 영어 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육부
38	2-2-2-1	농어촌학교 진로교육 강화	교육부
39	2-2-3-1	농어촌학교 활성화 주제 육성	교육부
	2-3	농어촌 학생 복지 확대(4)	
40	2-3-1-2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지원	교육부
41	2-3-2-1	지역균형선발제 확대 유도	교육부
42	2-3-2-2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농식품부
43	2-3-2-3	농어촌 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농식품부
	2-4	농어촌 지역과 학교의 연계 강화(3)	
44	2-4-1-1	교육공동체 발굴·지원	농식품부
45	2-4-1-2	교육청 평가 개선	교육부
46	2-4-2-1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교육부
	3	생활권 기반 구축(27)	
	3-1	정주공간 활성화 및 농어촌 생활권 구현(8)	
47	3-1-1-1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마을정비	농식품부
48	3-1-1-2	농어촌주택 정비 지원	농식품부
49	3-1-1-3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국토부
50	3-1-2-1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농식품부
51	3-1-2-2	교통서비스 강화	국토부

(계속)

일련 번호	과제 번호	과제명	관련부처
		세부 과제명	
52	3-1-2-3	내항여객선운임보조	해수부
53	3-1-2-4	국고여객선 건조	해수부
54	3-1-3-1	생활권 연계협력 확대	농식품부
	3-2	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 확산(6)	
55	3-2-1-1	주민주도 지역개발 지원	농식품부
56	3-2-1-2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농식품부
57	3-2-1-3	농어촌마을 유형별·역량단계별 개발	농식품부
58	3-2-2-1	①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농식품부
59		②귀어·귀촌 활성화 지원	해수부
60		③귀산촌 활성화 지원	산림청
61	3-2-2-2	산촌주민역량강화사업	산림청
62	3-2-2-3	어촌공동체 경영 활성화	해수부
	3-3	농어촌의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7)	
63	3-3-1-1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환경부
64	3-3-1-2	수도 미보급 농어촌지역 공용관정 개발	환경부
65	3-3-1-3	농어촌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환경부
66	3-3-1-4	지자체 기초인프라의 계획적 정비 지원	농식품부
67	3-3-2-1	도시가스 및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산업부
68	3-3-2-2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활성화	미래부
69	3-3-2-3	ICT 기반 행복한 농촌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농식품부
	3-4	농어촌 고령자 등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4)	
70	3-4-1-1	고령자맞춤형 공동시설 조성	농식품부
71	3-4-2-1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추진	농식품부
72	3-4-2-2	농어촌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환경부
73	3-4-2-3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국토부
	4	경제활동·일자리(36)	
	4-1	향토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기반 마련(12)	
74	4-1-1-1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	농식품부
75	4-1-1-2	6차산업 모델 정착	농진청
76	4-1-1-3	어촌 6차산업화 지원	해수부
77	4-1-1-4	농업인의 제조·가공활동 규제완화	농식품부
78	4-1-1-5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운영	중기청
79	4-1-2-1	6차산업화 지구 조성	농식품부
80	4-1-2-2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	농식품부
81	4-1-2-3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해수부

(계속)

일련 번호	과제 번호	과제명	관련부처
		세부 과제명	
82	4-1-3-1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해수부
83	4-1-3-2	수산물 전자직거래 활성화	해수부
84	4-1-3-3	로컬푸드 확산	농식품부
85	4-1-3-4	수산정보이용 활성화	해수부
	4-2	농어업인 창업 촉진 및 사업화 지원 강화(5)	
86	4-2-1-1	6차산업화 창업지원	농식품부
87	4-2-1-2	소규모 농업인 창업 및 소득화 지원	농진청
88	4-2-1-3	산림분야 6차산업 육성	산림청
89	4-2-2-1	6차산업 경영체의 맞춤형 지원 강화	농식품부
90	4-2-2-2	농촌 전통지식 발굴 및 활용 지원	농진청
	4-3	농어촌 관광 체계화 및 품질제고(13)	
91	4-3-1-1	농어촌 관광 품질 제고	농진청
92	4-3-1-2	관광두레 조성	문체부
93	4-3-2-1	농촌관광 품질 제고	농식품부
94	4-3-2-2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농식품부
95	4-3-2-3	어촌관광 활성화(어업문화유산 포함)	해수부
96	4-3-3-1	산림휴양·치유공간 조성	산림청
97	4-3-3-2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	산림청
98	4-3-3-3	말산업 육성 지원	농식품부
99	4-3-3-4	음식관광 활성화 지원	농식품부
100	4-3-3-5	슬로시티 녹색관광 자원화	문체부
101	4-3-3-6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농진청
102	4-3-3-7	농촌유학 활성화	농식품부
103	4-3-3-8	①농촌 체험휴양 기반 확충	농식품부
104		②농어가-마을-거점 농어촌 체험휴양 기반 확충	해수부
	4-4	농어촌 일자리 지원(6)	
105	4-4-1-1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	농식품부
106	4-4-1-2	외국인근로자 근무처 추가제도 활성화	고용부
107	4-4-1-3	쿼터확대 및 외국인근로자 처우 개선	고용부
108	4-4-2-1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지정·운영	여기부
109	4-4-2-2	농어촌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고용부
110	4-4-3-1	들녘경영체	농식품부
	5	문화·여가(20)	
	5-1	문화·여가 인프라 및 인적 기반 구축(10)	
111	5-1-1-1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문체부

(계속)

일련 번호	과제 번호	과제명	관련부처
		세부 과제명	
112	5-1-1-2	농어촌 작은 도서관 조성	문체부
113	5-1-1-3	농어촌 작은 영화관 조성	문체부
114	5-1-1-4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	문체부
115	5-1-1-5	지역문화지수	문체부
116	5-1-2-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문체부
117	5-1-2-2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문체부
118	5-1-2-3	문화 이모작	문체부
119	5-1-2-4	지역문화 컨설팅 기반 구축	문체부
120	5-1-2-5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문체부
	5-2	생활 속 문화참여 확대(3)	
121	5-2-1	생활문화센터 조성	문체부
122	5-2-2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문체부
123	5-2-3	문화도시 문화마을 조성	문체부
	5-3	소외지역 문화·여가 지원 강화(5)	
124	5-3-1	문화누리카드로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제공	문체부
125	5-3-2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문체부
126	5-3-3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문체부
127	5-3-4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	문체부
128	5-3-5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체부
	5-4	전통·향토문화의 전승·활용(2)	
129	5-4-1	전통문화자원 복원 확산	문체부
130	5-4-2	문화관광 축제 지원	문체부
	6	환경·경관(27)	
	6-1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7)	
131	6-1-1-1	주민 자율적 경관보전활동 확대	농식품부
132	6-1-1-2	경관보전직불제 개선	농식품부
133	6-1-1-3	①조건불리지역 활성화를 위한 직불금 지원	농식품부
134		②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해수부
135	6-1-2-1	농업유산 지정·관리	농식품부
136	6-1-2-2	농촌경관 및 공간계획 기반기술 구축	농진청
137	6-1-2-3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	산림청
138	6-1-2-4	농어촌 생태관광 활성화	환경부
	6-2	농어촌 주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7)	
139	6-2-1-1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환경부
140	6-2-1-2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	환경부

(계속)

일련 번호	과제 번호	과제명	관련부처
		세부 과제명	
141	6-2-1-3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포함) (자원재활용)	환경부
142	6-2-2-1	주민참여형 마을 도랑 살리기	환경부
143	6-2-2-2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환경부
144	6-2-2-3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해수부
145	6-2-3-1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환경부
	6-3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환경 조성(13)	
146	6-3-1-1	유기질비료 공급으로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농식품부
147	6-3-1-2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농식품부
148	6-3-1-3	친환경 어구보급	해수부
149	6-3-1-4	해양폐기물 정화	해수부
150	6-3-1-5	위생관리형 어항 조성	해수부
151	6-3-1-6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해수부
152	6-3-2-1	농업에너지절감을 위한 대체에너지 보급	농식품부
153	6-3-2-2	친환경에너지 보급	해수부
154	6-3-2-3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	농식품부
155	6-3-2-4	목재펠릿 사용 확대	산림청
156	6-3-2-5	①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로 친환경 에너지 다변화	농식품부
157		②해조류바이오매스 통합활용기반구축	해수부
158	6-3-3-1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	환경부
159	6-3-3-2	축산분뇨 처리 지원 및 관리 체계화	농식품부
	7	안전(27)	
	7-1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8)	
160	7-1-1-1	수리시설 안전관리	농식품부
161	7-1-1-2	소하천 정비	국민안전처
162	7-1-1-3	어항시설 보강	해수부
163	7-1-1-4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대책	농식품부
164	7-1-2-1	산악기상관측망 구축	산림청
165	7-1-2-2	산불예방방지대책(산불대응력 강화 및 진화자원 확충 포함)	산림청
166	7-1-2-3	산림보호지원	산림청
167	7-1-2-4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강화	산림청
	7-2	재해에 안전한 영농활동 기반 조성(10)	
168	7-2-1-1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기계 안전표시 등 부착지원 사업 포함)	농식품부
169	7-2-1-2	농업인 업무상재해 보장 및 예방 관리기반 조성	농진청
170	7-2-1-3	수산인 안전공제(어업인안전보험) 지원	해수부
171	7-2-1-4	어선원 및 어선보험 지원	해수부

(계속)

일련 번호	과제 번호	과제명	관련부처
		세부 과제명	
172	7-2-2-1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농식품부
173	7-2-2-2	어업재해보험	해수부
174	7-2-3-1	어작업자 건강위해요소 측정 및 어업인 질환현황 조사	해수부
175	7-2-3-2	농업인 업무상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농진청
176	7-2-3-3	농작업안전관리시범 및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농진청
177	7-2-3-4	농작업 안전기술 개발 및 정보화	농진청
	7-3	생활안전 사각 지대 해소(4)	
178	7-3-1-1	지능형 CCTV 및 CCTV 통합관제센터 확대 구축	행자부
179	7-3-1-2	생활안전지도 구축 및 공개	국민안전처
180	7-3-3-1	농어촌지역 범죄예방활동 강화	경찰청
181	7-3-3-2	농어촌 폭력 예방교육 인프라 강화	여가부
	7-4	안전한 보행·교통 환경 조성(4)	
182	7-4-1-1	위험도로 구조개선	행자부
183	7-4-2-1	교통안전활동(생활도로(마을진입로 등) 구간 확대 포함)	경찰청
184	7-4-2-2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해수부
185	7-4-2-3	농기계 교통안전 사고예방	농진청

참고문헌

- 김광선·정도채·민경찬·유은영. 2016.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018. “삶의 질 3차 기본계획 7대 부문별 성과지표.”
- 관계부처 합동. 2014. 『2015-2019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201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17년 추진실적 및 '18년 시행계획』. 농림축산식품부.
- 송미령·채종현. 2012.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심재현·정도채·유은영. 2015.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심재현·엄진영·민경찬. 2017. 『농촌마을 과소화에 대응한 지역개발사업 유형개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엄진영·유은영·류재현. 2015. 『2015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은영·박지숙. 2017. 『2017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도채·민경찬·박지숙. 2017.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도채·심재현·유은영. 2016. 『2016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201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20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20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지역평가 보고서(보건·복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20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지역평가 보고서(교육)』.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20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지역평가 보고서(정주생활기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20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지역평가 보고서(경제활동·일자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20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지역평가 보고서(문화·여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20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지역평가 보고서(환경·경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20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지역평가 보고서(안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2016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농촌주민과 도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